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6, No.2, 2014

6집 2호 · 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논문

- 김천식 ■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 3
- 김병로 ■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 39
- 남기정 ■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
 베평련과 전공투를 중심으로 66
- 쑨 거 ■ 리얼리즘의 유도피야:
 가와미츠 신이치의 「류큐공화사회 헌법C사(시)안」 읽기 104
- 이찬수 ■ 식탁에서 평화까지:
 식맹(食盲)을 넘어 식안(食眼)을 열다 137

서평

- 김태우 ■ 일본 평화사학자의 북한에 관한 내재적 이해 166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

김천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탈냉전기에 국내의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한국 통일정책의 특징을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당시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시대상황에서 학생운동권은 권위주의 체제에 의하여 억압되어왔던 통일논의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통일논의는 해방 후 좌절되었던 한국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의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정국을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했다. 노태우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7·7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남북한 간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개방했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립했는데, 이러한 통일정책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주의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파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통일문제를 남북한 두 국가체제 간의 문제로 보고 남북한에 현존하는 국가체제를 전제로 하는 남북연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과는 당국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체제 존중에 합의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던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급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이 출몰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남북교류 참여를 법적으로 개방하고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노태우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썼다.

보장하되 이를 정부 주도하에 이끌고 나가고자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제도권 야당이 동의함으로써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비제도권까지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가중심주의의 성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이것이 통일정책의 제도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제어: 통일논의, 한국민족주의, 7·7선언, 민족공동체, 남북교류협력법, 국가중심주의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1980년대 말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 시기에 형성되었던 한국의 통일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에 대해 그러한 입장이 정책화되는 ‘국내정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 한국의 통일정책은 국제적 탈냉전과 국내 민주화라는 정세의 대전환기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민족공동체론과 국가연합(two states solution)을 중심 개념으로 하는 한국의 통일정책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사유하여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그 형성되는 배경과 결정과정이 있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통일정책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높은 긴장관계 속에서 매우 치열한 논의와 복잡한 정치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980년대 말 학생운동권은 국제적 탈냉전기에 권위주의 체제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이전에는 금지되어 왔던 통일논의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고, 이를 정치 이슈화 하는데 성공했다.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운동과

정에서 형성되었던 한국 민족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민족의 통일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형성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제하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민족은 국가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상황을 겪으며 국가정체성을 대신 하는 민족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나의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며, 그 새로운 민족국가는 자주적인 국가, 국민주권 국가,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체 국가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과 복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정치적 결의와 활동을 계속했다.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 운동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하나의 새로운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해 좌절되었으며, 이렇게 미완된 민족주의를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완결하고자 하는 결의가 통일운동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¹⁾

분단 이후 통일국가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집착하는 통일운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 두 개의 국가체제에 대해 정통성을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국가체제를 뛰어넘어 통일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고 1980년대 말 학생운동권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즈음의 객관적인 상황은 한반도에 강고한 두 개의 국가체제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가체제를 도외시 하고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1) 민족주의에 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형성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 유지, 확대하기 위한 민족의 정신상태, 정책원리, 활동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참조. 민족 개념에 관한 서구적 관점과 사회주의 국가의 관점 및 남북한의 민족개념 인식에 대해서는 김천식, “남북한의 민족개념 분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6~34.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객관적인 상황과 학생운동권의 주관적 인식에는 심각한 불일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은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관념적이라든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치권은 급진적인 통일운동이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인식했다. 노태우 정부는 정부출범 초기에 이와 같이 급진적이고 강력한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에 직면하였다. 노태우 정부로서는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일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국내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접근을 강구해야 했고,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이었던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급진적 통일운동에 대하여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와는 달리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의 제약에 대처해야 했다.

노태우 정부는 통일문제를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두 국가체제 간 문제로 보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통일정책의 책임을 지며 정부의 관리하에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다루며, 민간의 참여도 정부창구를 통해서 또는 정부의 승인과 관리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를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라고 정의한다.²⁾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민간의 통일운동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와 상충이 있었으며 이러한 두 개의 입장과 관련하여 제도권과 비제도권, 제도권 내에서는 여권과 야권, 여권 내부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여 수습해 나갈 것인지 많은 의견대립과 긴장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치열한 논의와 정치과정에서 제 정파가 어떤 경우에는 합의하고, 혹은 일방의 제안에 동의하고, 혹은 일방의 의견을 묵인·수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한국의 통일정책이 형성되었다. 그

2) 원래 ‘국가중심주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 이론으로서 국가를 국제정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힘의 역할 관계를 우선시하며 국가의 개입과 주도적 입장을 옹호한다.

당시 이렇게 활발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형성된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과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통일정책을 분석해 보면 민족주의적 성격과 국가중심주의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론이나 남북교류의 개방,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론, 남북한의 특수관계론 등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대표하는 정책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체제 인정과 남북연합론, 정부창구를 통한 교류추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당국 간 회담체제 구축 등은 국가중심주의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냉전시기의 남북한 관계는 국제체제 변수가 압도적이었다. 남북한 간의 첨예한 대결은 어느 정도 내부에서 생성된 요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냉전구조 자체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국내 질서까지도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었다.³⁾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반도 문제와 통일정책을 분석하는 경우 국제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제 요인 외에는 남북한 상호작용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이 논문은 탈냉전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에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의 여러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제 정파 간의 어떠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통일정책의 성격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국가중심주의가 어떻게 재정의되었으며 제도화됐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한국의 통일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장달중, “냉전체제와 남북한의 국가발전”, 장달중 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3~32.

II. 1987년 민주화와 통일논의 개방

한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한반도에 하나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중국에서 해방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9월 3일 임시정부 당면정책 14개 항을 발표하여 과도정부 수립 시까지 국내의 질서유지와 대외관계를 담당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민주당 발기인들은 1945년 9월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절대로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⁴⁾ 그러나 임시정부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 남북한을 각각 차례로 점령한 소련의 제25군(사령관: 이반 치스치아코프 대장)과 미국의 제24군단(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군정을 실시하거나 간접 통치하면서 임시정부의 과도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은 결과적으로 해방 후 정치공간에서 한민족의 독립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국제 냉전체제의 영향을 강화시켰다. 이는 한민족에게 체제 선택의 문제로 다가섰고, 이러한 외부의 새로운 충격 앞에 한민족은 분열하면서 두 개의 국가체제 수립과정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한 정치세력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현실에서는 1948년 두 개의 국가가 세워졌고 한민족은 정치적으로 분단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나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한국민족주의운동은 좌절됐던 것이다. 좌절된 한국민족주의 운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 두 개의 국가체제에 대하여 완전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했

4) 김수용, “해방공간에서의 제헌법초안들의 수용과 배척,” 『대한민국 헌정사의 쟁점과 전망』, 한국헌법학회 제82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4년 6월 27일), p.5.

다.⁵⁾ 그러나 이러한 한국 민족주의의 열망은 6·25사변으로 인해 입지가 더욱 축소되었으며 국제 냉전시기에는 현실 정치에서 표출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일당독재와 수령 영도체제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면면히 이어졌으나 통일논의가 억압되어 왔다. 그러다가 국제냉전 종식과 국내의 민주화를 계기로 대학생들에 의하여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최고위원은 ‘국민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 즉,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6·29선언 이후 여야의 제도 정치권은 상호 합의로 국민의 요구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해서 1988년 2월에 평화적으로 정부이양이 실현됐다.⁶⁾ 6·29선언은 국민들의 요구와 거대한 압박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층이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 당시 집권층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호헌 내지 내각제 개헌을 고집할 경우 국민적 저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강압할 경우 유혈사태나 민중혁명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집권층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⁷⁾ 6·29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집권층이 국민의 저항을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점과 정치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되었다고 할

5) 해방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제 1장 참조.

6)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1권 (서울: 공보처, 1992), p.36. 6·29선언에는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 평화적 정부 이양 ②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한 대통령 선거법 개정 ③ 김대중 씨 사면·복권, 시국사범 석방 ④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⑤ 언론의 자율성 보장, ⑥ 지방자치제, 교육자치제 실현 및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 활동 보장 ⑧ 사회 정화 조치 강구 등 8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7)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1권, p.46.

수 있다. 당시 한국의 발전 단계에서 민주화는 역사의 필연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는 확고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⁸⁾ 이러한 국내질서의 변화는 통일문제에서도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냉전시기에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통일논의가 억압됐었고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일부 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분단을 막고 민족자결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해보고자 노력한 바 있다.⁹⁾ 당시로서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나 기관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다만, 분단의 위기 앞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민족을 대표하여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뜻을 모으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일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갖게 됐다. 그 동안 남한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또는 남북한 간 참여한 대립의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 우선이었던 이유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안보 우선의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정부 외의 통일론을 불온시하였고, 북한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하는 통일논의는 그 자체가 일종의 금기(禁忌)였다.¹⁰⁾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1957년 제1공화국 시기에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평화통일안이다. 조봉암

-
- 8) 이후 민주화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야 합의 개헌, 진정한 의회정치, 사법권 혁신과 인권신장, 국민합의 창출, 자치와 자율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1권, pp.42~47.
- 9) 김구, “남북동포에게 보내는 전문”(1949년 4월 21일) 참조. 이 자료는 국토통일원, 『통일문제 관련 자료집』(서울: 국토통일원, 1987), p.117.
- 10) 통일논의의 금압,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은 무력통일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총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했다.¹¹⁾ 당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용공시하였고, 이로 인해 진보당은 불법화됐으며 조봉암은 처형되었다. 둘째, 4·19혁명 이후 혁신계 정당을 중심으로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자주적 통일론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제2공화국 정부가 기본 입장으로 정한 ‘선건설, 후통일론’, ‘유엔 참관하의 남북한 총선거’와 상치되는 것이었다.¹²⁾ 이러한 주장은 5·16 이후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한다는 강력한 반공정책에 따라 금압(禁壓)됐다. 셋째는 황용주 필화사건이다. 1964년 한국문화방송 사장이었던 황용주는 불가침 협정과 군비 축소를 주장하는 글을 『세대』지에 썼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¹³⁾ 넷째는 유성환의 ‘통일국시’ 주장 사건이다. 1986년 10월 13일 제131회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유성환 의원은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¹⁴⁾ 이상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실체는 부정되었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용공시 되었으며 법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일논의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또한 상황 면에서도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국내 정세에서 통일논의는 반독재 운동에 우선권을 두게 됐다.¹⁵⁾

그러나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통일논의

11) 국토통일원, 『통일문제 관련 자료집』, pp.201~215.

12) 김학준,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양호민 외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서울: 형성사, 1984), pp.306~343.

13) 이봉철, “국내통일논의 수렴방안,” 『국방논집』 제18호(한국국방연구원, 1992), pp.32~33.

14) 『동아일보』, 1986년 10월 14일, 1면; 『경향신문』, 1986년 10월 17일, 1면.

15) 이봉철, “국내통일논의 수렴방안,” p.34.

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주요 후보자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주장했다.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는 젊은이들의 이상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원리를 뒤엎는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급진적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⁶⁾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통일논의를 국민적 차원에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통일운동은 민주적 방식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¹⁷⁾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통일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김대중 후보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연방제’,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론’ 등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¹⁹⁾ 한편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국력의 우위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하에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²⁰⁾ 이상과 같이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제도권 정당들은 비정부 차원의 통일논의 확대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제도권 정당들의 통일논의 개방에 관한 의견은 대체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이기는 했으나 민주화 이후에 통일논의가 확대·개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6월 2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통일논의의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즉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이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16)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I(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8~11.

17) 위의 책, pp.11~12.

18) 『동아일보』, 1987년 10월 26일.

19) “평화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통일관련 발언”,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I, pp.35~50.

20) 『동아일보』, 1987년 10월 30일.

했다. 다만, 대북제외와 접촉의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한다는 공식입장을 정부 대변인인 정한모 문화공보부장관이 발표했다.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6·29선언’과 제6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밝힌 민주화 추진 기본방침에 따라 앞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건전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나 공산권 관계 자료의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²¹⁾

당시 학생운동권이 6·10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면서 통일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을 내고 가두시위를 통해 이를 부각시키자,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위기의식을 우려하는 흐름이 생겼다.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1988년 6월 1일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정의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좌경급진 세력들은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와 감군, 군비 감축 주장을 그대로 따라 무분별한 통일론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대책을 취하도록 촉구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언론들은 남북대학생 교류를 추진하는 동향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²³⁾ 대학생들 내부에서도 학생운동 세력이 추진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²⁴⁾ 그러나 노태우

21) 통일원, 『통일백서』(서울: 통일원, 1990), p.44; 『동아일보』, 1988년 6월 2일.

22)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2일.

23) 남북학생회담 추진에 관한 언론들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우리내부의 국론 분열에 이용된다,” 『경향신문』, 1988년 5월 26일; “남북학생회담 안 된다,” 『조선일보』, 1988년 6월 4일; “남북대학생회담 뒷에 걸리지 말라,” 『한국일보』, 1988년 6월 5일; “북한은 뒷을 놓고 기다린다,” 『서울신문』, 1989년 6월 7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경향신문』, 1988년 6월 7일. 다만, 당시 신생 언론이었던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의식의 분단을 극복하자”고 주장하면서 대학생들에게 판문점을 봉쇄하지 말고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도록 주문하고 있다. 1988년 6월 8일.

24) 남북대학생 교류제의 이후 이에 대해 서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비현실적이다(47.7%)’가 ‘획기적이다(39.7%)’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50년사: 1946-1996』 상 (서울: 서

정부는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었던 민주화 조치의 틀 속에서 통일논의를 개방했으며, 이는 이제까지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엄격히 제한해 왔던 점에 비추어볼 때 엄청난 변화로 평가되었다.²⁵⁾ 이흥구 국토통일원 장관은 통일논의를 개방한 취지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일논의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통일논의를 개방한다는 것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에 따라 통일논의를 개방한 것이다. 또한 통일정책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통일정책도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²⁶⁾ 이와 같이 통일논의 개방은 민주화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한편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하면서도 무분별하거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통일논의는 안 된다는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었다.

Ⅲ. 통일논의의 확산과 민족주의의 복구

1988년 3월 29일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유세에서 한 후보가 남북대 학생 교류를 제안했다. 즉 남북한 학생이 함께하는 국토순례대행진, 남북대학생 체육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는 40년간의 통일논의 금기를 깬 사건이었다. 이 제의가 나오자 서울시내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즉각 지지

울대학교 출판부, 1996), p.970.

25) 『동아일보』 1988년 6월 2일, 3면.

26) 이흥구,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방외교”(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특강, 1988년 4월 29일), 효당 이흥구 선생 문집간행위원회, 『이흥구 문집』 Ⅲ(서울: 나남, 1996), pp.302-306.

성명을 발표했다. 1987년 민주화의 주도세력이었던 대학생들이 주창한 남북대학생교류 제안은 그 자체로서 반향이 컸으며, 이 제안은 통일논의를 촉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되었다.²⁷⁾ 남북학생교류 제안은 6·10 남북학생회담, 8·15 남북학생회담 제안으로 이어졌다. 통일논의가 개방된 이후 자주교류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통일방안 제시 등으로 급진적인 주장들이 제한 없이 통일논의의 명분으로 확산되었다. 비정부 차원의 통일논의에서 중요한 특징은 통일문제를 현존하는 국가체제를 뛰어넘는 민족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들의 통일논의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대표적인 주장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남북연석회의 주장이다.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전에 북한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던 것이다. 1948년 한반도에는 남북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될 동향이 뚜렷했다.²⁸⁾ 이러한 때에 국토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은 1948년 2월 16일 북한지역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 남북정치지도자회의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한 북한지역 인사들의 답은 없었다. 그러다가 1948년 3월 25일 (북한 측은) 평양방송을 통해 ‘전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4월 14일부터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²⁹⁾ 이 회의는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통일전선 전술로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연석회의 형식의 군중집회식 회의를 개최하여 김일성

27) 『서울대학교 50년사』 상, pp.969~971.

28) 심지연, “분단구조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남북한 관계론』(서울: 한울, 2005);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립』(서울: 돌베개, 2002).

29) 송남현, “4월 남북연석회의의 역사적 진실,” 『북한』 제234호 (북한문제연구소, 1991년 9월), pp.113~117.

을 수령으로 하는 소비에트형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⁰⁾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에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남북 제 정당·단체 연석회의(대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통일논의가 개방되자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연석회의를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다.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은 7·4공동성명의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는 남북의 사회단체들이 남북사회단체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담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주적 남북교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협의·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³¹⁾ 한겨레민주당은 1988년 7월 4일 북한의 제 정당과 남한의 여·야당에 대하여 ‘남북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이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민주당은 이제까지 남북한 당국이 민족통일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석회의로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³²⁾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는 남북 국회 연석회의 개최를 촉구하면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달성하려면 회담 형식은 7천만 겨레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³³⁾ 남북연석회의 주장은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의 정부당국을 배제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외에 어떤 정당이나

30) 송남현, 위의 글, p.119.

31)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남북사회단체회담을 제안한다”(1988년 7월 4일),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Ⅲ, pp.93-94.

32) 한겨레민주당 대표, “남북한제정당연석회의를 제안한다”(1988년 7월 4일),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Ⅲ, pp.95-96.

33)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남북국회연석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촉구한다”(1988년 7월 25일),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Ⅲ, pp.196-197.

단체 또는 개인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지 않고서는 국민을 대표하거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연석회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통일문제가 민족문제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남북한 현존 국가기구의 권능을 부인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남북연석회의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북한은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도 통일문제는 당국이 관장하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이며 정치문제라고 하면서 남북의 모든 정치세력과 전 민족의 총의에 기초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당국 사이에서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독단주의라고 주장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권능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³⁴⁾

둘째, 남북자주교류론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³⁵⁾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상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상호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언어,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술분야 교류와 협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문화·예술·종교·스포츠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하여야 한다.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제교류가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출범 후 가장

34)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시 남한 측은 북한 측이 정치협상회의 방식을 제기하고 남한 측 단체·인사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이것이 체제존중의 합의정신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문제에서 연석회의 방식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통일원, 『남북대화』 제55호 (1991), pp.25~26; 북한이 연석회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남한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고, 북한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심지연, “북한의 통일논의 방식과 연석회의,” 『동북아연구』 제2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34~40.

3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Ⅲ, p.10.

파급효과가 컸던 것은 서울대 학생들이 제안하고 확산시킨 남북학생교류 제의였다. 즉 이들은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형태로 남북학생교류를 제의했으며,³⁶⁾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산하에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남북학생회담을 적극 추진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남북학생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까지 토의하겠다고 함으로써 남북한 간 현안을 학생들이 직접 협의하겠다는 선까지 나간 것이다. 남북학생교류에 대한 관심은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됐고, 24회 올림픽 공동개최 문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문제까지 협의 의제를 확대하여 학생회담에서 다루겠다고 주장했다.³⁷⁾

대학생들의 남북접촉과 교류추진 움직임은 다른 분야 비정부 차원의 대북교류 의지를 일깨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6공화국 정부에서 취한 유연한 입장, 7·7선언 등도 비정부 차원의 대북교류 의지를 고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간 비정부차원에서는 일체의 접촉과 교류가 금지되었던 이전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중대한 변화였다. 1988년 6월 12일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는 공동올림픽 개최, 남북불교의 자주적 교류, 8월 15일 보현사와 조계사 간 공동형식의 법회개최 등을 제안하는 서한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에게 보냈다.³⁸⁾ 민족문학작가회의는(김정한·고은·백낙청 등) 1988년 7월 2일 남북작가회

36)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1988년 3월 29일),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I, pp.167~168.

37) 남북학생교류가 서울대 학생회 차원이 아닌 전국의 대학차원으로 확대되어 추진된 상황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4·5차 ‘북한청년학생에게 보내는 남한 백만청년학도의 공개서한’을 통해 알 수 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서울: 국토통일원, 1989), p.95, p.114, p.165 참조.

38)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pp.117~118.

담 개최를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서울·평양·판문점 등 한반도 내에서 1988년 안에 남북작가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남북 간 작품교류, 모국어와 민족정서의 동질성 보존을 위한 공동작업, 국문학 연구를 위한 현지답사반의 교환, 남북문학인 대회, 인적교류 방안 등을 협의하자는 구상이 제안되었다.³⁹⁾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1988년 8월 1일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에 ‘남북기독교목회자 상호교류’를 제의했다.⁴⁰⁾ 한국장기협회는 1988년 8월 2일 ‘남북한친선장기대회’ 개최를 제의했다.⁴¹⁾ 카톨릭농민회는 1988년 8월 8일 남북한 간 농업기술과 영농시찰단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농민교류’를 제의했다.⁴²⁾ 카톨릭농민회는 이 제의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원칙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정치·군사 대결구조를 화해·평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화해와 교류는 결과적으로 분단고착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단장치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족미술협의회는 1988년 8월 12일 성명을 통해 남북미술교류를 제안했다.⁴³⁾ 즉 민족통일을 위해 남북의 작가와 해외교포작가의 교류를 포함한 범민족 미술대전을 전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노동자의 통일운동선언’이라는 글을 통해 1988년 8월 31일 남북노동자회담을 제안했다.⁴⁴⁾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39) 민족문학작가회의 성명,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창한다,” 위의 책, pp.123~124.

40)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영모 회장), “남북기독교 목회자 상호교류제의,” 위의 책, pp.175~176.

41) 사단법인 한국장기협회 (이일훈 이사장), “남북한 친선장기대회 개최 제의,” 위의 책, pp.177~178.

42) 카톨릭 농민회 성명, “남북농민 교류제의,” 위의 책, pp.183~184.

43) 민족미술협의회 성명, “민족 통일을 향한 남북의 작가와 해외교류작가의 교류를 포함한 범민족미술대전을 제의한다,” 위의 책, p.185.

44) 『한겨레신문』, 1988년 8월 31일.

신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했다. 1989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민간인의 방북은 국민들의 정서에 큰 충격을 주기는 했으나 남북교류를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민간단체들의 이러한 남북교류 움직임은 자주교류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아울러 급진적인 주장을 함께 함으로써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침과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⁴⁵⁾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배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한에 두 개의 국가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서는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었다. 즉, 1988년 즈음 한반도의 현실에서는 강고한 국가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는 한편 국제정세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조건은 분단 당시의 과거 역사에 고착되어 있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민족해방파’는 이러한 과거 이데올로기 상황에 집착했다. 민족해방파는 그러한 기현상에 의존해서 통일운동을 촉발시켰으나 일반 대중은 그러한 통일운동을 시대착오적·관념적이라고 평가했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⁴⁶⁾

4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한반도 평화선언”(1988년 8월 28일),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p.200.

46) 임영일, “학생운동과 통일논의,” 『대학교육』(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88), pp.16~21.

IV.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민족주의의 수용과 국가중심주의 성격의 재규정

노태우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복잡한 환경에서 대학생 등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의 통일논의와 요구에 대응하는 정당한 정책수단이 필요했다.⁴⁷⁾ 노태우 정부는 취약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출범했었던바 통일논의 과정에서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고 이것이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됨으로써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즉,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일문제에 관한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했다.⁴⁸⁾ 노태우 정부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자기제약에서 벗어나서 급진세력이 몰고 오는 공격의 예봉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⁴⁹⁾ 또한 민간 차원에서 제기하는 대북접촉 요구와 방북운동을 관리할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⁵⁰⁾ 한편 일반 여론은 운동권 세력의 급진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언론들도 대부분 비정부 차원의 급진적인 통일논의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창구단일화론은 여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⁵¹⁾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통일논의를 수렴해갔다. 노태우 정

47) 전재성, “북방정책: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세계정치』 제24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02), p.273. 제6공화국 정부는 여소야대라는 국내 정치 방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1월 3당 합당을 추진했다.

48) 김선혁, “노태우시대 한국의 시민사회,”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파주: 나남, 2012), pp.101~102.

49) 진덕규, “정치체제의 갈등과 통합에 관한 이념적 인식: 한반도에서의 통일논의 모색,” 『동아연구』 16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pp.163~164.

50) 전재성,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p.274.

51) 주 23) 참조.

부는 민족자존을 강조했다. 이 시기 대통령과 정부의 엘리트들이 대부분 민족주의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추구했다.⁵²⁾ 정부 인사들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민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통일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조치의 하나로서 통일논의를 개방하여 통일문제의 정부 독점을 포기했다. 통일정책을 정부가 독선적으로 할 수 있던 시대가 지났다고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갖췄다.⁵³⁾ 정부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교의 범위를 넓혀가고 북한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통합해 가고자 했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혁신적인 조치였다. 북한과는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은 노태우 정부가 스스로 강조했던 민족자존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비정부 차원에서 제기됐던 민족주의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 특별선언’ 형식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를 개방하면서 통일정책을 구체화해나가기 시작했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은 노태우 정부 통일·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이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남북한 관계와 북방외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것이다.⁵⁴⁾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한 취지를 북방정책과 새로운 남

52)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 7·7선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유엔연설 기타 중요 연설에서 민족자존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당시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이흥구, 박철언, 김종휘 등도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53) 이흥구,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방외교,” 『이흥구 문집』 III, pp.302~303.

54)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2권 (서울: 공보처, 1992), p.269.

북관계를 전개해 가기 위해서 철학과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려 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주변국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는 뜻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⁵⁵⁾ 7·7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취지는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의 개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⁵⁶⁾ 7·7선언은 6개 항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항은 각계각층의 남북한 간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이다. 제2항은 이산가족들의 교류, 즉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남북한 간에 흩어져 있는 가족공동체를 복원시키자는 정책이다. 제3항은 남북한 간 교역을 개방하고 남북한 간 교역을 민족내부 거래로 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간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이것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었다. 제4항에서 6항까지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협력하여 민족공동체를 지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방국의 대북한 교역을 반대하지 않으며,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이와 같이 7·7선언이 지향하는 정책방향

55)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전환기의 대전략』(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p.144.

56) 7·7선언이 통일정책 선언인지 북방외교 선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견해가 각각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정책이라는 차원에서 7·7선언을 다룬다. 『제6공화국 실록』에서도 7·7선언을 ‘제2편 통일’편에 수록해 놓고 있다.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2, pp.274~286.

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7·7선언을 발표하게 된 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통일운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예기치 못했던 강력한 통일운동에 직면하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세력이 민주화 운동보다도 더욱 격렬하게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⁵⁷⁾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의 대세 속에서 이러한 국내 통일운동에 대처해야 했다. 1988년 5월 6월 대학생들은 가두시위, 판문점 진출 시도 등 통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는데, 정부는 그러한 학생들의 동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7월, 8월까지도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정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고 대북정책을 통해 이러한 위기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 기관회의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이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1988년 7월 7일 특별선언을 발표했다.⁵⁸⁾ 이것으로써 제도권(정부)이 학생운동권과 재야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간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을 수립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⁵⁹⁾ 제5공화국 시기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있었지만, 민족공동체 통일

57) 최준영, “3당 합당: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전개에 분기점,”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p.81 ; 대학생들의 시위 빈도와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8배로 늘어났고, 이념적으로도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고 있었다.

58)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p.27~30 참조. 이흥구 당시 통일원장관에 의하면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했으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흥구 인터뷰 (2013년 8월 7일 14:00~15:00,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실) 참조. 이흥구 장관은 후에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통일부총리,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5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문은 통일원, 『통일백서』(1990), pp.323~330 참조.

방안이 상징성 면에서나 논리성, 체계성 면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중요한 특징은 통일이 단계적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즉 통일은 신뢰구축협력 → 남북연합 →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3단계의 점진적 발전을 통해 실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⁶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공개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성안되었다.⁶¹⁾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흥구 장관은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갔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경험에서 볼 때 민족이 국가에 앞선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에 앞서 민족사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것은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이슈였으나 새로운 개념이었으며, 따라서 과거에 논쟁된 일이 없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채색된 개념이 아니라서 신선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당시 민족주의가 강했던 분위기에서 제도권이나 재야를 막론하고 이 개념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 중간과정으로 내세운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 개념은 일종의 국가연합(two states solution)을 거치자는 것이다.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one state)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거치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다.⁶²⁾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주의를 정책의 토대로 제시함으로써 여와 야,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전체가 합

60)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2권, p.57.

61) 통일원, 『통일백서』(1990), pp.73-74.

62) 이흥구 인터뷰 (2013년 8월 7일). 당시 통일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재야인사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의한 정책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의 성격에 합의했다. 즉 북한은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합의를 통해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는 국제관계나 외교관계로 성립될 수 없으며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고 한 것이다. 또한 남북한 특수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관계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마련된 통일정책은 기본 바탕이 민족주의였으며 민족주의를 구체화 했다. 이렇게 민족주의가 통일정책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민간 차원의 강력한 통일운동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와 제도권의 인사들도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질서가 국내질서까지도 일원적으로 규율했던 동서 냉전대결이 와해됨으로써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때 형성된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통일정책으로서 승계되고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형성되었던 통일정책이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는 다르게 통일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으로 임하였으며 민간의 통일논의를 수렴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갔다. 그러나 비정부 차원에서 제기된 통일논의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를 정하기도 했다. 창구단일화론이 그러한 것이다.⁶³⁾ 창

63)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전환기의 대전략』, pp.360~262; 이흥구, “남북교류의

구단일화론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에서 정부의 국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정책은 남북한에 서로 다른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정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각각 자기측을 대표한다. 국민은 정부 외의 누구에게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이 창구 단일화 방침의 배경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예민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통일문제에 관하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⁶⁴⁾ 통일문제가 민족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와 대의정치적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원주의에 기초하며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지배를 의미하는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독선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⁶⁵⁾ 학생이나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인사·단체들과 접촉하여 남북한 관계나 한반도 현안문제를 다루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서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⁶⁶⁾ 남북연석회의 주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노태우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를 개방했지만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를 설정했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정부는 통일 문제에서 정부가 주도적 지위

필요성과 창구의 일원화,” 『이홍구 문집』 Ⅲ, pp.267~270.

64) 현경대 인터뷰(2013년 8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국회 10인 헌법개정안 기초 소위원회에서 통일 조항은 정당 조항보다도 엄격하게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를 것을 규정했다고 한다.

65) 이홍구, “민주화 시대의 통일정책,” 『이홍구 문집』 Ⅲ, pp.322~323.

66) 위의 글, p.325.

에 있고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가중심주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써 확보해 나갔다.

한국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는 7·7선언에서 창구단일화로 나타났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적인 제도인 남북연합으로 구체화됐다. 남북연합도 창구단일화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에 두 개의 국가 실체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국가 실체를 인정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남북한 당국이 통일 문제를 다루는 주체가 된다. 이는 당시 일부 민간에서 국가체제를 뛰어넘어 통일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연석회의의 방식이나 자주교류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중심주의적 통일방안에 대해 제도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했다. 정부는 통일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했다.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다.⁶⁷⁾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통일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흥구 장관은 여당대표와 세 야당 총재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통일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에는 세 야당 총재들이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⁶⁸⁾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구체화됐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이 처음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였으며, 쌍방이 합의를 통해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67)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정당·사회단체 등의 통일논의: 통일정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 내용』(서울: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1989);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46회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제3호 (1989).

68) 이흥구 인터뷰 (2013년 8월 7일); 1988년 9월 11일 김재순 국회의장은 윤길중,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여야 총재들을 의장실로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이흥구 장관이 최종안을 설명했다. 김재순 의장은 이에 대해 총재들의 찬동여부를 확인했으며, 4당 대표·총재들은 100% 찬동했다.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가 재정의되고 실제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9차 개정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1990년 8월 1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 공포됐다.⁶⁹⁾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간의 인적 접촉과 왕래, 물자교역과 제반 분야에 걸친 협력, 교통통신의 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을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 창설하여 개방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는 통일문제를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했었는데, 이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정부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법치행정의 대상으로 보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은 7·7선언 및 그 이후의 국내정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7·7선언 이후 대학생들과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자주교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한편에서는 급진적 통일논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남북교류와 북방정책의 과속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검토 초기부터 통일 문제·남북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혼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1989년 5월에 열린 법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안은)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북 문제의 민중주의적 해결방식을 배격하고 있다. 남북 문제·통일 문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무정부

⁶⁹⁾ 남북교류협력법의 성안 및 제정과정은 김천식,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적 상황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이다.⁷⁰⁾”라고 강조했다. 남북한 간의 제반 사무를 정부가 관장하고자 하는 국가중심주의적 입장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 자유로운 왕래를 기본으로 하고 교류와 교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간 협상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⁷¹⁾ 그러나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 등 일련의 불법 방북사건과 학생운동권의 과격화 경향으로 인해 여론이 보수화되면서 여야의 제도 정치권은 남북교류가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제반 남북교류를 정부의 관장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에 동의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기조는 1988년과 1989년 당시 재야세력 및 학생운동권이 요구했던 민주주의적 접근과 분명한 선을 그었고, 남북교류협력은 정부 관리하에 추진되었다. 그리고 여·야의 제도권 정치 세력이 이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합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를 더욱 명확히 한 법률적 조치는 노무현 정부 주도하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임명한 자만이 남북한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제정은 제도권 정당들 간의 합의였지만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비제도권도 이 법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여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냉전기 한국의 통일정책 형성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규정과 정부의 법률에 의한

70) 국토통일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공청회 참고자료』(서울: 국토통일원, 1989년 5월), pp.10~11.

71) 김천식,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2014), pp.169~173.

행정행위, 그리고 국민들의 준법절차는 통일 문제에 관한 행위의 규범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 제도와 성격이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정치 과정이었다.

V. 맺음말

1980년대 말 한국의 통일정책은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거쳐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성향이 다른 여러 정치세력들이 통일문제에 관하여 민족주의적 지향성에 합의하였으며, 국가중심주의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이 자리 잡힐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 통일정책은 현재까지도 그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체계화된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탈냉전 체제로 전환되고, 국내에서도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되었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의 대전환기였다. 이 때의 통일논의는 학생운동권이 선도해 나갔다. 밖으로는 냉전체제의 규율이 해체되고 안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던 학생운동권은 민주화 이후의 과제로서 통일운동을 강하게 전개했다.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었던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의 형성과정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권의 통일논의는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급진적인 주장을 제기하여 과격하게 전개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자극하였으며 정치적 위기 요소로 작용했다. 노태우 정부는 정세의 급변에 대처하여 새로운 통일정책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때에 급진적 통일논의

라는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국을 주도하고 민주화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학생들과 재야 운동권의 급진적 통일논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통일논의를 개방하였다. 또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남북한 간의 문호개방과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법률로 보장했다.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탈냉전과 민주화의 시대상황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갈망이 조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분출하였으며, 민족주의 정신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제도권과 비제도권(재야) 등 여러 정파를 아우르고, 제 정파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이 있었다. 정부는 학생과 재야의 민족주의 요구를 정책의 틀로 수용하였고, 능동적으로 민족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통일정책을 통해 민족주의 정신을 구체화함으로써 제 정파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여기에 이들을 묶어 나갔다.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는 한국 통일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가 취한 남북한 간의 문호 개방과 남북교류 허용 등은 기존의 정책에 비해 전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교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7·7선언은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난맥상을 나타냈다. 특히, 재야 인사와 학생운동권 인사들은 자주교류를 주장하며 불법 방북을 강행했고, 국회의원의 밀입북을 비롯해 일련의 불법 방북 등 급진적인 교류 추진 동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과 복잡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계기로 창구단일화를 희망하는 여론이 대두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가 관리하에 통일문제를 주도하고 남북관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남북한에 현존하는 두 개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연합제를 통일방안의 핵심적인 제도로 도입하고, 이러한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중심이 되

어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때에야 비로소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였고 남북한 당국이 남북한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의 성격이 구체화되고 확고하게 작동하게 된 계기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통치행위의 관행을 지양하고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남북교류 참여를 법적으로 개방하고 보장하되 이를 정부의 주도하에 관리하에 이끌어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구상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마침내 여야의 제도권 정당들이 동의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됐으며 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인정되는 등 통일정책에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짐과 함께 모든 남북교류는 정부의 관장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중심주의가 재정의되고 통일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제도화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이후부터는 통일문제의 국가중심주의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비제도권도 이러한 법체계를 수용하고 이에 따라 자기 활동을 함으로써 통일정책의 국가중심주의가 전 국민적으로 규범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접수: 2014년 10월 24일 / 심사 : 2014년 11월 19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4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파주: 나남, 2012.
-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1. 서울: 공보처, 1992.
-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 2. 서울: 공보처, 1992.
- 국토통일원. 『통일문제 관련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국토통일원.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I. II. III.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정당·단체·개별인사 통일논의』. 서울: 국토통일원, 1989.
- 김혜승. 『한국 민족주의: 발생양식과 전개과정』. 서울: 비봉출판사, 1997.
-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89.
- 노태우. 『노태우 회고록, 전환기의 대전략』.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2.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50년사: 1946-1996』 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2.
- 이석규 편. 『‘민’에서 ‘민족’으로』. 서울: 선인, 2006
-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0.
- 효당 이흥구 선생 문집간행위원회. 『이흥구 문집』 III. 서울: 나남, 1996.

국문논문

- 김선혁. “노태우시대 한국의 시민사회.”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파주: 나남, 2012.
- 김수용. “해방공간에서의 제헌법초안들의 수용과 배척.” 『대한민국 헌정사의 쟁점과 전망』. 한국헌법학회 제82회 정기학술대회 (2014년 6월 27일).
- 김천식. “남북한의 민족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천식.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학준.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양호민 외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4. pp.306~343.

- 송남현. “4월 남북연석회의의 역사적 진실.” 『북한』 제234호 (북한문제연구소, 1991년 9월). pp.113~120.
- 심지연. “북한의 통일논의 방식과 연석회의.” 『동북아연구』 제2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25~41.
- 심지연. “분단구조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남북한 관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p.11~38.
- 이봉철. “국내통일논의 수렴방안.” 『국방논집』 제18호 (한국국방연구원, 1992). pp.26~56.
- 임영일. “학생운동과 통일논의.” 『대학교육』.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88.
- 장달중. “냉전체제와 남북한의 국가발전.” 장달중 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3~32.
- 전재성. “북방정책: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세계정치』 24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02). pp.259~279.
- 진덕규. “정치체제의 갈등과 통합에 관한 이념적 인식: 한반도에서의 통일논의 모색.” 『동아연구』 16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pp.161~216.
- 최준영. “3당 합당: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전개에의 분기점.”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파주: 나남, 2012.

신문

- 『경향신문』. 1986년 10월 17일. 1면.
- 『동아일보』. 1986년 10월 14일. 1면.
- 『동아일보』. 1988년 6월 2일. 3면.
- 『한겨레신문』. 1988년 6월 2일.
- 『한겨레신문』. 1988년 8월 31일.
- 『경향신문』 사설. “우리내부의 국론 분열에 이용된다.” 1988년 5월 26일.
- 『경향신문』 사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1988년 6월 7일.
- 『서울신문』 사설. “북한은 덮을 놓고 기다린다.” 1989년 6월 7일.
- 『조선일보』 사설. “남북학생회담 안 된다.” 1988년 6월 4일.
- 『한겨레신문』 사설. “의식의 분단을 극복하자.” 1988년 6월 8일.
- 『한국일보』 사설. “남북대학생회담 덮에 걸리지 말라.” 1988년 6월 5일.

기타

국토통일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공청회 참고자료』. 국토통일원, 1989년 5월.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정당·사회단체 등의 통일논의: 통일정책에 관한 공청회 진술 내용』.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1989.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46회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제3호 (1989).

통일원. 『남북대화』 제55호 (1991).

이흥구 인터뷰 (2013년 8월 7일 14:00~15:00,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실).

현경대 인터뷰 (2013년 8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The Effects of Nationalism and Statism in Korean Unification Policies

Kim, Chun-Sig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which were systematized through the dynamic process of politics between the late 80's and early 90's. Nationalism and Statism were the dominant underpinning philosophies of these policies.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even though the authoritarian regime disallowed such activities, student activist groups successfully promoted unification discourse. Although Korean nationalism had previously failed to impact unification policy after liberation, it provided a backdrop for this unification discourse at this time. Though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began with weak political base, it flexibly and effectively managed the pro-unification movements of students activist groups and civil groups while also dealing with the delicate international situation after the Cold War. The Roh administration allowed civil society to speak out about unification, and went a step further by establishing a policy called the Unification Plan for One National Community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announcing the July 7th declaration. The basic idea of this unification policy was based on the

Korean nationalism. With the nationalistic unification policy, and so enjoyed broad support from diverse groups.

However,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iming to the forma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community caused anxiety because of how radical and illegal it was. To further strengthen the One National Community policy, the Rho administration passe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t gained the support of the opposition party as well as civil society. Thus, Statism became a critical systematic factor in unification policy.

Key words: Unification Discourse, Korean Nationalism, The July 7th Declaration, National Communit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nd Statism

김천식(Kim, Chun-Sig)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특임연구원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남북한의 민족개념 분석”,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6월에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최근 대남인식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남인식은 남한의 존재인식, 대남인지도,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의식이 약화되고 적대적 의식이 강화되었으며, 안보불안이 상승하였다. 대남인지도와 대북지원 인지도 및 대북지원 효용성 등 전반적인 대남인지도는 낮아졌다. 그러나 절대수치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부분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절반 이상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같은 민족과 동포라는 의식이 아직은 더 강하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표본의 편향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대남인식, 통일인식, 남북관계인식, 대북인식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 번호: NRF-2010-361-A000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통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체제를 동경하여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열망함으로써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남한을 통일의 미래대안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력충돌에 대한 위협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남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 및 지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가늠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남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북한에서 산출하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러한 자료들이 증언 자료로 간혹 입수되기는 하지만 포괄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로동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논문, 소설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데일리 NK나 임진강 등의 기관에서 북한 내 정보 원천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통화하며 확보하는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정세분석 자료가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과 같은 권위 있는 북한 연구기관에서는 탈북자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북한실태에 대

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료들은 여러 유익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종합화가 어렵고 비교분석의 근거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고려하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는 북한연구의 과학화와 자료의 종합화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하나원 교육생들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2011년부터 북한의 실상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탈북자, 즉 북한을 탈출한 지 1년~1년 4개월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 의식조사 자료에 대해, 북한체제를 이탈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으로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5년 이상 축적되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신중을 기한다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흐름을 추적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북한거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극히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탈북자를 통한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6월에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최근 대남인식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남인식은 남한의 존재인식, 대남인지도,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남한의 존재인식은 북한주민의 남북관계인식,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핵위협의식을 살펴보고, 대남인지도는 남한에 대한 지식, 남북 간 차이 및 이질성 인식으로 파악하였다.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항목으로는 대북지원 인지도, 대북지원 효용성,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인식 등을 살

펴보았다.

2014년 조사대상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탈북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표본규모는 총 149명이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50명, 여자는 99명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32.2%, 30대 18.8%, 40대 26.2%, 50대 12.8%, 60대 이상 10.1%로 구성되어 있다.¹⁾ 출신지역으로는 양강도가 48.3%로 가장 많고 함경북도 35.6% 등으로 동북 국경지역 거주자가 83.9%로 다수를 차지하며, 교육수준은 고등중학교 졸업자 66.7%, 전문대졸 18.0%, 대졸 13.6%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노동자가 30.6%로 가장 많고 사무원 12.2%, 주부 19.1% 등이며, 당원 13.5%, 비당원 85.8%로 조사대상 탈북자는 대부분 비당원이었다. 최근 조사결과를 지난 시기와 비교하는 자료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를 사용하였다.

II. 남한의 존재 인식

1. 북한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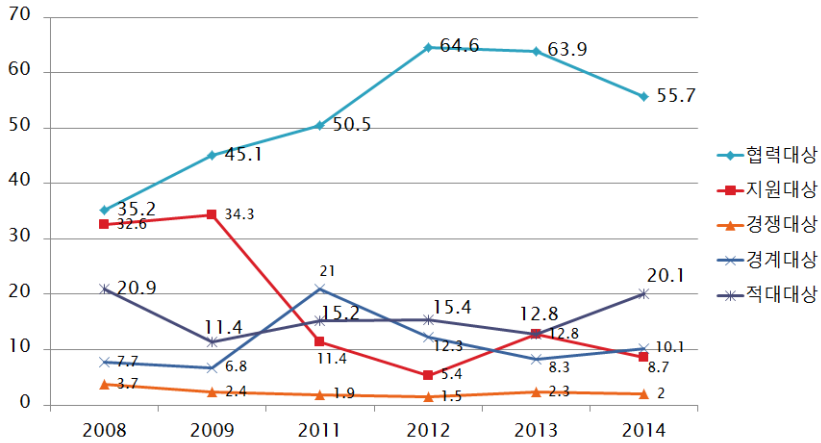
북한주민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선의의 경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북한 사회와 주민의식 변화 학술회의(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4년 8월 27일), pp.9~16 참조.

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작년에 비해 ‘협력대상’이라는 생각이 줄고 ‘적대대상’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9% → 55.7%로 8.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12.8% → 20.1%로 7.3% 포인트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줄고 적대대상 인식이 늘어난 것은 지난 1년 동안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적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 3월 5일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8일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함께 군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반입 차단을 실행에 옮기고 영변의 핵원자로 재가동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B-52와 F-22, 해상 레이더 기지 파견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된 위협적 무기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당국은 2013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포함하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긴장된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남비난을 전개한 북한당국의 선전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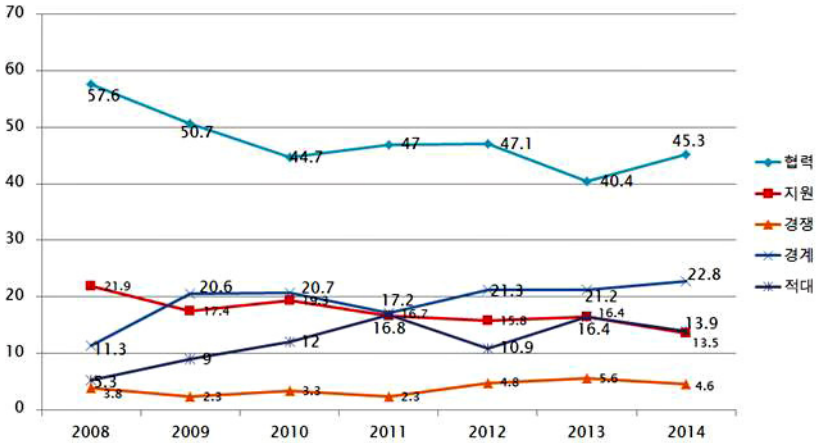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남한을 보는 시각이 이처럼 변화된 데는 재입북 탈북자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재입북한 탈북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탈북과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을 품지 못하도록 적극 시도하였다. 2012년 7월 박정숙 재입북 기자회견에 이어 2013년 1월 김광호씨 부부를 비롯한 다섯 차례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전개되었다. 북한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는 13명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북 탈북자를 통한 북한당국의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해 두려움과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은 남한을 여전히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인식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55.7%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점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협력적 남북관계 인식은 현재의 위태로운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지난 1년 동안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지난 1년 동안 ‘협력대상’ 인식이 40.4% → 45.3%로 증가한 반면, ‘적대대상’ 의식은 16.4% → 13.5%로 감소하였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008~201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협력적 대남인식(55.7%)이 남한주민의 협력적 대북인식(45.3%)보다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 남한보다 상대를 더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

보는 이러한 양상은 지난 수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주민이 느끼는 남한발 안보불안도 남한주민의 북한발 안보불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즉,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한을 덜 위협적이며 덜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더 협력적이며 덜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탈북자 표본에서 비롯된 편향성 탓이라고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2014년 7월 『조선일보』가 친인척 방문 혹은 사업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였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41%,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56%였다.²⁾ 선택문항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는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탈북자들보다 남한을 오히려 더 협력적이며 친근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반면, ‘없다’는 응답이 78%로 남한발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면 탈북자 표본이라고 하여 남한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일보』의 북한주민 표본을 근거로 보면 북한 내의 주민은 남한이 북한을 우려와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남한을 협력과 안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남한의 대북인식이 ‘북한’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대남인식은

2) “중국 내 北주민 100명 심층 인터뷰(上): 對南 인식,” 『프리미엄조선』, 2014년 7월 7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남조선’과 ‘미제’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감정은 오롯이 북한으로 귀결되는 데 반해 북한의 대남의식은 ‘미제’와 ‘남조선’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 ‘남조선’이 아닌 ‘미제’이므로, 정치적으로는 때로 남조선 당국을 비난하지만, 그래도 남조선은 동포와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국에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주민은 미국(71.8%)을 꼽는 반면 남한을 위협적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49.7%)을 제일의 ‘위협국가’로 꼽을 만큼 북한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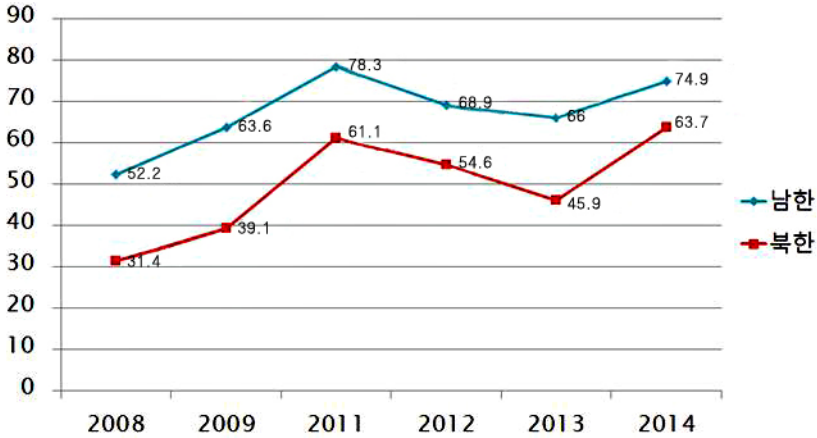
다른 하나의 요인은 한류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한류에 대한 접촉이 85.9%에 달하는 상황에서 남한에 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북한 내 한류의 유입 속도가 76.7%(2011년), 90.0%(2012년)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북한주민 중 85~90%가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접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남한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한주민이 접하는 북한문화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반면, 북한주민은 남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접촉기회도 많아 남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품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남한의 대북인식에 비해 더 협력적이며 호의적인 현상은 탈북자 표본에서 오는 편향성이 아니라 북한주민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주민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32.2%), '약간 있다'(31.5%)를 합하여 63.7%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본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도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31.4%에서 2009년 39.1%로 증가했고 2011년에 61.1%로 급증한 이후 2012년에 54.6%, 2013년에 45.9%로 낮아졌으나, 올해 63.7%로 17.9%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4년 상반기에 북한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바짝 고조시킴으로써 이러한 안보위기가 북한주민에게 안보불안으로 감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은 남한주민의 의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가 무력으로 도발해 올 것이라는 안보불안 의식유형이 남북한 간에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2008년 이후 고조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졌고 2014년에 다시 고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의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도 2008년 이후 52.2%(08년) → 63.6%(09년) → 78.3%(11년)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2013년에는 66.0%까지 완화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고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시 상대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남북한 사이에 비슷한 양상으로 고조되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한에서 동일하게 안보불안 의식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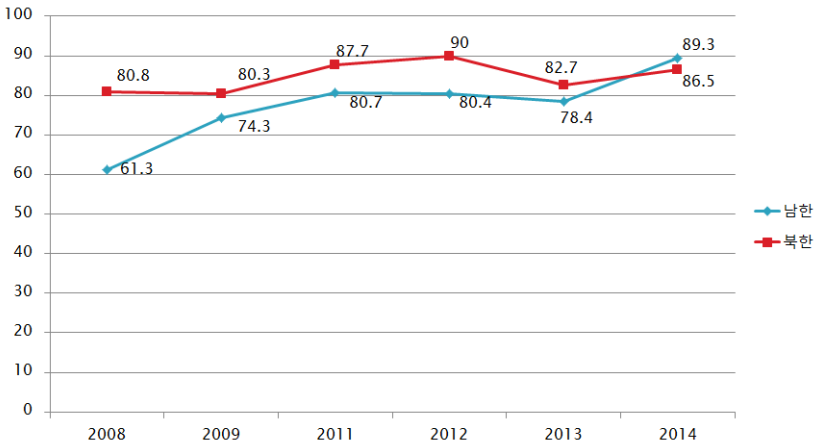
3. 북핵 위협

북한주민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1.1%가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15.4%는 “다소 위협적인 것”이라고 답하여 86.5%가 ‘위협적일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작년의 82.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북한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남 및 대미 방어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위협에 대한 남북주민 간 인식의 차이도 흥미롭다. 2014년을 예외로 하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높게 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주민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

다는 정도가 좀 약하지만 70% 내지 80%의 주민들이 북한에게서 핵위협을 느낀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2014년에는 남한주민의 북핵 위협 의식이 89.3%로 본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90%에 가까운 남한주민이 북한의 핵무기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남한주민의 안보불안 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그림 4〉 북핵 위협 의식 (남북한 비교)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경계심리나 적개심은 높아진 반면, 지원대상 의식이나 협력대상 인식에서는 하락하였다. 남한발 안보불안감도 높아졌으며 북핵위협도 조금 높아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2014년 초 북한이 중대제안 형식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바짝 고조시킨 결과에 기인한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선언을 공식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대미 군사대응을 공세적으로 펴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으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남한주민도 심각한 안보불안에 휩싸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북핵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의 불안이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남한주민이 겪고 있는 안보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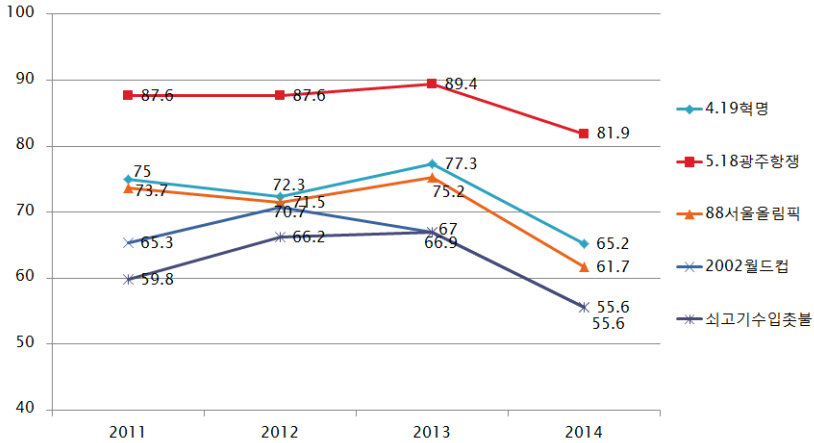
Ⅲ. 대남 인지도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5〉는 2011~2014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시기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은 1980년 ‘5·18광주항쟁’(81.9%)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9혁명’(65.2%)과 88서울올림픽(61.7%), 2002 월드컵(55.6%), 쇄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55.6%) 등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광주항쟁’, ‘5·18정신’ 등의 담론으로 이 사건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³⁾ 4·19혁명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에 관한 소식은 공식 통로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사적 관계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3)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제4집 1호 (2012), pp.125~126.

〈그림 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011~2014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평균은 64.0%였다. 이는 작년의 75.2%보다 11.2% 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2011년의 72.3%, 2012년의 7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5·18광주항쟁’의 인지도는 89.4%→81.9%로 7.5%포인트 하락했고 ‘4·19혁명’은 77.3%→65.2%로 12.1%포인트가 하락했다. 88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지도도 75.2%→61.7%로 13.5%포인트가 떨어졌고 2002월드컵이나 쇄고기수입 촉발시위에 대해서도 10~11%포인트 하락하였다. 대남인지도가 2014년에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남북교류의 단절이 장기화되고 한류유입도 최근 정체됨으로써 남한소식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를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절대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비교하면 어떨까? 남한주민에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2014년 62.6%로 북한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가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대남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88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에 대한 사실을 각각 61.7%, 55.6%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이 공식매체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통로를 통해 남한의 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정부가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정보유입의 속도만 늦출 수 있을 뿐, 결국 정보전달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남북 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은 남한과 북한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선거방식(97.3%), 생활수준(98.7%), 역사인식(95.3%), 언어사용(97.3%), 생활풍습(91.9%), 가치관(93.3%)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간의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렇듯 심각한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간의 이질성은 남한주민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는 선거방식(91.0%), 생활수준(93.6%), 역사인식(83.4), 언어사용(83.6%), 생활풍습(83.3%), 가치관(91.8%)로 북한주민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 차이를 굳이 따져보면 남한주민은 역사인식과 언어, 생활풍습에서 북한주민보다 동질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4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1.0	97.3
생활수준	93.6	98.7
역사인식	83.4	95.3
언어사용	83.6	97.3
생활풍습	83.3	91.9
가치관	91.8	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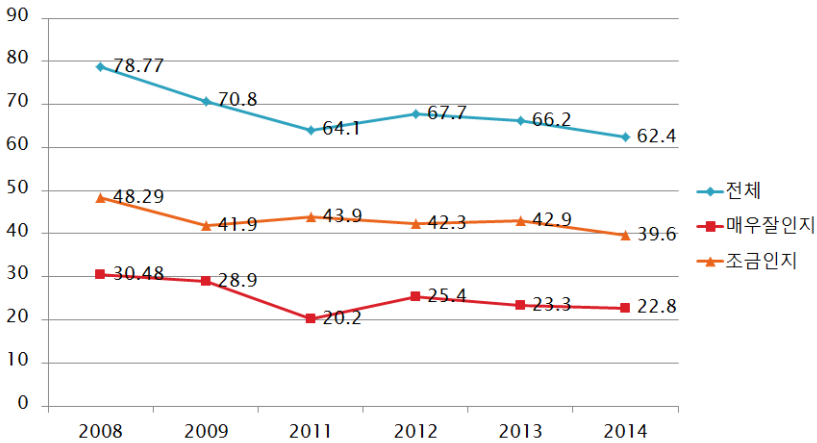
IV.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1. 대북지원 인지도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2.8%), ‘조금 알고 있다’(39.6%)를 합하여 총 62.4%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22.1%),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15.4%)를 포함하여 총 37.5%가 나타났다. 북한주민

중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15.4%로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작년의 8.3%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비율은 62:37로 약 2:1, 즉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대북지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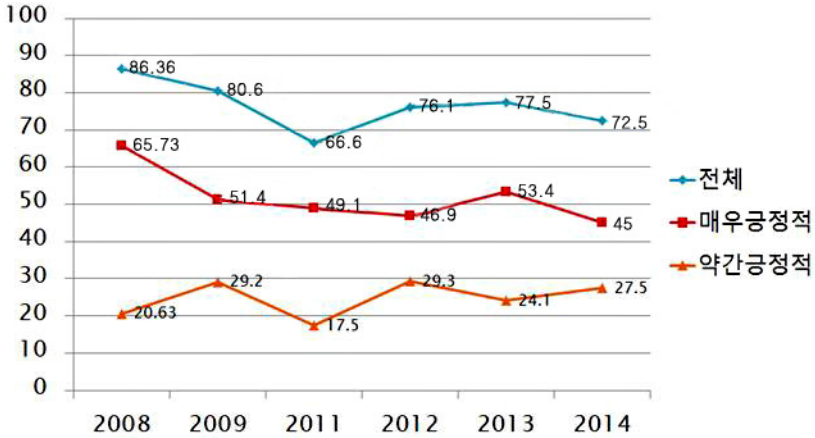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작년과 비교할 때 66.2% → 62.4%로 약간 낮아졌다. 시기별로 보면, 2008년의 78.8%에서 2009년 70.8%로 낮아졌고, 2011년 이후 64.1%(11) → 67.7%(12) → 66.2%(13) → 62.4%(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부터 대북지원 인지도가 60%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근래 지속하여 감소한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관련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북지원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교류와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이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2. 대북지원 효용성

북한주민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2.5%로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10.1%로 적었다.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8%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이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5.0%로 많았으며,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7.5%로 북한주민의 눈으로 보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일부의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북지원 무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다.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북한주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논리로 대북지원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대북지원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대북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로 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보다 긍정 응답률이 약간 낮아졌으며 ‘매우 긍정’에서 ‘약한 긍정’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남북교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이 느끼는 대북지원의 효용성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 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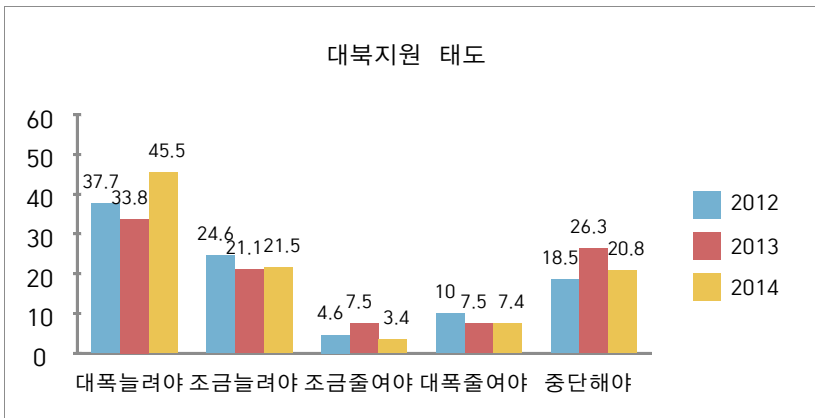
3. 대북지원 정책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응답의 비율은 67.0%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10.8%,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20.8%로 나타나 북한주민 가운데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 대북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3.8% → 45.5%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조금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1.1% → 21.5%로 유지되어 전반적으로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2.1%포인트 상승하였다. 작년 1년 동안의 이러한 변화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12.2%(11) → 19.7%(12)

→ 26.3%(13)로 상승하던 흐름을 반전시킨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2011~2013년 시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의견이 많아진 것은 북한내부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시기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 정치적 논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국내정치화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의 분배투명성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수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2014년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북한주민의 여론이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하층민들의 생활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내 하층민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남한의 대북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2014년 들

어 남한정부가 ‘통일대박’ 담론으로 통일준비를 강조한 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앞세우며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반발로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남한 대북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를 높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주민은 2014년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8.3%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51.7%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과는 달리 북한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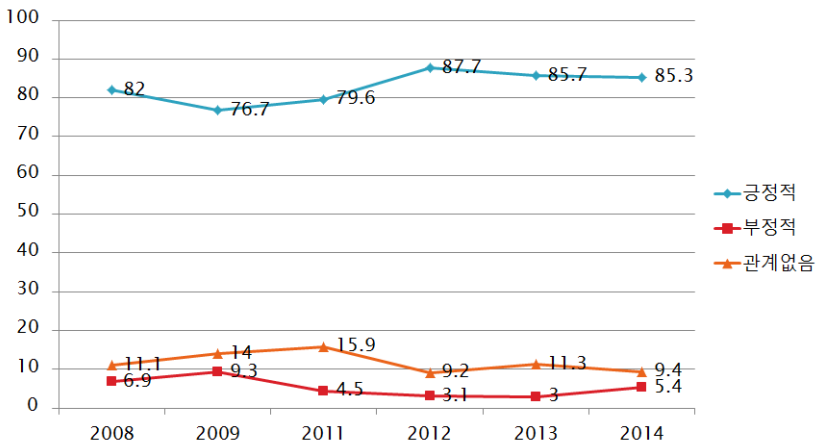
2014년 대북지원인지도는 62.4%로 여전히 높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 교류와 대북지원이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도 낮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여론도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6.3% → 20.8%로 줄었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12.1%포인트 늘어났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의견 가운데는 ‘줄여야 한다’(10.8%)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줄여야 하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남한의 대북지원에 찬성하는 사람은 73.2%나 된다.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주민의 여론(72.5%)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주민의 70%는 남한의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68.5%)과 ‘약간 긍정적’(16.8%)을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85.3%로 압도적이었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각각 2.7%로 매우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9.4%로 많지 않았다. 북한주민은 남한의 경제투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75~8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V. 결론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에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8.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7.3% 포인트나 높아졌다.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7.9% 포인트가 상승하여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다시 상승하였고,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는 의식도 약간 높아졌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1년 사이에 악화된 것은 최근 1년 동안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적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대의식의 상승과 안보불안 고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식도 지난 1년 사이에 8.2% 포인트 줄어들었다. 북한의 대남인지도도 11.2% 포인트 하락했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지원 효용성도 각각 3.8% 포인트, 5.0% 포인트씩 감소하였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북지원 활동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북한주민에게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차이와 이질성에 대해 북한주민은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정치, 역사, 언어,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절대수치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부분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북한주민 의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협력의식’은 55.7%로 여전히 높으며 남한에 대한 지식(대남인지도)도 평균 64%로 높다. 북한주민 절반 이상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고 동포라는 의식이 아직은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의 62.4%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고 72.5%의 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67%의 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주민들의 긍정적 대남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식에서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표본의 편향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접수: 2014년 11월 5일 / 심사 : 2014년 11월 20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4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박명규 · 김병로 · 송영훈 · 장용석 · 정은미. 『2013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

국문논문

김병로 ·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2012). pp.101~139.

기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북한 사회와 주민의식 변화 학술회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4년 8월 27일).
“중국 내 北주민 100명 심층 인터뷰(上): 對南 인식.” 『프리미엄조선』. 2014년 7월 7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Recent Changes in Attitudes of North Koreans towards South Korea based on Interviews of North Korea Defectors

Kim, Philo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based on interviews conducted in June 2014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perception of South Korea, knowledge about South Korea, and attitudes about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the North.

North Korean perceptions of South Korea have become less cooperative and more hostile; awareness of insecurity has increased; and awareness of South Korea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by the South decreased in 2014. However, a majority of North Korean people still consider the South as a partner despite latent and actual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This indicates that a strong feeling of belonging to the same ethnic group still exists in North Korea.

Compared to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North, both groups share many attitudinal similarities, such as awareness of the other Korea, mutual recognition of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r-Korea

security concerns. There are also differences, most notably that North Koreans tend to regard the South as a better partner than the other way around. These results may be attributed to the influence of South Korea's cultural wave on North Korean attitudes and the North'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rather than bias contained in this sample group.

Keywords: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Conceptions of Inter-Korean Relations, Conceptions of Unification.

김병로(Kim, Philo)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김정은 후계체제』,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 종교인 가족의 존재 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

: 베평련과 전공투를 중심으로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국문요약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두드러진 사회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시민'이 중심이 된 비폭력 반전운동인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좌익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폭력혁명 운동인 '전공투' 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은 일본이 베트남전쟁의 전선에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기지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지국가' 일본이 베트남전쟁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전쟁 시스템에서부터 이탈할 것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체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에 호응한 것이 베평련과 전공투였다.

베평련과 전공투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고리를 탈락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규모로 확대되어 제도화한 전쟁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이렇듯 '기지국가'의 평화운동은, '기지'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수단으로 한 베평련 운동과, '기지'와 일체화한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여 해체하려 했던 전공투 운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후체제'는 살아남았고, 이들이 체현했던 평화의 담론들은 오히려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거점으로 간주되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과녁이 되어 있다.

주제어: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평화주의, 베평련, 전공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06).

I. 서론

일본에서 2014년 11월 21일 아베 2차 내각이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뒤이어 치러질 총선에서 자민당의 대승이 점쳐지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개를 3년 전에 누가 예상했을까? 3·11 이후 반원전운동의 고양 속에서 일본 사회의 변혁 가능성이 논의되고, 시민운동을 위한 전략지침서가 서점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이 아득한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진다.¹⁾

결국 시민운동은 실패했는가? 텅달아 반원전운동의 뿌리에 있던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도 수명을 다하고 만 것인가? 아베 3차 내각은 이에 대한 해답을 확인시켜주는 내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자민당의 압승을 배경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의 염원을 이루고, 일본은 ‘전후’와 완전히 결별할 것인가? 그와 동시에 ‘전후 평화주의’도 급기야 박물관에 들어가고 말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부러 먼 거리로 나가보려 한다. 가파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지나치는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먼 곳으로 옮겨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평화운동을, 특히 시민의 평화운동을 논의할 때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는 베트남전쟁 반대 평화운동에서부터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두드러진 사회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시민’이 중심이 된 비폭력 반전운동인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좌익 학생’들이 중심이 된 폭력혁명 운동인 ‘전공투’ 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은 일본이 베

1) 예컨대, 小熊英二, 『社會を變えるには』(東京: 講談社, 2012).

트남전쟁의 전선에 군사물자를 보급하는 기지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이미 일본이 한국전쟁에 미국의 기지로 관여하면서 만들어진 현실이었고, 베트남전쟁에서 재현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필자는 ‘기지국가’로 명명한 바 있다.²⁾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기지국가’ 일본이 베트남전쟁으로 구조화된 동아시아의 전쟁 시스템에서부터 이탈할 것을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체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에 호응한 것이 베평련과 전공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후체제’는 살아남았고, 이들이 체현했던 평화의 담론들은 오히려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사상적 거점으로 간주되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세력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과녁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아베 3차 내각이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전후의 반전평화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저항이 조직화되는가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망을 평화주의 진영에서 보면, 일본 내 평화운동의 최고조기였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이 시기의 교훈에서 평화주의 진영이 무엇을 취사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던 베평련과 전공투 운동에 주목하여, 그들의 반전평화 담론을 분석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하에 본론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전개된다. 우선 2장에서는 일본이 마주한 베트남전쟁의 현실을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기지

2)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제9권 (2000), pp.167~188.

국가'의 연속성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베평련의 평화담론, 4장에서는 전공투의 평화담론, 5장에서는 베트남전쟁 속 일본의 현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을 다룰 것이다.³⁾ 그리고 결론에서 이들을 종합하여 '전후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일본의 평화주의가 지니는 속성을 밝혀 내고자 한다.

II. 베트남전쟁의 현실: '기지국가'의 전쟁

1. 주일미군기지: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쟁으로

일본이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어 있던 현실은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의 위치와 역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전쟁 발발과 더불어, 미군의 반격을 위한 출격기지가 되었다. 한국전쟁 기간에 전개된 공중 공격은 주로 일본의 공군기지 15곳에서 발진한 폭격기와 전투기에 의한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일본의 비행장은 방어를 위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투기가 출격한 뒤 돌아올 수 있는 한계지점에 있었다. 전투기들은 이타즈케(板付), 아시야(芦屋) 등 규슈(九州)의 기지에서 주로 발진 출격했다. 규슈 북부에서 서울까지 약 600km

3) 이 글에서는 '평화주의'와 함께 '평화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전공투 운동을 '평화에 대한 사상과 그러한 사상이 표출된 운동'으로서 재규정하고, 그들의 반전 평화에 대한 인식과 사상을 일본의 평화주의의 전개 속에 배치하려고 의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전공투 운동은 현존 사회와 국가의 파괴를 당면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비평화주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원천에 근본적인 반전 평화의 사상이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 '평화담론'의 범주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리는 당시의 전투기들이 보조탱크를 사용해서 발진 회항할 수 있는 한도였다. 한편 폭격의 주역 B29가 주된 출격기지로 이용한 것은 요코타(横田)기지였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 기지가 되었다. 숫자로 나타난 기지화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1953년 1월 31일 당시, 일본 국내에는 미군기지 733곳이 있었다. 그 넓이는 약 14만 헥타르, 일본 전 국토면적의 0.378%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군기지는 대일강화 이후 오히려 정비, 확충되는 경향을 보였다. 1952년도와 1953년도의 미군기지 건수 및 토지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건수는 1,212건에서 733건으로 줄어든 데 비해, 그 면적은 3억 1,013만 평에서 오히려 3억 1,187만 평으로 증가했다. 육상시설의 경우, 그 총수는 1952년 7월의 612건에서 1953년 4월의 58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를 무기한사용과 일시사용으로 구별하면, 일시사용이 312건에서 267건으로 감소한 데 비해, 무기한사용은 300건에서 314건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기지 확충 경향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시사용 시설은 주로 병사(兵舍)와 같은 부속시설인 데 비해 무기한사용 대상이 되는 것은 비행장이나 연습장과 같은 중요 시설이었다. 중요 시설일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⁴⁾

주일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현상을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말에 들어서 정리축소계획이 제기되었다. 1968년 12월, 주일미군기지의 정리축소계획이 제9회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 내용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훈련장 140곳 가운데 54곳에 대해 일부를 반환하고, 자위대와의 공동사용, 이전 등의 방법으로 정리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자위대로 이관을 완료하여 미군의 일시사용 기지가 되어 있던 훈련장을 반환하거나, 자위대와 공동 사용하기로 변경하는 등

⁴⁾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p.173.

이 주된 것으로 실질적인 삭감은 없었다.

그러나 닉슨이 베트남에서 미군을 삭감하는 결정을 정식으로 표명한 캄 독트린(1969년 7월 25일) 이후, 미군기지 재편 논의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런 가운데 1969년 6월, 오키나와 반환을 위한 미일교섭이 개시되었다. 베트남 철수 이후의 미군 재편 계획과 반환 이후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가 연계된 것이었다. 미군기지 재편과 통합에 대한 미일정부 간 협의는 1970년 5월 19일에 개최된 제11회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실시되었고, 1970년 12월 21일 제12회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삭감 및 재편 계획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미사와(三澤), 요코타(横田), 이타즈케(板付), 아츠기(厚木), 요코스카(横須賀) 등 미군기지의 축소, 재편이었다.⁵⁾ 자연히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이 미국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은 국내 여론의 압박도 있어 오키나와에 저장된 핵무기의 철거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억지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 핵무기 지속 배치와 기지 자유사용권 확보를 중시했다. 이 문제는 미일밀약이 해소했다. 사토 닉슨 공동성명은 제8항에서, 일본의 비핵3원칙에 배치하지 않는 형식으로 오키나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토 닉슨 공동성명에 관한 합의의사록’(이른바 밀약)에서는 “일본과 기타 극동지역에서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극히 중대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핵무기의 재반입 및 통과의 권리를 인정한

5)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我部政明, 『戦後日米關係と安全保障』(東京: 吉川弘文館, 2007); 베트남전쟁 시기 일본의 기지 재편에 대해서는 藤本博, “ヴェトナム戦争と在日米軍・米軍基地,” 『アメリカの戦争と在日米軍一日米安保体制の歴史』, (東京: 社會評論社, 2003); 미일밀약에 대해서는 外岡秀俊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1) 참조.

다.”고 되어 있었다.

2. 베트남전쟁의 현실과 ‘기지열도’

한국전쟁 이후 주일미군기지는 네 차례 크게 변화했다. 첫 번째 변화는 1952년 강화조약 발효 시에 일어났는데, 점령기 최대 43만 명까지 늘어났던 ‘진주군’은 강화독립을 계기로 ‘주둔군’으로 이름이 변했으며, 접수가 일부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 전국의 기지와 시설은 2,800여 곳에 달했다. 두 번째 변화는 1957년도를 전후로 한 미군재편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전쟁 후 예산삭감으로 미 지상군이 철수하여, 8만 7천 명이었던 미군 병력이 3년 동안 5만 명 이하로 삭감되었다. 본토에 있던 제3 해병사단이 오키나와로 이동하자 본토의 기지는 절반 정도가 축소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한 수도권 미군기지 정비사업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1968년부터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 주일미군기지 축소정비 ‘기본연구’에 따른 정비사업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현재 본토의 기지 모습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한편 안보조약이 체결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약 13만 헥타르에서 3만 헥타르 정도로 감소했으나, 오키나와의 기지 면적은 두 배로 증가했다. 복귀 이전의 오키나와는 ‘평화헌법’의 범위 밖에 있어서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제약 없이 미군이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통제함으로써 1965년의 다낭 침공에서 오키나와의 해병대를 이용할 수 있었고, 1968년부터는 괌에서 오키나와로 B-52 폭격기를 이동시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에 대한 공습을

⁶⁾ 外岡秀俊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pp.270~271.

전개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1965년 2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에 대해 전면적 폭격을 개시하자 사토 내각은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 하여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안보조약의 형식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본토의 미군기지를 베트남전쟁의 후방기지로써 미국에 제공했다. 4월 14일에는 시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이 안보조약 상 ‘극동’의 범위를 재해석함으로써 사토 내각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1960년에 개정된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이 베트남전쟁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북폭’ 이후 오키나와는 물론 요코스카(横須賀)와 이와쿠니(岩國) 등의 미군기지가 베트남전쟁으로 향하는 항모와 폭격기의 출격기지로 변모했으며, 사가미(相模) 보급창은 수리조달기지가 되었다. 오지(王子)와 네리마(練馬)의 미군병원은 야전병원이 되었으며, 베트남전쟁 특별수요가 창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방불케 했다. 1965년 12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일본 본토의 기지에 귀휴한 미군병사는 약 11만 명이었다.⁸⁾

한국전쟁 이후 기지 주변의 반기지 운동이 활발해졌으나, 그것은 주민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른바 ‘반기지 운동’에 ‘외지인’의 지원이 없지 않았으나, 이 시기 반기지운동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었고, 외부 지원자는 아직 반기지 운동의 자각적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5년 2월의 북폭 개시로 인한 전쟁 확대는 일본의 기지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쟁과 연계된 시설이며, 주일 미군기지를 매개로 일본이 간접적으로 전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뜨게 했다. 즉 일본 국민 전체

7) 개번 매코맥·노리마쯔 사토꼬 지음, 정영신 옮김,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 (파주: 창비, 2014), p.102.

8) 青木深, “日本「本土」における米軍基地の分布と變遷: 占領期からベトナム戦争終結まで,” 『同時代史研究』 4卷, (2011), p.49.

를 ‘기지열도’의 주민으로 바꾸었던 것이다.⁹⁾

한국전쟁에 이은 또 하나의 ‘전후의 전쟁’인 베트남전쟁과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 문제는, 일본이 강화 독립하여 외교권을 획득한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에게 보다 더 직접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전후 평화와 민주주의에서 자기규정을 시도했던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로서 일본이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 하의 일본이 미국의 기지가 되어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인들은 더 이상 ‘평화국가=일본’이라는 등식 속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은 ‘기지국가’의 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어쨌거나 기지국가의 존재는 베트남전쟁에서도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평화국가’는 아니지만 ‘전쟁국가’도 아니었다.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일본은 전쟁과 격리된 안전지대였고, 생활인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무대로 전개되는 ‘생활평화주의’는 그곳에서 올라온 평화주의의 연약한 줄기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 시기에 기성 좌익은 한국전쟁과 원수폭 금지운동에서 분열을 겪으면서 평화운동에서 권위를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이른바 ‘계급과 민족’에 입각한 ‘진영 평화주의’는 행동력을 갖추었으나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고,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강단 평화주의’는 이론적 정밀성을 갖추었으나 행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틈새에서 국민들의 반전 심성을 조직화해냈던 그룹이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약칭 베평련이었다.

9)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東京: 有斐閣, 1985), p.179.

10) 남기정, “생활평화주의로 풀어보는 전후 일본의 평화론,” 『전후 일본의 생활평화주의』(서울: 박문사, 2014), pp.16-18.

Ⅲ. 베평련의 절대평화주의: ‘기지국가’의 시민운동

1. 반군에서 반기지로, 그리고 반전으로

베트남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표출된 반전 감정의 맨 밑바탕에는 패전 직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반군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의식이 보통의 시민들을 조직화하여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배경에는 1950년대에 전개된 반기지 운동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형태로 분출된 1960년 안보투쟁이 반군 의식과 반기지 운동의 종합을 매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반군 의식이 평화운동의 형태로 분출되어 확산되는 데에서도 한국전쟁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를 주도한 그룹이 『들어라, 바다신의 목소리(きけ, わだつみのこえ, 이하 들어라)』 문집의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이었다.¹¹⁾ 『들어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학도병으로 지원되어 전선에 차출되었던 대학생들이 전투 중에 틈틈이 적어놓은 문장들을 출판한 것으로 1949년에 도쿄대학 협동조합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전몰학도 75명의 수기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기에서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회의, 위화감, 저항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전선에서 현지 주민들에 대한 가해 명령에 거부감과 반감을 적어놓은 수기는 전후 반군 평화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전거(典據)가 되어 왔다. 일본 병사가 내려친 바윗돌에 맞아 “두개골이 파열되어 선혈이 낭자하게 바닥에 쓰러진” 중국인에 대한 연민, 쓰러진 중국인을 발

11)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제106호 (2014), pp.104~109.

로 차고 여기에 또 돌을 던지는 병사들과 이를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는 장교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자괴심, 구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장교에 대한 분노 등이 점철된 이 수기는 반군 의식에서 나오는 평화주의의 원류를 형성하였다.¹²⁾

『들어라』는 1950년 일본의 출판물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으며, 같은 해 이를 원작으로 제작되어 개봉된 동명의 영화는 2,015만 엔이라는 경이적인 수입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그 배경에 한국전쟁의 발발이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조직된 『들어라』의 ‘출판을 기념하는 모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일기 시작한 재군비 논쟁을 계기로 징병제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전개하면서 평화운동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군 평화운동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기지가 확충, 재편되는 과정에서 반기지 주민운동으로 보다 조직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사례를 우치나다(内灘) 투쟁과 스나가와(砂川) 투쟁에서 엿볼 수 있다.¹³⁾ 우치나다 투쟁은 1952년 9월 미군이 이시카와현(石川縣) 우치나다에 미군 포탄시험 사격장을 새로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에 사회당, 공산당, 노농당 등이 반미투쟁 역량을 집결시키면서, 지방의 기지 반대투쟁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전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스나가와 투쟁은 우치나다 투쟁보다 더 분명히 거국적 규모로 전개되었으며, 반기지 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곤 한다. 스나가와 투쟁은 그 재판과정을 통해 미국에 의한 기지화, 즉 ‘기지국가’로 변모한 일본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

12) 「川島正, 日本戦没學生記念會 編, 『きけ わだつみのこえ』(東京: 岩波書店, 2012), p.90.

13) 정영신,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p.229~234.

가 되었다.

이러한 반군 의식과 반기지 운동의 경험이 1960년 안보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1960년 안보 투쟁에서는 평화운동에서 공산당이 후퇴하고 시민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가 확인되었다. 일본공산당은 1960년 안보투쟁의 전개가 전학련(全學連)에 모인 학생그룹과 무명의 노동자 시민 주도로 흐르는 데 대해 경계하며, 이 둘의 합류를 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보통의 시민들은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聲なき聲の會)’에 모여들면서 1960년 안보투쟁의 광범위한 배후로 포진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은 정당이나 노조에 의해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개인의 의지를 각자 표현하여 거리 투쟁에 참가하는 데모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를 전개해 나갔다. 이 모임은 ‘시민집회를 제안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제안서에는 ‘무당무파’의 입장이 강조되었고, ‘정치적 효율주의’를 배격하는 태도가 중시되었으며, ‘초보자와 비전문가’가 주체가 되는 집회가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¹⁴⁾

이러한 태도와 집회 방식이 베평련에 계승된 것이었다.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 사무국을 담당하고 베평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 다카바타 케 미치토시(高畠道敏)는 이 시기의 ‘시민운동’이 ‘오랜 세월의 생활체험’과 ‘내면적 상처’에서 나오는 결의를 기저에 깔고 분출되어 나온 것으로 정리하였다. 즉 1960년 안보투쟁은 부조리한 시절의 전쟁체험을 기반으로 전후에 재건한 생활의 터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태도가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평화운동으로 발전되어 나온 것이었다.¹⁵⁾ 반군 평화가 반기지 평화와 결합하여 반전 평화로 전개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米原謙, 『日本政治思想』,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7), pp.267~270.

15) 米原謙, 위의 책, p.271.

2. ‘기지’ 해체를 통한 ‘기지국가’의 해체

이렇듯 전후 일본 국민에 체화된 반군 반전 평화주의는 1960년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재확인되었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조직적으로 분출된 안보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조약은 개정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은 퇴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헌법개정과 재군비는 저지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 안보투쟁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기지국가’ 일본의 현실과 직면하게 했다. 이러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의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베평련이라는 이름의 운동체로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베평련은 1965년 2월 7일 미군의 베트남 북쪽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철학자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소장 작가 오다 마코토(小田實) 등이 주도하여 4월 24일, 베트남 반전 집회를 연 것을 계기로 이후 정기적인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를 발간 배포하는 것으로 베평련은 운동의 폭을 넓혀갔다. 베평련 운동의 최고조는 1969년으로, 전국에 360여 개의 지역 베평련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그해 6월 15일에는 베평련 집회에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등 정부 당국을 긴장시키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¹⁶⁾

베평련 운동은 베트남에 파견되기에 앞서 일본의 기지에 머물던 미군 병사들이 탈영을 시도하자 이들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면서 전후 일본의 평화운동이 도달한 새로운 지점을 확보하게 된다. 탈주병들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명령을 거부한 자들이고 이들을 돕는 행위 또한 국가를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베평련의 사상가’라 불린 츠루미

¹⁶⁾ 이하 베평련에 대해서는 남기정, “베트남 반전탈주 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제36집 (2012)를 참조.

요시유키(鶴見良行)는 여기에서 ‘국민으로서의 단념’이라는 사상을 마련했다. ‘국가’에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여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즉, 주권국가라는 기구에 국민이라는 성원이 있는 이상, 평화운동은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츠루미 요시유키가 말하는 ‘국민으로서의 단념’은 츠루미 슌스케가 말하는 바 ‘자기 내부의 국가를 지워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베평련이 운동의 방법으로 주창한 시민적 불복종이나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의 양심 또는 자각이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철저한 ‘개인원리’의 발견과 실천을 통한 것이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탈주병과 함께 ‘국경을 넘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며, ‘시민적 불복종의 국제적 연대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베평련의 핵심 지도자였던 오다 마코토(小田實)는 ‘난사(難死)’의 사상 속에서 전쟁 체험과 반전평화주의의 정착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의식이 베트남전쟁에 투영되었다.¹⁷⁾

일본의 탈주병 지원 운동은, 운동 주체 측이 내리는 것과 같은 과대평가는 피해야 하겠지만, 미국의 전쟁사기를 꺾은 운동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미국의 냉전정책에 전환을 일으킨 간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그것은 닉슨의 연설과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닉슨은 “용기 없이 유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한 국민”의 존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¹⁸⁾ 이는 탈주병과 반전운동에 결집한 젊은이들에 대한 다그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자신의 실패를 국민에게 돌리는 비겁함이 묻어나는 말이기도 하다. 냉전기 ‘탈

17) 小田實, “「難死」の思想,” 『「物」の思想, 「人間」の思想』(東京: 講談社, 1980).

18)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 pp.90-91.

국가적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반핵평화운동이 냉전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위트너와 캘더의 연구가 있는데,¹⁹⁾ 일본의 사례는 베트남전쟁에서 차지하는 주일미군기지의 존재를 생각하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1967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탈주병은 40,227명, 1968년은 53,352명에 달했다. 또한 무허가 이탈은 155,000명이었다. 병역거부자/기피자는 전 기간 동안 57만 명이었다. 가장 '모범적인 예'가 일본에서 탈주를 시도한 인트레피드의 4인이었다. 또한 1968년에는 군대 내 반전/민주화 요구도 분출하기 시작했다. 군인도 노동자라는 의식에서 '미군병사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는 150개의 기지에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존재했다고도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GI신문의 발간으로 대표되듯 군대 내 반전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군대 내 반전 운동은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전개하는 반기지/기지해체 운동과 연대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반전/반기지 운동은 베평련 운동과 연대하거나 이에 포섭되어 전개되고 있었다.²⁰⁾

이렇듯 베평련이 체현하는 일본의 '생활평화주의'는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탈주병'으로 표상되는 미군기지를 사유의 근거로 하여 일본의 시민사회를 포섭해 나가고 있었다. 이는 '기지'를 해체하고, '국가'를 부인하는 사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사상적 유희이긴 했으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미국이 일본의 기지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일본에서의 미군 탈주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 사법체계에 부딪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탈주병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19) 田中孝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日本の國際政治學—歴史の中の國際政治』 (東京: 有斐閣, 2009), pp.47~48.

20)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 pp.95~97.

한편, 후술하듯이 이러한 일본의 반전운동은 한국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일간지는 명동에서 있었던 미군 병사의 시위를 짚막하게 전하였다. 이는 미국을 극도로 긴장시켰을 것이며, 북한에서 남북 일본인과 결혼한 남편으로 잘 알려진 켄킨스씨와 비슷한 사례가 허다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3. 베평련의 당파성 논쟁

한편 일본공산당은 베평련을 ‘무당파 시민운동을 가장한 반공적 당파 운동’으로 간주, 비난했다. 1965년 5월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アカハタ)』와 『젠에이(前衛)』에서는 우에다 고이치로(上田耕一郎) 등 공산당 간부들이 베평련 비판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베평련 운동을 ‘대중의 평화 희구 감정을 이용하여 이에 역행하는 수정주의자의 기도’로 보고 있었다.²¹⁾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연설 이후 공산당에서는 ‘분트’ 즉 전학련 그룹이 이탈했으며 1960년 안보 투쟁 이후에는 구조개혁파가 배제되었다. 1964년 시점에서는 반소친중이며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체제가 최고도로 순화되고 있었다. 초기 베평련을 구성하는 단체와 구성원 가운데에는 일본공산당에서 제명되거나 이탈한 ‘수정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베평련에 연대한 문화단체 가운데 ‘신일본문학회’와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는 그 대표적인 존재였다.²²⁾ 일본의 소련파는 구조개혁노선을 지지했으며, 소련이 제창한 평화

21) 『アカハタ』, 1965년 5월 11일.

22) すが秀實, 『革命的な, あまりに革命的な—「1968年の革命」史論』(東京: 國文社, 2003), pp.90~91.

공존 노선은 그 현실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일부가 결성한 조직이 공산주의노동자당(공로당)이었다. 이들은 일본공산당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신좌익과 같은 입장이었으며, 베평련에도 적극 관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구세대 신좌익'이라고도 할 만한 사람들로 요시카와 유이치(吉川勇一), 무도 이치요(武藤一羊), 구리하라 유키오(栗原幸夫) 등이 있었다.

스가 히데미(すが秀實)는 자택(JATEC, 일본 탈주병 지원자 조직) 활동이 소련 고위간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그 정도의 고위간부와 극비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던 인물로 아마구치 겐지(山口健二)를 지목하고, 베평련이 공로당 계열 보다도 윗선에서 직접적인 소련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²³⁾ 그러면서 그는 리버럴 반전평화주의를 내건 '보통의 시민' 운동으로서의 베평련에 대해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스가는 '보통의 시민'이라는 것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그들이 진정 '보통의 시민'이었는가 물으며, 직업적 활동가(특히 공로당 계열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된 베평련의 성격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²⁴⁾ 이는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나, 그와 동시에 오다 마코토가 주도하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 '보통의 시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목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베평련에 비록 일본공산당과 대립하는 직업적 활동가 집단이 다수 자리 잡았다 해도, 그들은 적어도 '보통의 시민'을 주력군으로 한 베평련 운동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오히려 일본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데 베평련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평련을 '시민'의 운동이라 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3) 위의 책, pp.101~118.

24) 위의 책, p.135.

IV. 전공투와 절대평화주의 비판: '기지국가'의 폭력혁명

1. 평화운동으로서의 전공투

전공투란 전학공투회의(全學共闘會議)의 약칭으로,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일본의 각 대학에서 실력투쟁을 전개한 학생운동 단체이다. 전공투는 각 대학 운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했던 측면이 있어서, 시기와 조직마다 각각 지향하는 바와 운동 내용이 달랐다고 할 수 있지만, 운동의 주체들 특히 지도부에서는 전후 민주주의의 급진적 실현과 베트남전쟁에 동조하여 세계혁명을 위한 반미 연대의 '이상'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공투는 '베평련'과 '반전청년위원회', '3파 전학련'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배태되어 나왔다. 베평련은 위에 설명한 바 있는데, '반전청년위원회'는 베평련의 노동자관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당 청소년국, 총평 청년대책부, 사회주의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북폭 반대와 한일조약 반대를 슬로건으로 1965년에 조직된 운동단체였다. 공산당은 위원회의 명단에 '트로츠키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²⁵⁾

한편 신좌익 계열의 학생운동 가운데에서는 '3파 전학련'이 적극적인 실력투쟁을 전개했다. 전학련이란 1960년대 초중반, 각 대학 학생자치회의 연합체로 출발했는데, 이후 당파에 따라 계열화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3파 전학련'은 1966년 12월에 중핵파와 사학동(社學同), 사청동(社靑同)의 3파가 연합해서 전학련을 재건, 결성한 것이었다. 이들이 베트남

²⁵⁾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東京: 青土社, 2005), p.471.

반전 운동, 사토 수상에 베트남 방문 반대 투쟁, 원자력항모 엔터프라이즈 사세보(佐世保) 입항 반대투쟁, 스나가와(砂川)/산리즈카(三里塚) 투쟁 등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 신좌익 당파들은 일본공산당의 공식노선과 그에 대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주류에 반발하여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학생당원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일본공산당은 1955년 한국전쟁 중 강령으로 채택되었던 무력혁명노선을 철회했다. 이후 일본공산당은 의회주의적 개혁노선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공산당 주류파가 의회주의로 기울어진 것을 혁명에 대한 원칙 없는 배반으로 생각한 학생당원들이 반발했고, 이들이 신좌익 섹트운동으로 흘러들어갔다.

전공투는 이러한 섹트운동과도 무관한 일반 학생 대중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초기에는 전공투도 조직 구성 원리에서 배평련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전공투’임을 선언하고 집회에 참석하면 전공투가 되었으며,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농성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음날은 운동(체육) 동아리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²⁶⁾ 당시 도쿄대 총장대행이었던 가토 이치로(加藤一郎)의 전공투 평가도 비슷한 것이었다. “전공투의 매력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조직없는 운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

전공투 학생들이 보기에 대학은 그 자체로 봉건적 일본이며, 실패한 일본의 근대이며, 미 제국주의이며, 미 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아류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특히 도쿄대학 전공투에게 도쿄대학은 근대 일본의 참모본부였으며, 베트남과 제3세계 침략의 첨병 양성소였다. 대학의 비리와 권위주의는 이를 현재화하는 구체적 예였다. 따

26) 産經新聞取材班, 『總括せよ! さらに革命的世代 40年前一キャンパスで何があったか』(東京: 産經新聞出版, 2009), p.95.

27) 産經新聞取材班, 위의 책, p.134.

라서 대학의 파괴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것으로써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2. ‘국가’ 해체를 통한 ‘기지국가’의 해체

전공투 운동은 1969년 1월의 야스다(安田)강당 공방에서 절정을 맞이 한 뒤 수습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사상으로서 전공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두 가지 예를 도쿄대학 고마바(駒場) 캠퍼스에서 벌어진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와 전공투 활동가들과의 대화, 그리고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의 ‘와다츠미 상(わだつみ像)’ 파괴에서 볼 수 있다.

1969년 5월 13일, 도쿄대 고마바캠퍼스에서 열린 미시마 유키오와 전공투 학생들 간의 토론에서는 미시마가 일본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한 혐오를 표명하였고, 그 점에서 전공투 학생들과 공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시마는 폭력반대 결의에 서명해 달라는 자민당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폭력에 반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시마는 “저는 우든 좌든 폭력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폭력의 효과가 현재 아주 아이러니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단지 무원칙 또는 무전제로 폭력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은 의도하지 않게 공산당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고 하여 비폭력 의회주의와 호헌 평화주의 노선을 걷고 있던 일본공산당을 비판했다.²⁸⁾ 원래 폭력기제인 국가가 폭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미시마에게 일본은 더 이

²⁸⁾ 미시마 유키오 외 지음, 김항 옮김, 『미시마 유키오 대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서울: 새물결, 2006), p.21.

상 국가가 아니었다. 미시마가 조직한 ‘방패의 모임(楯の會)’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국가, 즉 ‘기지국가’를 대체하는 이면국가(裏面國家)와도 같은 것이었다.²⁹⁾

이러한 미시마의 주장을 전공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다. 즉 국가에 대한 일차적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권능으로 갖고, 또한 의무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³⁰⁾ 바로 그렇기에 전공투의 분위기 속에는 공산주의에 의한 국가의 폐기라는 신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공투와 미시마는 전제와 결과가 뒤집힌 관계에 있었기에 대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다. 미시마와 동일하게 전공투 활동가들에게도 전후 일본은 ‘국가’가 아닌 존재였다. 전공투가 느낀 위기감이란 국가에서부터 오는 위기감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감이었다. 그것은 “국가가 없는데 국가처럼 행세하는 놈들에 대해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유령’이었다. 일본이라는 존재는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나 기업활동을 해왔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유령이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상한 기호를 움직이면서 엄청난 니힐리즘을 준비하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였었다. 그것은 한편 ‘국민을 군인으로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먹으면서까지 공헌하는 일을 요구하는 의사(pseudo)국가’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보수연합은 국가로 행세하려는 ‘가장 국가’, ‘가면의 국가’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민족주의를 표면에 내세울 수는 없고, 따라서 민족주의처럼 들리는 언설들은 “단지 노스텔지어를 교묘히 이용하는 ‘기억재생장치’에

29) 위의 책, p.43.

30) 위의 책, p.451.

기댄 ‘허구로서의 민족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³¹⁾ 이것이 베트남반전의 입장에서 대학의 파괴에 나선 학생들의 논리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러한 논리를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같은 5월, 이번에는 도쿄에서 떨어진 간사이지방(교토)의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공투 운동이 주목받았다. 전공투 운동의 고양 속에서 리츠메이칸대학에 세워졌던 ‘와다츠미 상’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석상은 『들어라』의 발간을 기념하여, 1950년 1차 와다츠미 모임이 제작했던 것이다. 리츠메이칸대학에서는 이 석상 앞에서 정기적으로 ‘부전의 다짐’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려 ‘반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를 타락과 부패로 치부하는 전공투 학생들에게 ‘와다츠미’는 반전의 상징이 아니라 반동의 상징이었다. 석상의 파괴를 주도했던 리츠메이칸대학 아유하라 사토시(鮎原輪)는 와다츠미 석상이 ‘의제(擬制) 평화와 민주주의 노선이 완만하게 부패해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며, ‘전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오만이 죽은 자들에게 강매한 면죄부’로 판단해서 파괴한 것이라 술회하였다. 실제로 전공투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그런 복잡한 인식과정 없이 보다 단순하게 사태를 보았다. 즉 『들어라』는 전쟁 중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던 자들의 유언에 불과한 것이며, 와다츠미 석상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던 전중파(戰中派)의 무력함을 상징하였다. 나아가 그들에게 와다츠미 석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함으로써 권력에 영합한 어른들의 모습으로 어른 거리고 있었다.³²⁾ 그들에게 절대평화주의는 권력야합과 전쟁추인을 의미할 뿐이었다.

한편 전중파의 장년 세대들은 전공투 학생들의 ‘무지와 무치’, 그리고

31) 위의 책, p.455.

32) 福間良明, “「戦争體驗」という教養—「わだつみ」の戦後史,” 『史林』, 93卷 1號, (2010), p.186.

‘역사인식의 단순함’에 절망하며 경악하고 분노하였다. 다른 한편, 『들여라, 바다신의 목소리를』의 학도들이 ‘극한 상황에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도약’을 시도했던 것처럼 묘사되고 인식되는 데에 위화감을 느끼는 전공과 지식인도 있었다. 전쟁이 깊어가는 가운데 대부분의 일본인은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전쟁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었으며, 집단적 환희에 들뜨거나 개인적 취미에 침잠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뇌하는 인상’의 와다츠미 석상은 허구이며, 이를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체험을 전승하는 진정한 의미였다.

3. 근본주의적 평화주의와 교양주의의 부정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전쟁체험이라는 교양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 교양주의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교양주의는 그 소유자를 무소유자에게서 분리 차별하여 우월화하는 전략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양의 정도로(=권위라는 이름으로) 서열화를 시도하고 이를 유지하는 폭력의 기제이기도 했다. 전쟁체험 또한 바로 이와 동일하게 전쟁체험의 무소유자를 소유자와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반전’운동의 전선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편 전쟁체험의 소유자는 전쟁체험의 일반화를 거부하고 ‘반전’의 전선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절대평화주의의 존립근거였던 ‘전쟁체험’은 이 시점에 와서 오히려 ‘반전운동’의 가능성을 차단했던 것이다. 전공투 학생들은 이렇게 폐쇄된 상황을 타파하려 했다. 교양과 반전의 접점, 나아가서 전쟁체험과 반전의 접점은 전공투를 계기로 분쇄되었던 것이다.³³⁾

33) 福間良明, 위의 글, pp.192~193.

한편 미치바 치카노부(道場親信)의 지적대로 전공투의 학원투쟁과 반전운동의 정치투쟁이 만나는 곳에서 전위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 쟁취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반전의 정치투쟁이 궁극적인 과제로 설정한 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이었고, 이에 추종하는 자민당 ‘권력’이었다. 이를 타도하기 위해 전위당에는 군사적 역량을 수렴할 것이 요구되었고, 여기에서 ‘반전’을 위한 ‘군사’라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다. 미치바는 이러한 모순에 신좌익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전평화’가 ‘반제’와 ‘반권력’의 과제 속에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채택하게 되면 ‘제국’과 ‘권력’이라는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폭력은 ‘정의의 폭력’이 되는 것이었으며, ‘제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정의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⁴⁾

전공투에 대한 많은 회고와 비평, 그리고 연구들이 전공투를 베트남전쟁의 산물로서 그렸지만, 대학의 변혁과 사회혁명을 목표로 했던 모습에 경도되어 반전운동의 면모는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베트남전쟁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야스다 강당의 점거와 수상관저 돌진을 시도한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진 ‘테트 공세’가 있었다. 학생들은 일본이 베트남전쟁의 후방기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부정한 평화헌법의 정신이 훼손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으며, 이에 둔감한 ‘어른들(공산당과 사회당 등 좌익을 포함한 기성세대)’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기존의 질서가 폭력을 용인하고 이를 내재화한 것이라고 할 때, 평화의 실현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투가 평화주의에 기여한 점은 다소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들이 ‘국가’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다는 점이

³⁴⁾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p.475.

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를 버리고 남은 곳에 ‘생활’이 있었다. 이후 국민은 ‘국가’에서 탈출하여 ‘생활’에 침잠해 갔다. 전공투는 ‘생활평화주의’ 형성의 또 다른 기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V. ‘기지국가’의 온존: 신문 논조와 국민 여론

1. 신문논조

일본의 각 미디어들은 1965년부터 특파원을 사이공에 파견, ‘일본인 기자’의 눈으로 본 베트남의 현지 정세를 앞 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경우, 특파원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눈물과 불꽃의 인도차이나”라는 제목으로 현지 리포트를 38회 연재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도 가이코 다케시(關高健)의 현지 리포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도를 게재했다. 신문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눈으로 직접 본 현지 보도가 신문의 투서란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문제에 대한 여론의 고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³⁵⁾

이 시기 일본의 신문은 매우 정력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입장 개진을 하였으며, 그 논조는 대체로 확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1965년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사설을 23건 게재하였으며, 그 외에 지방지의 경우에도, 예컨대 『홋카이도신문(北海道新聞)』이 25건, 『중국신문(中國新聞)』이 19건 등 베트남 정세를 다룬 사설을

35) “座談會, ベトナム戦争と日本の新聞,” 『新聞研究』, 168號, (1965년 7월), p.10.

집중적으로 내보내었다.

이들 신문의 논조는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와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논조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전자의 입장에서 쓰인 것들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의 보도 태도였다. 『닛케이』는 남베트남 시민들이 다른 신문들의 보도만큼이나 전화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북폭을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였다.³⁶⁾

이 시기 일본의 신문사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사론이 보도에 지나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신문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신문사의 입장이 보도에 반영된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³⁷⁾ 그러나 이를 거꾸로 이해하면 베트남 문제는 그 만큼 ‘팔리는’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베트남 문제를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이 있었고, 마침 『마이니치신문』이 베트남 보도에서 치고 나가자, 다른 신문사들도 경쟁적으로 베트남 보도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사의 ‘생산과잉’을 불러 왔던 것이다.³⁸⁾

또한 베트남 보도에 국제부만이 아니라 사회부가 관여하게 된 신문업계 내부 사정이 베트남 보도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을 두드러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 즉, 아시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반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듯 사회부가 베트남 문제를 취급하게 되었고, 그것이 베트남 보도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경향을 낳았다는 것이다.³⁹⁾

36) 위의 글, p.12.

37) 위의 글, p.12.

38) 위의 글, p.13.

39) 위의 글, p.13.

2. 국민여론

다수의 신문논조가 ‘확전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수단에서는 미일안보조약에서 약속한 기지제공의 현실과 전후 헌법 안에서 자위대의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모순을 보였다.

우선 1966년 3월의 내각 관방광보실 조사를 보면,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76%인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13%였다. 이는 일본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였다. 평화헌법의 ‘전후 민주주의’가 체화되어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질문에서는 절대 평화주의의 입장을 보인 응답자 가운데, 조건부 질문을 던지면 ‘자위의 전쟁’을 용인하는 입장은 46%로 과반에 육박하고 있었다. 사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전후 민주주의’의 취약성 또는 이중성(전공투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기만성’)이 나타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76	직접침략을 당해도 전쟁은 안 된다	18
		직접침략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다	46
		모르겠다	12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13	침략 시 자위를 위해서라면 용인한다	11
		기타/무응답	1.8
모르겠다	11		
합계	100		

같은 조사에서 “일본은 자유주의 진영에 들어 있는데, 당신은 앞으로 도 자유주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립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 진영 50%, 중립 25%, 공산 진영 1%, 모르겠음 24%이었다.⁴⁰⁾ 여기에서 중립이라 대답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중립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9%,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1%였으며(모름이 5%), 중립주의를 취했을 때 방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4%가 찬성, 7%(모름이 4%)가 반대였다. 한편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84%였으며,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16%였는데,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안보조약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8%,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 모르겠다는 응답이 32%(합계 84%)였다.⁴¹⁾

일본의 일반 국민은 베트남전쟁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현실이기에, 평화헌법 하의 제한적 군비와 미일안보조약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베평련과 전공투의 반전 운동이 전개되었던 현실에서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1969년 12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가운데, 당면한 일본의 방위 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 국민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40)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の廣報及び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1966년 3월), pp.26~27.

41)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위의 책, pp.27~28.

안보조약도 자위대도 현상유지가 좋다	28
안보조약을 계속하면서 자위대를 증강시킨다	25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	10
현재의 일미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를 강화하여 자주방위의 태세를 갖춘다	9
D.K.(잘 모르겠다)	28

이를 1949년 8월의 조사와 비교하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일본을 위해 영세중립을 원합니까, 집단안보를 원합니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 영세중립을 선택한 사람이 73.4%로 집단안보를 선택한 사람(16.6%)을 압도하고 있었다.⁴²⁾

1969년과 197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 41%가 ‘현상을 유지하여 미일안보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는 수단을 지지하고 있다.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1969년에는 13%였다가 1972년에는 11%로 줄어든 반면,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은 10%에서 16%로 증가하고 있다. 즉 ‘기지국가’를 해체하자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여전히 소수 의견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기지국가 해체 이후 자주적 국방국가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국민은 더욱 감소하고, ‘미군에 대한 기지제공도 자위대도 필요 없다’는 ‘절대평화주의’의 입장은 근소하나마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반전운동의 미약한 성과였다.

	1972년	1969년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	11	13
현상을 유지하여 일미안보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	41	41

42) 芹澤功, “安全保障と世論,” 『海外事情』(1970년 6월), p.49.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지한다	16	10
기타	1	1
모르겠다	31	35
합계	100	100

베트남전쟁이 종식된 1975년, 일본의 국민은 ‘기지국가’의 현실을 답답히 받아들였다. 일본 국민은 당면한 일본의 방위를 위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⁴³⁾

현상을 유지하여, 미일 안보조약 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다	54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독자적 힘으로 안전을 지킨다	9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지한다	9
기타	1
모르겠다	27

‘기지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반을 넘고 있었으며, ‘자주방위’도 ‘절대평화주의’도 1할을 넘지 못하는 소수의견이 되어 있었다. 1975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안보를 선택지에서 배제한 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었다.

자위대에 참가해서 싸운다	6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위대를 지원한다	32
계렬라적 저항을 한다	2
무력에 의하지 않은 저항을 한다	14
일체 저항하지 않는다	12
기타	1
모르겠다	33

43)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1975년 10월), p.18.

절대평화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자위 전쟁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 40%였다. 이는 위에 소개한 1966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베평련과 전공투의 운동이 국민의 의식을 절대평화주의로 고양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전개해야 했던 만큼, 절대평화주의에 입각한 운동은 ‘느슨하거나(베평련)’ ‘과격하거나(전공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베트남전쟁이 전개되는 사이에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고, 본토에서 미군기지가 축소되는 만큼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가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기지국가’의 속성이 ‘기지의 섬’에 집중되어 표현되기 시작했다.

VI. 결론

일본에서 베평련 계통의 운동이 탈주병 지원운동에서부터 미군기지 영내의 반전운동 지원운동으로 전환될 즈음, 한국의 서울에서도 미군병사들의 탈주 농성사건이 있었다. 『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971년 5월 17일 오후 5시 경, 어네스터 허스트 일병(22세) 등 30여 명이 명동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 중부서에 연행되었고, 이후 미8군 당국에 이첩되었다는 것이다. 시위에는 권영욱(20세) 등 한국인 4명도 가담했는데, 이들은 남대문서에 연행되었다가 훈방되었다고도 한다.⁴⁴⁾ 필자가 찾은 기록으로 한국에서 탈주 미군병사가 모습을 공개적으

44) 『매일경제신문』, 1971년 5월 18일; 『경향신문』, 1971년 5월 18일.

로 드러내어 시위를 벌이고, 이를 한국인이 지원한 사례는 이 사건이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일본에서 탈주병이 속속 나타났을 때 시민들의 지원 운동이 조직화된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사례가 보도되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전선'에 세워진 '전장국가' 한국과 '후방기지'의 역할이 주어졌던 '기지국가' 일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베평련과 전공투는 '기지국가'의 현실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고리를 탈락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규모로 확대되어 제도화한 전쟁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이렇듯 '기지국가'의 평화운동은 '기지'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수단으로 한 베평련 운동과, '기지'와 일체화한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여 해체하려 했던 전공투 운동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운동이야말로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에 의해 보증되는 '전후정치'의 해체를 의도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운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공투는 학생들의 미숙함과 과격성으로 인해 실패했고, 베평련은 베트남전쟁 종식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전을 통한 '전후정치'의 해체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전공투는 물론이거니와 베평련도 실패한 것이며, 오히려 베평련의 반전평화주의는 '전후체제' 그 자체의 일부가 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운동에도 불구하고 '기지국가'의 현실은 굳건히 온존되었고, 국가와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이들 운동은 일본의 평화주의 전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투사하고 있는 것일까?

베트남전쟁은 당사자가 아닌 일본에게 어쩐지 옆집의 불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짝짝한 전쟁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치르듯 미국이 치르는 전쟁에 간접적으로 가담해서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일본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베트남전쟁에서보다 밀도와 강도가 더 높은 협력을 하였고,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수혜도 베트남전쟁 특수에 비해 훨씬 큰 것이었지만,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다는 조건 속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협력 문제는 일본인 일반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는 오히려 생활의 여유를 실감하면서, 일본인은 그 풍요의 근원에 대한 찝찝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베평련이나 전공투 운동이 돌출되어 특기할 만한 주목을 받았던 것은, 거꾸로 일반 대중이 베트남전쟁에 절실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적 반전운동을 조직해 내지 못했거나 조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쩐지 찝찝한 느낌은 갖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의 전쟁이고 이를 말릴 힘은 일본에게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일본의 번영과 안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손익계산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감은 하지만, 함께 일어나 나서지는 않았다. 베평련이 경계했던 것, 그리고 전공투나 미시마 유키오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나약함과 영리함’이었다. 전공투가 실패하고 미시마 유키오의 자결이 잊혀진 뒤, 일본에서는 ‘나약하고 영리한’ 평화주의가 주류담론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약하고 영리한’ 평화주의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헌법개정론자들의 해일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생활에 안주한 전후 평화주의의 ‘나약한’ 면에 주목하면, 그 대답은 회의적이다. 이는 2011년의 여름을 정점으로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일본의 반원전/평화운동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그러나 전후 평화주의는 ‘영리함’을 동시

에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 와중에도 국민의 현실주의적 감각은 일본 외교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기지국가'의 현실에서 벗어날 때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베평련이 탈주하려 하고, 전공투가 파괴하려 했던 '국가'를 결국 떠나지도 못하고 온존시킬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국민은 일본의 전후 '국가'가 '기지'와 일체화되어야 유지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전후체제'의 강력한 후원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사적 우경화의 폭과 속도는 헌법개정론자들이 이러한 '영리한' 평화주의를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주변 관계국의 대일 정책이 일본 국민의 '영리함'을 이해하고 있는가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2014년 11월 6일 / 심사 : 2014년 12월 1일 / 게재확장: 2014년 12월 1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개번 매코맥·노리마쯔 사또꼬 지음. 정영신 옮김.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파주: 창비, 2014.
- 미시마 유키오 외 지음, 김항 옮김, 『미시마 유키오 대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울: 새물결, 2006.

국문논문

- 남기정. “베트남 반전탈주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제36집 (2012). pp.73~96.
- 남기정. “생활평화주의로 풀어보는 전후 일본의 평화론.” 『전후 일본의 생활평화주의』. 서울: 박문사, 2014.
- 남기정. “일본의 전후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제106호 (2014). pp.94~134.
-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제9권 (2000). pp.167~188.
- 정영신. “동아시아 안보분업구조와 반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외국어단행본

- すが秀實. 『革命的な, あまりに革命的な—「1968年の革命」史論』. 東京: 國文社, 2003.
-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防衛問題に關する世論調査』(1975년 10월).
- 内閣總理大臣官房廣報室. 『自衛隊の廣報及び防衛問題に關する世論調査』(1966년 3월)
-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戰後—という經驗』. 東京: 青土社, 2005.
- 米原謙. 『日本政治思想』.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07.
- 産經新聞取材班. 『總括せよ! さらば革命的世代 40年前—キャンパスで何があったか』. 東京: 産經新聞出版, 2009.
- 小熊英二. 『社會を變えるには』. 東京: 講談社, 2012.

- 我部政明. 『戦後日米関係と安全保障』. 東京: 吉川弘文館, 2007.
 外岡秀俊他.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1.
 日本戦没學生記念會 編. 『きけ わだつみのこえ』. 東京: 岩波書店, 2012.
 清水知久. 『ベトナム戦争の時代—戦車の闇・花の光』. 東京: 有斐閣, 1985.

외국어논문

- 芹澤功. “安全保障と世論.” 『海外事情』(1970년 6월).
 藤本博. “ヴェトナム戦争と在日米軍・米軍基地.” 『アメリカの戦争と在日米軍—日米安保体制の歴史』. 東京: 社會評論社, 2003.
 福間良明. “「戦争體驗」という教養—「わだつみ」の戦後史.” 『史林』93卷 1號 (2010).
 小田實. “「難死」の思想.” 『「物」の思想, 「人間」の思想』. 東京: 講談社, 1980.
 田中孝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日本の國際政治學—歴史の中の國際政治』. 東京: 有斐閣, 2009.
 青木深. “日本「本土」における米軍基地の分布と變遷: 占領期からベトナム戦争終結まで.” 『同時代史研究』4卷 (2011).

신문 등 정기간행물

- 『경향신문』. 1971년 5월 18일
 『매일경제신문』. 1971년 5월 18일
 『アカハタ』. 1965년 5월 11일.
 “座談會, ベトナム戦争と日本の新聞.” 『新聞研究』. 168號 (1965년 7월).

The Vietnam War and Pacifism in Japan
: Focusing on Peace Discourse of Beheren and Zenkyoto

Nam, Ki-Jeong (IJ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uring the Vietnam War there were two major types of social movements in Japan: one was called Beheren(Peace to Vietnam! Citizens' Coalition), which was a nonviolent antiwar movement run by ordinary citizens. The other was Zenkyoto, a revolutionary violent movement whose main protagonists were university students of the new left wing. These movements arose largely out of discontent that Japan was used as a base to supply the Vietnam War with military goods. Many Japanese were unhappy with this situation and thought that the country should not be associated with the Cold War or the war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In this vein they demanded the deconstruction of the Post-war system where the Peace Constitution was endorsed by the US-Japan alliance.

People participated in Beheren or Zenkyoto would like to make Japan stop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by changing the reality of the military base-state and then challenging the war system in East Asia. While Beheren aimed to deconstruct the military bases and cut ties with the US, Zenkyoto's goal was to deconstruct Japan itself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U.S.

military bases. Peace movements in Japan as a 'base-state' have had goals to which both two different groups aimed. But in spite of these movements the post-War system has survived. Furthermore, the philosophical roots of these movements were conserved as thought to support the post-War system, and were therefore criticized by groups insisting on breaking away from the system.

Keywords: the Vietnam War, antiwar movement, pacifism, Beheren, Zenkyoto.

남기정(Nam, Ki-Jeong)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법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편저), 『기지의 섬, 오키나와』(공저), 역서로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등이 있다.

리얼리즘의 유토피아

: 가와미츠 신이치의 「류큐공화사회 헌법C사(시)안」 읽기

쑨거 (중국 사회과학원)

국문요약

오키나와 시인 가와미츠 신이치(川滿信一)의 「류큐공화사회헌법C사(시)안(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1981)은 유토피아적 상상이 가득한 동시에 현실 의식과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가와미츠 「헌법」은 1879년 “류큐 처분”, 1952년 미국 군정부의 신탁통치, 그리고 1972년 오키나와 시정권의 일본 반환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자라난 오키나와 사회의 민족 자결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통용되는 분리주의적 민족독립 이데올로기와 다른 의미의 자치를 모색하며 우리에게 대안적인 사상 자원을 제공한다. 그것은 국가를 부정하고 어떠한 형식의 폭력에도 반대하는데, 각종 명분하의 폭력적 지배와 자발적 예측의 대립물로서 “류큐공화사회”를 제시한다.

오키나와 사상가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惠徳)의 『수평축(水平軸)의 사상—오키나와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1971)는 가와미츠 「헌법」과 가장 잘 호응하는 텍스트이다. 오카모토는 기존의 국가론과 반국가론을 모두 전복하고, 또한 민중에 대한 지식 엘리트의 담론을 거절하며, “공동체 생리”라는 개념을 통해 민중의 생활 논리 그 자체에 다가간다. 오카모토와 연결해서 읽을 때 가와미츠 「헌법」은 바로 오카모토가 고심했던, 오키나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가와미츠와 오카모토는 모두 오키나와를 피해자의 위치에 안주시키지 않고, 자립에 관한 대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키나와의 사상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오키나와, 가와미츠 신이치(川滿信一),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惠徳), 오키나와 자립, 류큐공화사회, 공동체의 생리

1981년, 오키나와 시인 가와미즈 신이치(川滿信一)는 잡지 『신오키나와문학(新沖繩文學)』에 「류큐공화사회헌법C사(시)안(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이하 가와미즈 「헌법」)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의 탄생은 동아시아 사상사에 기록될 하나의 '사건'으로, 그 의의는 작품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대 역사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을 응집함으로써, 동아시아 당대 역사로 들어가는 길을 효과적으로 안내한다. 오키나와의 특수한 현실 상황과 역사적 궤적은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가득한 이 텍스트에 투철한 현실 의식과 풍부한 역사적 내용을 부여하였다.

I. 가와미즈 「헌법」의 배경

1972년 오키나와 시정권(施政權)¹⁾의 일본 '반환'이 기정사실화된 후, 오키나와 사회는 다시 한 번 거센 풍랑에 휩싸였다. 1879년 '류큐 처분(琉球處分)'에 이어 195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서부터 분리되어 미국 군정부²⁾의 신탁통치를 받은 이래, 1971년 일본 중의원(衆議院) '오키나와 반환협정특별위원회'가 반환협정의 가결을 강행한 것은 진보세력이 세 번째로 배신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1952년과 달리 1972년은 당시 미국 군정부 신탁통치 하의 부자유한 상태에서 '류큐 정부'가 설립되었고, 이는 류큐 사회에 격렬한 반발과 함께 일본복귀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72

1) (옮긴이 주) 시정권(施政權): 신탁 통치 지역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

2) (옮긴이 주) 미국 군대는 1945년 3월 26일 오키나와에 상륙한 후 4월 5일 류큐 열도 미국 군정부를 설립하였다. 1950년 12월 15일, 류큐 열도 미국 민정부(USCAR)로 개칭하였으며, 1952년 4월 1일 군도(群島) 정부를 폐지하고 류큐 정부를 창설하였다.

년 오키나와 반환협정 체결 당시, 류큐 사회에는 복귀를 둘러싸고 상이한 방향들이 나타났다. NHK의 「오키나와현민조사」에 따르면, 1973~1977년 간 오키나와 민중의 복귀 찬성률은 최저점을 기록해,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을 상회했다. 이러한 상황은 1982년이 되어서야 완화되기 시작했다.³⁾ 아라사키 모리테루(新崎盛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사회에 야기한 각종 침해 문제가 복귀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기존의 통화였던 미국 달러가 일본 엔으로 교환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가 민중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일본 복귀 후의 유일한 변화는 사회 제도가 일본과 일체화(一體化)되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오키나와 민중의 사회생활은 일본의 정치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은 1960년대 말 미국이 오키나와 지배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오키나와 민중이 항쟁을 통해 획득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회 환경과 매우 대조적이었다.⁴⁾

바로 이처럼 오키나와 민중이 일본에 대해 강렬한 실망감을 느끼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민족 자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찍이 류큐가 폐번치현(廢藩置縣)⁵⁾을 통해 사츠마번(薩摩藩)의 통제에서 벗어나 ‘오키나와 현’이 되어 자주권을 가졌던 때, 이미 오키나와 민족 자결 의지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제까지 발육할 공간을 충분히 얻지 못해 자라나기 어려웠다. 근대 사회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통치 질서를 확립해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자주를 모색하는 가운데 국가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구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3) 이상의 수치는 新崎盛暉, 『沖繩現代史』(東京: 岩波書店, 2005), 부록에서 재인용.

4) 新崎盛暉, 위의 책, pp.55~56.

5) (울긴이 주) 폐번치현(廢藩置縣):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1년 영주가 다스렸던 지방 조직인 번(藩)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 간 변화무쌍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류큐가 하나의 독립된 정치체로서 독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특히 1945년 미군이 오키나와에 강제로 상륙한 후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에서 나날이 커지는 종양이 되었다. 미군은 오키나와의 어업 발전을 통제하고 심지어 붕괴시켰으며, 자주적인 무역 경제 역시 억압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합작 아래 오키나와 본래의 경제 구조는 빠르게 쇠퇴하였고, 기형적인 기지경제(基地經濟)가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본래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류큐 군도는 어쩔 수 없이 미군 기지의 건설과 소비, 그리고 일본 정부의 기지 보조금을 주요한 경제적 버팀대로 삼아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1972년 일본 복귀는 오키나와에 어떠한 개선도 일으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복귀 후 일본 본토 미군기지의 오키나와 이전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오키나와는 일본의 거대 자본 집단이 재물을 긁어모으는 기지로 전략하였다. 그 결과 오키나와는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주권에서도 역시 자결의 조건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민중은 결코 독립의 의지를 상실하지 않았다. 1952년 일본에서 분리된 후 오키나와의 독립 의지는 미국 군정부에 대한 저항 투쟁 속에서 자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표현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초 시작된 일본복귀운동 역시 자치권 쟁취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 복귀를 주장하는 일부 사회 운동가의 입장에서 일본 복귀는 그저 오키나와 사회가 미국 점령 상태에서 더욱 많은 자치 권리를 확보하려는 책략에 불과했다.⁶⁾ 오키나와 사회는 1952년 미국의 신탁통치, 1972년 시정권의 일본 반환이라는 극히 상반되는 두 단계를 차례로 거쳤기 때문에, 이 두 시기 출현한 복귀와 복귀반대 운동의 지향점 및 내용 역시 상이하다. 만약 이전 시기의 일본복귀운동이 아직 민주

6) 鳥山淳, 『沖繩／基地社會の起源と相克: 1945-1956』(東京: 勁草書房, 2013), pp.138-147.

주의 일본과 평화 헌법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시기에는 그러한 기대가 거의 사라졌다. 오키나와 여론은 ‘핵보유 반환(核付
き返還)’과 ‘비핵화 반환(核抜き返還)’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었고, 그
것은 오키나와 민중이 일본에 대한 원망을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일본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사회에서 발생한 분열은 단순
히 복귀와 복귀 반대 사이의 대립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외부인의 입
장에서 보기에 단순하고 쉬운 대립 구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키나
와 사회 운동의 거대한 소용돌이의 수면 위로 떠오른 빙산의 일각에 지
나지 않는다. 만약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분열과 갈등 내
지 대립이 그저 복귀와 복귀 반대의 대립을 놓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이러한 대립 자체가 분열 속에서 이미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
렸음을 발견할 것이다. 차라리 진정한 분열은 “일본과 어떻게 함께 지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 관찰 시각을 국가 차원에서 민중 차원으로 조정한다면,
정치적 귀속문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즉
민중이 귀속을 선택하는 전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회 보장을 얻을 수
있는지, 수요에 부합하는 더욱 많은 생계 수단이 있을 수 있는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군 기지의 오키나와 주둔이 장기화
됨에 따라 고도로 왜곡된 기지경제 형태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지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끝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와 각종 형사사건, 미군기지 훈련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이 그 예이다. 그런데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의 한 현이 된 후 이러한 문
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대
해 정부가 응답 지녀야 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후텐마(普天
間) 군용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오키나와 민중은 결연하게 반대의 입
장을 고수해왔지만, 민주당이 짧은 집권 시기 동안 미약한 이해 자세를 내

보인 것을 제외하고, 자민당 집권 하의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에 고도로 협조하는 방침을 채택했으며, 각종 형식을 통해 완고하게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을 추진했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오키나와인이 귀속되기를 희망하는 곳이 아니다. 양자는 모두 오키나와 사회에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인들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독립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설사 현실적으로 독립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코소보전쟁과 같은 유형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은 단 한 번 본토에서 전쟁을 경험했다. 바로 미국의 오키나와 상륙 전투로, 오키나와인은 그 누구보다도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아름다운 군도 오키나와에서 전쟁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슈리성(首里城)은 산언덕마저도 모두 깔여 평평해져버릴 정도로 온통 폐허가 되었다. 후텐마의 경우, 오키나와 백성의 마음을 기탁한 신사 앞 아름다운 쇼인대도(松蔭大道)는 무참하게 훼손되어 버렸고, 미군은 상륙 후 그 위에서 곧바로 기지 건설에 착수하였다. 만약 독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한 번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절대 다수의 오키나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경험으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오키나와 사회에서 부상한 자주 자결 의식은 현실적인 귀속 문제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주체성의 관점에서 진정한 독립 정신을 확립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점에서 ‘오키나와 독립’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독립과 자결이라는 표현 방식은 오키나와 사회의 고난과 고통의 심정을 기탁한 것으로, 절대 그 문자의 표현만큼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치적 분리주의가 흥기하고 있으나, 오키나와 사회의 민족 자결 의식은 결코 간단

하게 일반적 의미의 분리주의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키나와의 사상가들은 고난의 역사와 불평등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통용되는 민족 독립 이데올로기에 발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지난한 선택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대안적인 사상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바로 가와미츠 「헌법」은 오키나와 사상 자원의 깊이를 보여준다.

II. 사상텍스트로서의 가와미츠 「헌법」

「헌법」의 머리말 부분은 긴박한 리듬감의 대구법을 사용한 문장이 한 호흡에 이어지며 인류의 흥망성쇠에 대한 논설을 이끌어낸다.

우라소에(浦添)로서 교만한 자는 우라소에에 의해 멸망하며, 슈리(首里)로서 교만한 자는 슈리에 의해 멸망한다. 피라미드로서 교만한 자는 피라미드에 의해 멸망하며, 만리장성으로서 교만한 자는 만리장성에 의해 멸망한다. 군비(軍備)로서 교만한 자는 군비에 의해 멸망하며, 법으로서 교만한 자는 법에 의해 멸망한다. 신에 의존한 자는 신에 의해 멸망하고, 인간에 의존한 자는 인간에 의해 멸망하며, 사랑에 의존한 자는 사랑에 의해 멸망한다.

과학으로서 교만한 자는 과학에 의해 멸망하며, 음식으로서 교만한 자는 음식에 의해 멸망한다. 국가를 도모하면 국가의 감옥에 살게 된다. 집중화·거대화된 국가 권력 아래 착취와 억압, 살육과 불평등, 빈곤과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전쟁을 피한다. 석양빛 아래 이미 모래 먼지가 되어버린 서역의 고도(古都)를, 혹은 놀란 새가 일별(一瞥)을 고하는 잉카 제국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무엇하러 저 지나가버린 문명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바로 지금 초토(焦土) 위에 서 있는데.

(중략)

호전국 일본이여, 호전적인 일본 국민과 권력자여, 그대들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시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류를 멸망으로 모는 동반자살의 길을 함께 할 수 없다.⁷⁾

우라소에(浦添)는 12~14세기 고류큐(古琉球) 시대 세 개 왕조의 고도였고, 슈리(首里)는 그 이후 류큐 왕국의 고도였다. 이처럼 가와미츠는 류큐의 역대 왕조 교체의 역사를 논하는 것부터 시작해, 인류가 그 어떠한 가치에 교만해지면 그로 인해 멸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인류사회의 딜레마를 예리하게 지적한다.

나는 작년 오키나와에서 가와미츠 선생을 만났을 때 그의 「헌법」을 중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답하길, 「헌법」의 머리말이 너무 어려워서 수정을 하겠으니 좀 더 기다렸다가 번역을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생각을 접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세상에 발표된 지 이미 많은 해가 흘렀기에 지금 다시 고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원형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 작은 일화는 매우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바로 가와미츠 「헌법」의 창작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로서, 특히 그 머리말이 특정한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첫 몇 단락의 서두는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한 기능을 맡으며 본문과 유기체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본인일지라도 30여 년 후 다시 그 안에 개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7) 川滿信一, 「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 川滿信一, 『沖繩發: 復歸運動から40年』(東京: 世界書院, 2010), pp.104~106 참고.
(옮긴이 주) 인용문은 중국어 글을 중심으로 번역하되 일본어 원문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원문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http://www7b.biglobe.ne.jp/~whoyou/bunkenshiryo.htm#kawamitsushinichi>) (검색일: 2014.11.13)

「헌법」 머리말의 어려움은 아마 그 ‘교만하다(驕る)’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단어는 인류의 뿌리 깊은 저열한 근성을 응집하고 있다. 바로 타인에게는 없지만 자신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조건에 대해 교만하게 굴며, 타인을 높은 곳에서 굽어보고 무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이 같은 병폐는 그저 인격 수양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습성으로 구현된다면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월감은 한 단계 나아갔을 때 차별과 배척으로 변할 수 있다. 우월감은 본래 그 자체로 반드시 차별과 배척의 태도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그 기초가 된다. 그리고 한 사회에 차별과 배척의 풍조가 만연할 때, 이 사회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가와미츠가 서두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교만함”의 대상 가운데 서구의 강세 사회 및 문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가 선택한 류큐의 역사, 그리고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근대 시기 열강에 의해 유린당한 제3세계의 두 문명은, 공통되게 자신의 문명에 교만한 상태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가와미츠는 보통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의 역사적 운명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즉 바로 이어서 그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 ‘군비’와 ‘법’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수차례 질의의 대상이 된 범주와 네 개의 실패한 문명의 부호가 나란히 놓이면서 글의 흐름은 갑자기 역전된다. 상식으로 보기에 한때 잘나갔던 ‘약자’와 오늘날 모든 정치체 내에서 강세의 위치에 있는 국가 수단은 이 동일한 문장 구조를 통해 갑자기 최대 공약수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가와미츠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한 문명의 쇠퇴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침입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착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나 중국과 같은 거대한 문명이든 우라소에나 슈리와 같은 작은 문명이든 간에 관계없이,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게 군다면 쇠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뒷부분이다. 가와미츠는 아무런 중간항 없이 갑자기 문장 구조를 바꾸는데, ‘교만하다(驕る)’라는 단어 대신 ‘의존하는(よった)’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 결과 글의 흐름에 다시 한 번의 역전이 발생한다. 그는 신, 인간, 사랑의 세 가지 대상에 의존하면, 역시 의존하는 자가 그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이 작품의 특수한 맥락에서 벗어나 이해한다면 가와미츠가 일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자라고 상상하기 쉬울 것이다. 추측컨대 이 때문에 바로 그가 애당초 머리말을 수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돌아가 그 역사와 함께 가와미츠가 끝내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이해한다면, 이상의 난해한 인용문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와미츠가 이 ‘헌법’을 창작한 시기는 바로 오키나와와 일본이 모두 극도의 혼란에 처했던 때였다. 일본 복귀 이후의 상황은 오키나와 민중들의 격렬한 불만을 야기했으며, 오키나와 사회의 사상엘리트들은 유례없이 험난한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였다.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사토-닉슨 회담을 전후하여⁸⁾ 오키나와 자치의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결국 오키나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에 복귀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⁹⁾ 오키

⁸⁾ (오키나와 주) 1969년 11월 19-21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닉슨 회담의 미일 공동성명을 말한다.

⁹⁾ 예를 들어 당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후,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본토와 동일한 수준에서 미일안보조약 및 지위협정의 조건을 향유함으로써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에서 철수시킬 것인가였다. 당시 오키나와 사회 내부에는 심지어 극단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바로 본토의 일본인이 원자폭탄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일본이 비핵국가라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줄곧 오키나와를 불공평하게 대우했던 일본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는 것이다.

나와 자치의 요구가 일본 복귀로 대체된 후, 오키나와인이 어떻게 자신의 주체적 의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상황 속에서 굴절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배반당한 오키나와 사회는 어떻게 일본의 다른 현과 평등한 권리를 쟁취할 것인가의 문제를 현실적인 과제로 삼았다.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에서는 미군기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미군기지 축출 여부가 문제의 관건이 되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오키나와의 자치 요구 운동은 멈춘 적이 없지만, 미군기지의 존재 및 강화로 인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오키나와 사회는 미군기지가 끝없이 야기하는 재난에 직면하여 일본을 선택했고, 또한 한동안 일본에 기대를 품었다. 즉 미군기지에 대한 저항에서 일본 정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1981년, 때마침 오키나와 시정권 일본 반환 협정 체결 10주년인 해, 오키나와 지식계에 가와미즈 「헌법」을 포함한 세 편의 ‘헌법’이 출현했다. 세 편의 헌법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가와미즈 「헌법」과 다른 두 편의 헌법(헌장)은 지향점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세 헌법은 모두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자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비판하며 자치에 대해 사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세 편의 헌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내려진 지난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들의 탄생은 1980년대 초 오키나와 사회 특유의 시대적 분위기, 즉 자치의 길에 대한 모색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을 반영한다.

가와미즈 「헌법」의 탄생은 비록 오키나와 사회의 자치 요구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의 자치 분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머리말 부분에서 이 같은 거리감이 집중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즉 그것은 현실의 미·일 양국의 강권 정치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서의 오키나와 사회 자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머리말에서 신과 인간, 사랑에 의존하는 방식에 제기한 부정의 명제는 문제를 극한으로까지 첨예하게 밀고 나간다. 신에게 의존하여 구원을 꾀한다면 신에게 배반당할 것이고,¹⁰⁾ 인위의 주체에 의존한다면 자연을 경시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사랑에 의존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인해 위협 받아 원한으로 바뀔 것이다.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논술들은 이렇게 사상의 함정을 드러내었다. 바로 것처럼 귀중해 보이는 가치가 인류 사회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재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가와미츠는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약자가 재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강자의 패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약자 자신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패권에 반대할 것인가? 다시 말해 약자가 의존하고 있는 사상의 무기는 만약 비판을 거치지 않으면 강자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와미츠는 여기서 나아가 “자유라는 명분의 자발적 예속”¹¹⁾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교만함이라는 일상적인 사

¹⁰⁾ 나는 가와미츠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상징하는 신도(神道)를 특정해서 가리킨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1970년 일본 복귀의 풍조 속에서 당시 사회의 사조를 주도하던 오키나와 엘리트 중에는 여전히 신도를 독실하게 믿으며 일본 천황에 대한 경애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었다.

¹¹⁾ 2013년 12월, 가와미츠는 도쿄외국어대학에서 개최한 『자발적 예속을 타파하기(自發的隸從を撃つ)』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자발적 예속”이라는 표현 방식은 프랑스 사상가 에티엔 드 라 보에티(Étienne de La Boétie, 1530~1563)의 저서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자발적 예속을 배격한다)』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와미츠가 계속해서 주목해오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식을 핵심으로 하여 가와미츠 「헌법」을 이해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옮긴이 주) Étienne de La Boétie,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Paris: Éditions Mille et une nuits, 1997). 영문판은 *The Politics of Obedience: The Discourse*

회 분위기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회 상황을 연결하여, 어떠한 문명도 약소함이 아닌 교만함 때문에 멸망한다는 통찰력 깊은 분석을 내놓는다. 이처럼 비판 정신으로 충만한 머리말과 대조적으로 「헌법」의 본문은 가와미츠가 “자발적 예속”이라 지적한 현대의 사회 형태에 대해 이상적인 사회 구조 방식을 제기하였다. 이 헌법의 머리말은 본문과 더불어 긴장감을 지닌 구조를 형성하였고, 그것은 국가의 존재 방식이 아닌 인류의 생존 방식에 대해 유기적인 질문을 만들어냈다.

가와미츠 「헌법」은 사상사 연구에 매우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한다. 분명 이 「헌법」은 현실에 직접적인 투쟁 전략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만약 그것을 리얼리즘의 텍스트로 삼아 읽는다면 머리말이 제시한 비판들을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것이고, 그 결과 머리말이 오키나와 독립을 주장한 것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그것을 유토피아의 텍스트로서 읽는다면 본문이 실제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감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비판은 「헌법」의 발표 이래 줄곧 존재하였다. 가와미츠 본인 역시 탄식하기를, 자신은 중국 고대의 시인처럼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창작할 수 없으며, 그의 작품은 모두 끓는 기름 솥 속에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와미츠 「헌법」에 대한 이상의 두 비판은 오키나와의 가혹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키나와 사회가 여전히 미군기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오키나와와 일본의 양식 있는 인사들이 다시 한 번 「헌법」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의 기능이 오키나와 독립 실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of Voluntary Servitude, translated by Harry Kurz and with an introduction by Murray Rothbard, (Montréal/New York/London: Black Rose Books, 1997) 참고.

다.¹²⁾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점에서 가와미츠 「헌법」은 마침내 사상텍스트로서 토론과 공유의 계기를 얻은 것이 아닐까?

Ⅲ. 오키나와 ‘공동체 생리’의 영혼

하나의 사상텍스트로서 가와미츠 「헌법」은 결코 헌법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헌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으로, 현실 정치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수렴될 수 없는 사상적 기능을 맡고 있다.

「헌법」은 그 표제에서부터 국가를 부정한다. 그것은 사회의 총체적 의지의 구현이지 국가의 통치 도구가 아니다. 머리말의 서두에 나온바 우라소에와 슈리가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논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와미츠는 단지 강대국만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약소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부정하며, 약소국이 강권에 저항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을 강화하는 논리를 부정한다. 그러나 반국가가가 이 「헌법」의 진정한 주제가 아니며, 가와미츠를 무정부주의자로 보는 것 역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는 어떠한 형식의 폭력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폭력에 대한 반대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가와미츠의 ‘류큐공화사회’는 ‘류큐공화국’의 대립물이라기보다는 각종 명분하의 폭력적 지배와 자발적 예속의 대립물이다. 만약 굳이 어떠한 ‘주의’로 이 「헌법」을 자리 매겨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평화

¹²⁾ 만약 오키나와 독립 실현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두 편의 헌법 및 헌장과 비교해 가와미츠 「헌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독립론에 가장 불리한 것이다. 그것의 반국가적 성격과 철저한 반폭력의 특징은 현실 속의 독립파에게 사상적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

주의의 걸작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평화주의의 시각에서 출발해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면하기 어렵다. 평화주의의 이념은 분명 이 작품의 반폭력 기조를 구성하지만, 작품의 정수를 드러내 보이지는 못한다. 그것은 평화주의의 핵심적인 문제, 즉 평화와 폭력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주목하는 것은 평화를 구성하는 기초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외부의 강권적 폭력에 대한 저항 방식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절대적 평화주의와 상대적 평화주의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폭력, 특히 군사적 침입에 대한 대응 문제 또한 거의 논하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항이 관련되면 그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갈 뿐이다(제13~15조). 「헌법」에서 대량의 규정이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권력의 맹아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탐욕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와미츠는 기본이념 부분에서 자연계를 포함한 만물에 대한 자비의 원리에 의존하여 호혜호조(互惠互助)의 사회 제도를 창조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이는 과학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세계, 인류를 중심으로 한 현대화된 소비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이와 같은 기본이념에 호응하여 제4조, 6조, 35조, 36조, 50조, 51조, 52조, 53조 등은 각각의 방면에서 소비와 생산이 인간의 기본 생존 수요를 초과하거나 자연계의 평형을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며, 인간과 자연이 신중하게 공존하는 사회 상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여기에 상응하여 제6조, 7조, 18조, 19조, 22조 등의 항목은 차별을 근절하고 상호 원조하는 방식을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부를 핵심으로 하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관철하는지, 그리고 각종 형식의 강제를 폐지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였다. 「헌법」은 또한 사회생활의 여러 방면에도 주의를 기울여, 사유권 폐지에서부터 노동 분업 및 교육과 개인 자질

의 상호 부합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와미츠는 이상의 소박하면서도 근본적인 성격을 지닌 일련의 규정들을 기초로 하여 류큐공화국 및 사회의 조직 형태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 기구가 없는 사회이다. 그것은 구성원이 유동적인 대표제 중의(衆議) 기구를 지니며, 산하에 연락 및 조정기구를 갖고 있다. 전문가 위원회와 집행 위원회로 구성된 연락 및 조정기구는 중의 기구에 대해 상이한 자치체 간의 협조와 자치체 내부 각 항목의 대비책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으며, 또한 승인 후의 집행을 책임진다. 공직은 일률적으로 교체제를 실행한다. 대표제 중의 기구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치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좁은 의미의 정치학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가와미츠 「헌법」은 정치를 소거한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헌법은 조화가 불가능한 사회 충동을 거부하고, 인류의 욕망이 초래한 탐욕과 박탈 및 투쟁을 거부한다.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자비의 원리’는 현행 정치 세계의 기본 논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가와미츠 「헌법」이 유토피아적이라고 여겨지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다. 동시에 이 작품은 류큐사회 촌락의 관습법 색채가 가득하여, 국가 법률기구가 설립한 성문법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와미츠 자신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 그의 「헌법」은 결코 헌법 이념을 연구 및 고찰하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 자신의 소년기 촌락 공동체 생활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가와미츠 「헌법」은 류큐의 전통 생활 속에서 형성된 관습법이 다시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모색한 작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1년 발표된 오키나와 사상가 오카모토 케이토쿠(岡本惠徳)의 명저 『수평축(水平軸)의 사상—오키나와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¹³⁾는 가와미츠 「헌법」과 가장 좋은 호응을 이루고 있다.¹⁴⁾

오카모토의 논문은 다방면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역시 오키나와 민중의 ‘관습법’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가와미츠와 상통하여, 역시 현대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한다. 오카모토는 오키나와 사회의 무의식화된 ‘근대 콤플렉스’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것이 바로 오키나와의 일본복귀운동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오키나와학을 개창한 이하 후유(伊波普猷)¹⁵⁾에서부터 시작해, 일본에 대한 동일시와 현대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오키나와의 잠재적인 ‘낙후’ 콤플렉스가 결합해 존재함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이하는 비록 오키나와가 본토와는 다른 문화 풍토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류큐와 일본을 동일시하여 지체 없이 ‘근대’¹⁶⁾를 추구할 목표로 삼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았다. 이처럼 본토의 차별 정책에 저항하면서도 현대화라는 목표는 의문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상에 일종의 오류가 생겨났다. 바로 오키나와인이 본토의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비하가 생겨난다는 인식이다.

13) 谷川健一 編, 『沖繩の思想』叢書わが沖繩 第6卷, (東京: 木耳社, 1970.11) 참고. 중국어 번역은 雷啓立 執行主編, 『熱風學術』第四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참고. 『沖繩の思想』에는 이 밖에도 가와미츠의 논문 “沖繩における天皇制思想”이 수록되어 있다.

14) (웁긴이 주) 오카모토에 대한 쓴거의 분석은 또한 쓴거, 「민중시각과 민중연대」, 『창작과 비평』 제39호 (2011)를 참고.

15) (웁긴이 주) 이하 후유(伊波普猷, 1876~1947)는 오키나와 나하(那覇)시 출신의 민속학자이자 언어학자이며 오키나와학의 대부로 불린다. 동경제국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후 오키나와에 돌아와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오키나와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저서로 『沖繩考』(東京: 創元社, 1942), 『琉球古今記』(東京: 刀江書院, 1940), 『古琉球の政治』(東京: 郷土研究社, 1922)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전성곤이 옮긴 『고류큐의 정치』(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0)가 소개되어 있다.

16) 일본어에서 ‘近代’는 현대화(現代化)와 현대성(現代性)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자기비하에 대한 이 같은 해석 방식은 오키나와의 대표적 시인 야마노구치 바쿠(山之口夔)¹⁷⁾의 대표작인 『회화(會話)』에 대한 오독을 초래한다. 즉 그것이 본토의 차별의식, 그리고 오키나와인의 자기비하 표현과 저항이라고 이해하는 식의 오독이다. 오카모토는 자기비하와 반차별 태도가 지닌 의미를 세밀하게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저항의 대상을 그 자신의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가 느끼는 것은 자신이 본래 응당 받았어야 할 물질적·정신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자신을 차별하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느끼는 바에서 기인한다. 즉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의 가치관에 대한 고도의 동일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키나와 복귀 문제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차별적 구조가 오키나와인의 자기비하를 야기했다”는 인지구조가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일본의 현대화 모델에 대한 동일시이다.

오카모토의 이 같은 분석은 상당히 방대한 사상적 시야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그의 정확한 지적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 및 자기비하를 반대하는 시각 속에는 현대화 이데올로기의 생산자와 추동자인 일본 국가가 절대화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현대화라는 이념(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개인의 주체성과 이성 관념이다)을 동경할 때 오키나와 사회에 생기는 가장 큰 환상은 그러한 이념이 국가 의지를 매개로 함을 가변이 여기는 것인데, 그 결과 어떠한 매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이념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오키나와 ‘근대’의 특징일 뿐

17) (옮긴이 주) 야마노구치 바쿠(山之口夔, 1903~1963)는 오키나와 출신의 시인으로 본명은 야마구치 유사부로(山口重三郎)이다. 197편의 시를 창작하였고, 시집 『思辨の苑』(1938), 『山之口夔詩集』(1940), 『定本山之口夔詩集』(1958), 『鮪に鯛』(1964)을 발표하였다.

만 아니라 또한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사회운동이 지닌 맹점이기도 하다.

둘째, 오키나와 사회의 혈연공동체식(式) ‘전근대’적 생활 방식을, 도쿄로 대표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화된 생활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대’에 대한 상상에서 벗어난다는 전제하에 오키나와의 ‘자립’이 대체 어떠한 내용인지를 새롭게 질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키나와는 신중한 태도로 지난한 사상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오키나와 사회는 이미 일본에 거의 동질화된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 정도 역시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추동하는 동질화와 차별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줄곧 본토와 오키나와의 비판적 지식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가 보기에 이러한 비판은 비록 가치는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는 날카롭게 질문한다. 편견과 기성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논술에 의지해 ‘오키나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되는 시점에서 오키나와 케이트쿠가 묻는 것은, ‘복귀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복귀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키나와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선택도 진정한 자립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오키나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상의 곤경을 용감하게 직시한다. 그 곤경이란 바로 오키나와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할수록 적합한 언어는 더욱 찾을 수 없게 되고,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키나와는 그 노력들 속에서 실체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언어는 모두 왜곡되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기에 한층 더 왜곡되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야마노구치의 『회화』를 읽는다. 시의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가 어디 사람이냐고 묻자, 그녀에게

오키나와의 이미지에 관해서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남쪽의 섬나라라고 대답할 뿐 끝내 ‘오키나와’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 같은 예술적 표현이 자기비하 혹은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과 다르게 오카모토는 그것을 오키나와인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표현의 고통, 즉 적합한 자기표현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이미 지나치게 널리 사용되어 굳어진 ‘오키나와’라는 단어의 사용을 회피하면 물론 수많은 기존 관념 내지 입장까지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카모토는 글의 말미에서 일본 본토에서 일하는 오키나와 여자아이의 예를 인용한다. 그녀는 ‘오키나와인’을 망신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심지어 공장주의 노동기본법 기준을 초과한 착취까지 견뎌낸다. 오카모토는 그녀의 의식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저 무력감을 느낄 뿐이라며 탄식한다. 왜냐하면 그로서는 그녀가 납득할 만한 해석의 논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평축의 사상』은 바로 이 ‘오키나와 논리’의 해석을 모색한 걸작이다. 오카모토는 가와미즈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정부가 서로 결탁하면서도 동시에 다투는 실태를 비판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또한 오키나와를 일본과 미국이 펼친 차별 정책의 희생물로 보는 데 만족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투쟁을 오키나와 원리의 기본 논리로 삼는 데 그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너무나 충분치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사상의 진입로를 찾아 다른 사고의 공간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오카모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오키나와의 혈연공동체가 형성한 질서감각은 비록 류큐의 강제 합병 이후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교묘하게 이용당하였고 심지어 전시와 전후 복귀운동 속에서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덮여버렸지만, 그러한 질서감각 자체는 결코 국

가 이데올로기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비록 역사의 특정 단계에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나 ‘애국주의’와 일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질서는 결코 ‘공동체의 생리’를 대체할 수 없다.

오카모토는 ‘공동체의 생리’라는 생물학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내재적 규범, 사상, 이성 등의 범주와 구별되는 공동체의 생존의 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의미 전체는 바로 공동체 생존의 지속을 가리킨다. 하나의 살아 있는 ‘생명체’인 공동체의 생리는 예를 들어 ‘신’과 같은 절대화된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공동체 내부에서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와의 거리를 근거로 자신의 유동적인 도덕 및 질서의 기준을 규정한다. 이것은 일종의 수평축 위의 질서감각으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미치는 외재적인 강제 규범과 달리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질서의 구조를 설정한다.

오카모토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은 오직 개인과 개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국가(조국)’, ‘이민족’과 같은 개념은 일상 생활 속의 현실적인 존재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생리와 연결될 때, 또한 공동체의 존망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발휘할 때만 일정 정도 작용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메이지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를 통치할 때 국가의지를 민중 생활의 심층에까지 완전히 침투시킬 수 없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운동이 출현하였을 때 많은 내부의 논쟁이 야기된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것처럼 소외 상태를 벗어나 자아의 복귀를 시도하는 운동이 공동체 생리의 기본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한 ‘조국’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민족 통치’가 초래한 현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대립면으로서 ‘조국’을 이상화했던 것일 뿐이다.

오카모토는 공동체의 ‘수평축’ 질서감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중의 시각과 지식 엘리트의 시각 사이에 존재하는 방향의 차이를 구별한

다. 그는 오키나와 전쟁 말기 도카시키(渡嘉敷) 섬 주민이 강제로 '집단지살'을 해야 했던 잔혹한 사건을 예로 들어, 이 사건에 대한 민중적 시각의 감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카시키 섬의 집단자살 과정에서 민중이 구현해 낸 공동체의 의지는 불가항력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차피 함께 살 수 없다면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방식으로 환상 세계의 '공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은 분명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현대 이성과 맞지 않는다. 그러나 오카모토가 보기에 공동체의 생리는 결코 도카시키 섬의 비극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비극의 원인은 바로 전쟁을 불가항력적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분위기, 고립무원의 자연 조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에게 강제되던 일본군의 권력 의지를 거역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던 판단이다.

오카모토가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만도, 공동체의 생리를 '낙후한 혈연관계'의 범주에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복잡한 사상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후 시기 발생하여 1970년대까지 이어졌던 대중적 일본복귀운동이 단순히 '본토 지향적'이 아니라, 동생공사(同生共死)의 공동체 생리를 기초로 하였다는 것이다. 오카모토가 제기하는 문제는 만약 이러한 복귀운동이 의지하고 있는바, 이민족 통치에 대한 저항과 생활속 위기감의 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체 생리 기제를 동원하였다고 한다면, 복귀 이후 이러한 동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사회 조직 기제를 대체한 것은 '진보'에 대한 갈망이었는데, 이것이 거꾸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동질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관련해 계급의 시각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카모토는 이러한 올바른(正しい) 원리가 과거와 현재 일본 국가가 교묘하게 공동체 생리를 이용해 통치하는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효과적인 사상적 도구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오카모토는 좀 더 도전적인 질문까지 던진다. 생존 감각을 기초로 한 오키나와 민중의 ‘공동체 의지’는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용당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전환 가능성을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오키나와의 사상’이 존재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논리화된 체계로 확립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오키나와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떠한 사회의 대중 사상을 논할 때라도 모두 이와 같은 곤경이 발생한다. ‘근대’에 대한 환상을 폭로하고 타파하는 것, 민중에 대한 지식 엘리트의 체계화되고 이론화된 논술을 거절하고 민중의 생활 논리 그 자체에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 이는 기존의 국가론과 반국가론을 전복하는 출발점이다. 오키나와는 그 고유의 가혹한 상황에서 가와미츠 신이치, 오카모토 케이토쿠와 같은 사상을 지닌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비애를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오키나와가 일본과 미국의 거래 조건으로 전략한 불리한 처지를 역전시켜, 국가와 ‘근대’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사상을 창조해냈다.

1970년대 초 오카모토와 함께 같은 논문집에 「오키나와 내부의 천황제 사상」¹⁸⁾을 발표하였던 가와미츠 신이치는 십여 년 후 당시 그와 오카모토가 공유했던 사상적 과제를 추진했다. 가와미츠 「헌법」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키나와 ‘공동체의 생리’라는 과제이다. 그는 ‘자비의 원리’를 이용해 당시 오카모토가 표현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오키나와’에 형상을 부여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키나와 자립의 목표를 찾고자 하는데, 그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키나와인가’를 따져 묻는다. 오카모토가 말했던 것처럼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오키나와의 전후 세대는, 그들이 국가를 상대화함과 동시에 오키나와 자립 사상을 사고할 때, 그 사상적 기반이 완전히 오키

18) (오키나와 주) 각주 13 참고.

나와 전투(沖繩戰)¹⁹⁾의 체험 속에 존재한다. 가와미즈 「헌법」은 전쟁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권력욕과 폭력적 수단을 거부하고, 실컷 유린 당해왔던 오키나와 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전달한다. 그것은 외재적인 국가 폭력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사회 자신 역시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통치 계층의 권력뿐만 아니라 민중 공동체 생리의 핵심까지 가리킨다. 가와미즈와 오카모토, 그리고 반전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수없이 많은 오키나와인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안주하지 않음으로써 비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IV. 가와미즈 「헌법」이 인류 정신사에서 지니는 의미

평화와 전쟁, 우호와 폭력은 인류 정신사의 오래된 주제이다. 평화주의와 관련된 정치철학의 토론은 매우 많으며, 평화와 관계된 사회 운동도 일어났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해왔다. 비록 평화에 호소하는 것이 전쟁을 철저하게 소멸시킬 수는 없었지만, 인류 정신 속에 평화의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까지, 폭력과 평화에 대해 부여하는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국가와 전쟁,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 평화의 ‘인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평화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칸트는 집권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이 주제가 결코 쉽게 실현

19) (윤진이 주) 제2차 세계대전 말 1945년 3월 말부터 6월 23일까지 발생한 전투로,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면전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오키나와 민간인 12만여 명이 사망하였다.

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구평화론」에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를 붙였고, 또한 서론에서 이론가의 공허한 관념은 국가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공허한 관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20세기 인류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전쟁은 이미 루소와 칸트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인류 최악의 재난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평화의 호소는 유례없는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세계연방정부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결코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 사상 중 세계 연합정부에 대한 이론적 구상(그 대표자가 바로 칸트이다)과 미국 연방주의자들의 실천을 기초로 삼고 2차대전 후 전지구적인 반전 정서에 힘입어, 국지적인 시도에서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행동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연방정부 운동은 일련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미국의 운동가들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에, 출현 후 곧바로 소련의 저지를 받았다. 사실상 냉전 구조의 형성을 막고자 하는 시도였던 이 운동은 결국 현실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냉전 구조에 의해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원칙상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지식인과 사회 운동가들에게서 온 정치적 기획이 사실상 식민지 문제를 진정으로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이 근거를 두었던 원리는 대체로 구미의 국가 의지가 만들어 낸 인권 개념과 국제법 개념을 부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위 세계연방정부라는 것은 구미 연합정부의 확대 및 수정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으로 충만했던 이 운동이 역사에 새긴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1948년 세계연방정부 운동의 룩셈부르크 대회에서 세계헌법소위원회가 다수의 세계헌법초안을 포함한 보고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인문학자 11명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세계헌법 시카고초안」²⁰⁾이다. 그것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구상에서 인류 공동의 목표는 정신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의에 기초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여러 나라 국민들의 정부는 주권을 하나의 정의로운 정부에 위임하고, 각자의 무기를 이 정부에 인도하여, 세계연방공화국의 맹약과 기본법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시대는 끝났다. 인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²¹⁾

「세계헌법 시카고초안」은 단일한 국가의 초안이다. 그것은 전쟁을 부정하지만 국가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폭력을 부정하지만, 법률이 허락하는 폭력적 침해에 반대하는 폭력은 유지하였다. 그것은 개인과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종적, 민족적, 교리적, 그리고 문화적 정복을 부정하지만,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자연법을 세계 공화국의 성문법으로 삼을 것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인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네 가지 요소(토지, 물, 공기, 에너지 자원)를 인류 자산의 공공성으

²⁰⁾ (웁긴이 주) “Preliminary Draft of a World Constitution”은 이른바 시카고 초안으로 불리며, 1948년 3월에 발표된 세계헌법의 예비초안이다. 편찬 위원 11명은 다음과 같다. Robert M. Hutchins, G. A. Borgese, Mortimer J. Adler, Stringfellow Barr, Albert Guérard, Harold A. Innis, Erich Kahler, Wilber G. Katz, Charles H. McIlwain, Robert Redfield, Rexford G. Tugwell. 헌법의 원문은 다음을 참고. <<https://www.questia.com/read/505583/preliminary-draft-of-a-world-constitution>> (검색일, 2014.11.13)

²¹⁾ (웁긴이 주) “Preliminary Draft of a World Constitution,” Preamble, p.3.

로서 강조하지만, 이 요소들이 어떻게 사실상 상이한 규모의 사유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식민지였던 후발국가가 어떻게 주권을 획득하여 국제사회로 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족 독립의 단계를 뛰어넘어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곧바로 인류 시대로 진입하였다.

한 때 「세계헌법 시카고초안」의 기안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는 이 위원회를 도중에 사퇴하고, 헌법 초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 비판의 골자는 이 운동이 상이한 종족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였고, 기존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연사회(地緣社會)의 문화 및 역사의 공통성에 기초해 형성되었음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아직 사회적 공통성이 형성되지 않은 때 설립된 세계정부는 곧 인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위적인 힘에 의존하여 정부를 만들고, 다시 정부에 의존하여 사회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 내부의 결합 능력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힘에 의존해 연방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질서를 위해 정의를 희생하거나, 정의를 위해 질서를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니버는 세계정부가 현실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화’라고 여겼으며, 이와 상대되는 ‘세계사회’라는 이념을 제시하였다.²²⁾

세계연방정부의 이념은 확실히 핵심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 결함으로 인해 그것은 유토피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

²²⁾ 谷川健一, “世界政府が それとも世界破滅か—世界連邦政府運動と世界憲法,” 『中央公論』(1949.10), 이상의 세계정부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이 글에서 인용함.

분 니버의 예측대로 강대국의 패권 확립을 미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세계헌법 시카고초안」 본래의 취지인 것은 아니며, 또한 발표 당시의 헌사를 보아 「초안」은 여전히 기념할 만한 문헌이다.

“만약 1948년 1월 30일(주: 간디가 암살당한 날이다) 이전에 세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간디가 당선되었을 것이다. 약소민족이 모인 대다수와 서구 백인에게서 온 상당수의 표가 간디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어, 다수의 국민이 추대한 또 다른 두 명의 강력한 후보 스탈린(Joseph Stalin)과 처칠(Winston Churchill)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의 세계’가 가졌었던 초대 대통령으로서 죽은 것이다.²³⁾

간디와 스탈린 및 처칠 간의 대립은 1940년대 말 전쟁이 한 세대에 초래한 심각한 충격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시기 오키나와는 마침 샌프란시스코 조약²⁴⁾ 체결 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는데, 세계연방정부의 이상은 오키나와의 현실 앞에 무력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30여 년 후, 세계는 수차례의 국지전을 겪었으며 주도적 위치를 점한 국가는 기존의 국면을 유지하고자 했고 불리한 위치에 처한 국가는 더욱 유리한 위치를 획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은 모두 전쟁을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키나와의 사상가는 30여 년 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인류 시대’에 대한 외침을 내놓았다. 이것이 바로 가와미즈 「헌법」의 의의이다.

당시 니버가 ‘세계 사회’를 외쳤을 때 그는 이 ‘사회’의 의미가 무엇인

23) 谷川健一, 위의 논문, p.17.

24) (웁긴이 주)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연합국과 일본 간에 서명되어 다음 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일본과 연합국 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지 문제화되지 않았다. 세계 정부와 상대되는 ‘세계 사회’는 서구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사회’ 범주를 초월할 수 없었다. 오키나와 사상가의 ‘공동체의 생리’와 비교할 때 그것은 여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것이며, 게다가 최종적인 목표가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반면 가와미츠 「헌법」은 인류 정신사에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나타났음을 상징한다. 국가와 국가 기구에 대한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부정 정신은 오키나와가 겪은 백여 년의 고난과 굴욕에서부터 기원하며, 또한 오키나와 민중 공동체의 생리를 근간으로 한 분투와 항쟁에서부터 기원한다.

분명 가와미츠 「헌법」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30여 년 전의 「세계연방 정부 시카고초안」보다 더욱 강렬해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를 부정하고 폭력도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꾸로 가와미츠 「헌법」이 더욱 강한 현실 의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의 투쟁 현실이 이 작품의 이념에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여 운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헤노코 기지 이전 반대 운동이 철저히 비폭력 저항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선두로 한 수많은 평화 투쟁은 오키나와인이 폭력으로써 폭력에 저항하기를 피하는 것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베트남 전쟁 중 미군 군사 행동을 견제하는 것을 통해 베트남을 지지했던 것을 선두로, 오키나와인은 전쟁 중 ‘국가 이익’을 넘어서는 인류주의의 정서를 배양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토양 위에서 가와미츠 「헌법」이 싹트고 자라날 수 있었고, 비로소 오키나와의 공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가와미츠 「헌법」이 일본에서 다시 한 번 기억되고 되새김질 때 우리는 다시 유사한 시련에 직면한다. 즉 오키나와의 선배 사상가들은 오키나와를 넘어서는 사상의 자산을 제공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계승해야 할까? 이 작품에 그 답이 있다. 진정한 자립은 강대한 외재적 요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우월감을 제거한 평등의 심리 상

태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저항은 악으로써 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 가치를 견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이다. 이것은 결코 절대적 평화주의의 박애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키나와 민중이 수백 년 간 쌓아온 투쟁의 지혜이다. 가와미츠 「헌법」은 우리에게 말한다. 자립에 관한 또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인류를 대하고 전쟁과 폭력을 처리하는 것은 비록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영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바로 이 같은 진정한 자립정신이 인류 정신의 자질을 만들고, 사상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

■ 접수: 2014년 11월 17일 / 심사: 2014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6일

【참고문헌】

일본어 · 중국어 단행본 및 논문

谷川健一 編. 『沖繩の思想』 叢書わが沖繩 第6巻. 東京: 木耳社, 1970.

谷川健一. “世界政府が それとも世界破滅か—世界連邦政府運動と世界憲法.” 『中央公論』(1949.10).

雷啓立 執行主編. 『熱風學術』 第四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0.

新崎盛暉. 『沖繩現代史』. 東京: 岩波書店, 2005.

鳥山淳. 『沖繩／基地社会の起源と相克: 1945~1956』. 東京: 勁草書房, 2013.

川満信一. 『沖繩發: 復歸運動から40年』. 東京: 世界書院, 2010.

구미 단행본

Étienne de La Boétie.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Paris: Éditions Mille et une nuits, 1997.

Étienne de La Boétie. Harry Kurz, trans. *The Politics of Obedience: The Discourse of Voluntary Servitude*. Montréal/New York/London: Black Rose Books, 1997.

인터넷 자료

川満信一. 「琉球共和社會憲法C私(試)案」; <<http://www7b.biglobe.ne.jp/~whoyou/bunkenshiryo.htm#kawamitsushinichi>>

“Preliminary Draft of a World Constitution” Robert M. Hutchins, G. A. Borgese, Mortimer J. Adler, Stringfellow Barr, Albert Guérard, Harold A. Innis, Erich Kahler, Wilber G. Katz, Charles H. McIlwain, Robert Redfield, Rexford G. Tugwell; <<https://www.questia.com/read/505583/preliminary-draft-of-a-world-constitution>>

Realism and Utopia: Reading ‘The Unoffici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iety’

Sun, G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

Abstract

An Okinawan poet, Kawamichi Shinichi's, 'The Unoffici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iety'(1981) is full of Utopian imagination, and also includes awareness of reality, and historical contents. Kawamichi's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Okinawan society grown up through a series of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annexation of Ruykyus" in 1879, the trusteeship of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ion of the Ryukyu Islands in 1953, and the reversion of trustee power with fu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uthority to Japan in 1972. Moreover, the Constitution provides alternative sources of thought, and seeks for self-reliance, different from the prevalent segregationism over national liberty. It is also against any form of violence, and denies the state. Finally, it proposes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iety" as a counterpart to violent domination and voluntary subordination under any cause.

An Okinawan thinker, Okamoto Keitoku's 『Thought of a Horizontal Axis: Sense of Okinawan Community』(1971) is a text well corresponding to Kawamichi's 『The Constitution』. Okamoto oversets both conception of the

state and the anti-state, denies intelligent elitism over people, and finally approaches the logic of people's lives through conception of "community physiology". Once reading it along with the Okamoto's book, it Kawamichi's 「The Constitution」 provides an answer over a question, what Okinawa is, on which Okamoto endeavors. In consequence, both Kawamichi and Okamoto do not place Okinawa at the place of a victim, and provide Okinawan thought as the alternative way of thinking self-reliance.

Keywords: Okinawa, Kawamichi Shinichi, Okamoto Keitoku, Okinawan self-reliance, the Republic of the Ryukyuan Soceity, and community physiology

쑤거(孫歌. Sun, Ge)

일본 도쿄도립대학 법학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현대문학, 일본근대사상사, 비교문화를 전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연구원이다. 국내에 번역된 주요 저작으로는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원제: 竹内好という問い)』(그린비), 『아시아라는 사유공간(원제: 亞洲意味着什麼)』(창비) 등이 있다.

역자: 송가배(Song, Ga-Bae)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중국 현대(現當代)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중 비교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석사논문은 "韓少功 소설 「爺爺」의 해석적 긴장에 관한 연구"이다.

식탁에서 평화까지

: 식맹(食盲)을 넘어 식안(食眼)을 열다*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먹는 행위’와 ‘먹히는 음식’이 생명의 기본 원리를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음식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및 먹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자연철학적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의 지구화 과정에 담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거대 자본이 지배하면서 농업과 먹거리가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음식의 생산과정과 의미를 외면한 채 공장식 음식을 소비하는 데 머무는 ‘식맹(食盲)’의 결과이니, 음식의 자연적 원리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눈뜸, 즉 ‘식안(食眼)’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자 한다. 음식의 원리를 외면하거나 망각하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먹는 행위에 담긴 생명 법칙의 실천이 있어야 종교도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음식, 식맹(食盲), 식안(食眼), 식품 공정, 식량 소비, 유전자조작생명체(GMO), 푸드마일리지

* 원고지 40매 분량의 에세이(이찬수, “کم맹을 넘었다, 식맹도 넘어라,” 『식탁의 영성』,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pp.14~26)를 80매 분량(“食盲の克服, 平和のはじめ,” 『hīā』, vol.8(京都: 文理閣, 2014), pp.106~125)으로 확대했다가, 논문 형태로 재구성·확장·보완한 글이다.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길은 없다. ‘먹는 행위’와 ‘먹히는 음식’이 생명의 원리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탓인지, 음식의 원리, 음식을 먹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현대인 상당수에게 음식은 그저 생활 습관이거나 건강을 위한 상품이거나 ‘웰빙’의 수단일 경우가 많다. 어떤 이에게 음식은 소비재일 뿐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윤추구의 수단이며, 어떤 이에게는 심지어 무기도 된다. 어떤 이는 음식 때문에 행복해하고 어떤 이는 음식 때문에 불행해한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쓰레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굶어 죽기도 한다. 폭력적일 만큼 불평등한 현실이 지속된다.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은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굶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고, 남쪽에는 남은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연 1조원 가까운 돈을 쓴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모순된 언어가 일상화되다시피 한 와중에도 가난에 시달리고 굶주리는 이들이 있다. 음식의 불평등은 지속되며, 음식의 원리에서부터 더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음식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및 먹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자연철학적 차원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식의 지구화 과정에 담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 거대 자본이 지배하면서 농업과 먹거리가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음식의 생산과정과 의미를 외면한 채 공장식 음식을 소비하는 데 머무는 ‘식맹(食盲)’의 결과이니, 음식의 자연철학적 원리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눈뜸, 즉 ‘식안(食眼)’을 열어가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자 한다.

평화 자체를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음식의 원리를 외면하거나 망각하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먹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법칙에 부합하는 실천을 할 때에만 종교도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다. 문장의 형식과 낱말 선택의 차원에서는 에세이에 가까운 글이기도 하지만, 식맹과 식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소개하기 위한 논문이기도 하다. 현대인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음식에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염두에 두고 글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II.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안다

동학(東學)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의 법설 중에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안다(萬事知食一碗)”는 구절이 있다.¹⁾ 『해월신사법설』에는 ‘食’이라는 글자가 51회나 등장할 정도로 해월은 먹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인간의 먹는 행위에서 생활의 법칙, 우주의 이치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밥 한 그릇에 어떤 이치가 담겨있다는 말일까. 단순한 자연의 이치부터 다시 한 번 하나씩 따져보자.

밥 한 공기 that 식탁에 오르려면, 법씨가 있어야 하고, 하늘의 태양, 내리는 빗물, 부는 바람, 대지의 양분이 필요하며, 농부의 땀, 밥 짓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더 자세히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치 무수한 원인과 힘들이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람의 노력은 물론

1) 천도교중앙총부, 『해월신사법설』 중 「천지부모」 편.

이거니와 자연 전체, 전 우주가 모여 밥 한 공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해진다. 밥 한 공기는 한 마디로 전 우주의 합작품이다.

밥 한 공기까지 갈 것도 없다. 쌀 한 톨도 그렇다. 근대 한국의 대표적 생명운동가라 할 수 있을 장일순(1928~1994)이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락(벼) 한 알 속에 이미 우주가 들어있다.²⁾ 사람의 눈에 따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생명과 인간과 우주는 동일한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이다. 동양사상에 회통(會通)한 목사 이현주가 “콩알 하나에 무엇이 들었을까?” 묻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들어있다.”고 답하듯이³⁾, 쌀 한 톨, 콩알 하나에도 태양과 물과 바람과 땀, 그리고 수천, 수만 년 한결같이 버텨온 대지가 들어있다. 콩알 하나에 들어있는 씨눈 하나도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에너지들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콩알 하나, 나락 하나는 이미 우주적이다. 김지하의 다음과 같은 말에 담긴 의미도 똑같다.

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풀·벌레·흙·공기·바람·눈·서리·천둥·햇빛과 법씨와 사람의 정신 및 육체적인 모든 일이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쌀이요 밥입니다.⁴⁾

이런 맥락에서 해월이 남긴 “밥 한 그릇에서 만사를 안다(萬事知食一碗)”는 법설의 의미가 깊게 와 닿는다. “하늘로 하늘을 먹는다(以天食天)”는, 즉 밥이라는 우주를 먹고 인간이라는 우주가 산다는 그의 다른 법설도 마땅하고 옳다.

2)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개정판(서울: 녹색평론사, 2009)

3) 이현주 외, 『콩알 하나에 무엇이 들었을까』(서울: 봄나무, 2006), p.10.

4) 김지하, 『밥』(왜관: 분도출판사, 1984), p.61.

III. 음식이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약 백조 개 가까운 세포들의 집적체이다. 이 세포들은 끝없이 소멸하고 생성된다. 십년 안에 인간의 모든 세포는 거의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이 때 세포들의 순환에 필수적인 것은 에너지의 공급이다. 물, 산소, 음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유성과 상징성을 담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밥이 몸으로 들어오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열에너지로 바꾸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온 몸 곳곳으로 보낸다. 밥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밥이 인간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밥이 인간 안에 받아들여지려면 세포들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세포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들어온 밥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남혁이 서양의 속담(“I am what I eat”)을 인용해 지은 책 제목처럼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⁵⁾이다. 철학자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말처럼, 나는 몸의 선행적 주체가 아니라, 이미 세계 안에 던져져 그 원리에 따라 지각하고 경험하는 몸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이다.⁶⁾ 이 몸은 생물학적으로 음식에 의존한다. 나는 이미 몸 안에 있으되, 그 몸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이다. 나는 내가 먹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이다.

물론 이것은 철학자들만의 독창적인 사유나 언어는 아니다. 김지하도 진작에 문학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어머니의 젖은 우주의 곡식이요, 곡식은 우주의 젖입니다. 우주의 젖과 우주의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

5) 허남혁,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서울: 책세상, 2008).

6) 모리스 메를로-퐁티,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서울: 문학과지성사, 2002), p.307.

은 그래서 곧 우주인 것입니다. 우주를 먹고 사는 우주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가 먹는 음식물입니다.”⁷⁾

인간의 생명 현상에 먹는 행위만큼 근본적인 것은 없다.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식(食)’은 뚜껍(人)과 그릇(良) 모양이 합쳐진 상형문자에서 비롯되었지만,⁸⁾ 점차 ‘사람(人)을 좋게 함(良)’ 또는 ‘사람(人)이 좋아짐(良)’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밥을 먹는 행위만큼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은 또 없다. 먹음으로써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니 마음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먹는 일’, 즉 ‘식사(食事)’는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일이다.

IV. 범씨도 인간을 먹는다

인간이 밥을 먹는다라는 말은 밥이 인간에 의해 먹힌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밥은 인간에 의해 먹히기만 하는 것일까. 쌀 한 톨은 인간에 의해 먹히는 수단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관점을 바꾸어 쌀의 입장에서 보면 쌀이 인간을 먹는 것이기도 하다. 쌀이 우주를 먹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사람은 죽어 한 줌 흙이 된다. 심장이 멎으면 혈액 순환이 중지되고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몸들의 유기적 순환이 느슨해진다. 단단하게 엮혀있던 세포들이 해체되어간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 나가고 분해되어 결국은 땅의 일부가 된다. 분해된 몸의 일부는 민들레 뿌리에 흡수되어 꽃잎으로 피어날 수도 있다. 범씨와 뿌리 안에 스며들어 낱알의 일부

7) 김지하, “콩나물 얘기 좀 합시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p.10.

8) 하영삼, 『한자어원사전』(서울: 도서출판3, 2014), p.399.

가 될 수도 있다. 볍씨가 받아들이는 에너지 안에는 인간의 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땅이 되고 대기가 되고 물이 된 인간을 쌀이 다시 먹는 셈이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이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쌀의 입장에서 보면 쌀이 인간을 먹고 사는 셈이다. 쌀은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다시 인간을 에너지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인간의 몸이 쌀 한 톨이 되고, 여러 손길을 거쳐 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쌀도 인간을 먹는다.

어디 쌀 뿐이던가. 대지의 일부가 된 몸의 일부는 들풀의 에너지가 되고 벼의 뿌리로 들어가고, 벼짚은 다시 소가 먹는다. 들풀이든 벼짚이든 인간이 만든 사료든, 소도 무언가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해나간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밥 한 공기가 그렇듯이, 그 유기적인 관계성에서 보면 소 역시 사람의 몸을 생존의 에너지로 삼는 셈이다. 쌀 한 톨 속에 죽은 조상의 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어 볍씨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소의 일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먹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소도 사람을 먹는다. 생명은 무한한 순환 고리로 엮여 있다. 이것이 자연법칙이다.

V. 이미 주어져 있다

얼핏 생각하면 밥은 사람이 만든 것 같다. 과자는 공장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만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볍씨 없이, 태양 없이, 빗물 없이, 대지 없이 농부가 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의 태양을 받고 빗물을 머금어 나온 밀 없이 과자가 생겨날 수 있을까.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치즈 없이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이 먹는 음식은 모두 ‘주어져 있던 것들’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편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꾸는 등 가공을 줌 했을 뿐이다. 씨를 많이 심고 잘 가꿔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있지만, 쌀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쌀 비슷한 인공식품을 만든다 해도, 만들기 위한 재료 자체는 어딘가 어떤 형식으로든 주어져 있는 것들이다. 인간이 음식 재료 자체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라고 얻어진 것을 외형만 살짝 가공했을 뿐이다. 다소 종교적인 용어를 쓰자면, 음식은 모두 주어진 ‘선물’이다.

기독교 성서에서는 신이 에덴동산을 만들고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창세기 2,9)”고 한다. 신이 먹기 좋은 열매를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기도 전에, 먹을 음식이 먼저 주어져 있었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신화적 혹은 신앙적 상상의 표현이다.

어찌 음식만 선물이겠는가. 제 아무리 산해진미가 내 앞에 쌓여있어도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능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음식이라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을 때에야 음식이다. 다시 말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주어졌다는 뜻이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내가 위장을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하고 대장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도록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리 안에 ‘던져진’ 것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가 인간을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 규정한 것도 세계 ‘안’에 던져진 인간의 실상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이 때 세계는 인간을 둘러싼 배경이거나 인간에 의해 관찰되는 한 객체가 아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근원적 구조이다. 인간은 언제나 세계 ‘내

존재(內存在)로 현존한다.⁹⁾ 세계는 인간에 선행하며, 이미 그렇게 주어져 있다. 이 ‘내존재성(內存在性)’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인간은 음식 안에 던져졌고, 음식 속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식은 생명의 출발이자 수단이고, 모든 이의 생명의 근원이다.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인간이 땀을 흘리기는 해도, 음식은 땀 흘리기 이전부터 주어져있던 것들이다. 누군가에 의해 독점될 수 없는 원초적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는 음식을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지상 목적처럼 간주하는 자세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태복음 4,4, 누가복음 4,4 신명기 8,3)” 이러한 본연의 모습을 통찰하고서 음식의 선행적 원리에 어울리도록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종교적인 언어로 정토(淨土)이고 불국토(佛國土)이며 극락(極樂)이자 신국(神國)이다.

VI. 음식이 마을을 만든다

음식의 원리, 먹는 행위는 마을을 형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기도 하다. 여행작가 권삼윤에 의하면, 유목민들이 음식(고기, 우유, 빵 등)을 얻고자 목초지를 찾아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 ‘길’이 만들어진 데 비해, 물이 많은 지역에서 쌀을 먹으며 살던 밥 문화권에서는 정주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¹⁰⁾ 음식이 사회적 형태의 기초를

⁹⁾ 마르틴 하이데거,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서울: 시간과공간사, 1992), pp.88-89.

¹⁰⁾ 권삼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서울: 이가서, 2007).

구성해왔다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도 이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의식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저 이론으로 남겨두지 않고 음식의 원리를 구체화시키려 했다. 그는 마을 회의를 통해 경제와 정치의 권력을 분산하고 자치를 통해 자족적인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농사로 마을을 살리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음식과 옷과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계의 희망은 자발적, 자치적, 자족적 평화적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달려있다고 보았다.¹¹⁾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음식이다. 음식을 함께 생산해 나누어 먹는 것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김지하의 알려진 말도 결국 같은 차원이다.

밥이란, 본래 공동체적으로 만들고 공동체적으로 거두고 공동체적으로 나누어 먹고 공동체적으로 굶판을 벌이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놀고 다시금 공동체적으로 더욱 신나게 밥을 만드는, 그러한 생명의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순환활동·전환활동·확장활동의 상징이다.¹²⁾

음식이 어찌 길과 마을만 만들 뿐이겠는가. 사회와 공동체의 핵심이기만 하겠는가. 전술한 표현을 다시 가져오면, 음식은 생명의 근원이고 힘이며, 음식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다. 농경학자 프레이저(Evan D. G. Fraser)는 음식의 문명사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식품은 부(富)이다. 식품은 예술이고 종교이며 정부이고 전쟁이다. 그리고 영향력을 갖는 모든 것이다.”¹³⁾

11) 마하트마 간디, 김태연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서울: 녹색평론사, 2011) 서문 참조.

12) 김지하, 『밥』(왜관: 분도출판사, 1984), pp.60~61.

13)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음식의 제국』(서울: RHK, 2012), p.9.

생명의 원리인 음식이 생명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음식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음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욕망과 재물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 음식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음식과 인간의 사회·정치적 관계가 왜곡될 때, 이 모든 질서는 어그러진다. 인간이 더 비참해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그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어서 삶이 위협받는 빈곤한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실현하기 간단하지 않은 목적이다. 그럴 때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하며 사는 이라면, 굶주리는 이가 음식을 지상과제로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른바 복지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본래 음식을 먹고 살도록 태어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디는 이렇게 말한다.

인도와 세계의 경제구조가 누구도 음식과 의복이 없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은 오직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 생산수단이 대중의 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신이 주신 공기와 물이 그렇듯이, 또 그러해야 하듯이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나라나 민족 또는 집단이 그것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단순한 원칙의 무시가 우리가 오늘날 이 불행한 땅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들에서도 보게 되는 빈곤의 원인이다.¹⁴⁾

14) 마하트마 간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pp.18~19.

VII. 생명을 조작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반대로 흘러간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작 그 음식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 상당수는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른 채 그저 소비하기만 한다. 자연 법칙 또는 생명 원리는 성찰하지 못한 채 음식을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한다. 음식 소비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음식을 사려 하고, 음식 생산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음식을 팔려 한다.

이런 두 가지 욕망이 만나서 음식의 대량생산 체제가 이루어진다. 음식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려면 음식을 표준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도 균일해진다. 식물 종자의 다양성도 급격히 사라져간다. 생산성이 높은 감자, 큰 옥수수, 달콤한 토마토를 생산하는 종자만 살아남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해온 토종 종자들은 사라진다.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판매해도 이윤이 적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이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의 지구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음식이 무기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음식을 돈으로 치환하기 위해 논밭에서, 목장에서, 공장에서 적은 돈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한 각종 ‘조작’이 가해진다.

겉보기에 파릇파릇한 채소도 실상은 유해하게 키워지는 경우가 많다. 속성·대량 재배를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비료와 농약이 사용된다. 식물의 종자 자체를 유전적으로 조작하기도 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조작생명체)가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되었다. 가령 한국에서는 2002년에 GM 옥수수(NK603)가 식용으로 승인되었고,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소비되는 식용 GM 옥수수의 비율이 49%에 이른다.

게다가 사료용으로 도입된 GM 옥수수의 종자가 운송 과정에 유출되어 한반도 곳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산 옥수수로 둔갑되는 경우도 이미 여러 군데이다. 2009년도에는 GMO(주로 옥수수, 그리고 면화, 유채 등)가 전국 26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¹⁵⁾

큰 문제는 GM 식품이 생명체에 끼치는 유해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각도로 연구되어 있으니, 이 글에서 더 소개하거나 논할 일은 아닐 것이다.¹⁶⁾ 물론 GM 옥수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대체로 권력과 이해관계에 얽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장은 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수억 년 이상 진화해온 유전적 질서를 강력한 제초제를 견디면서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단박에 조작해낸 식물이 과연 얼마나 유기적 생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물론 대량생산된 GM식품이 가난한 국가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부족한 영양분을 비교적 간단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찮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된 GM식품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에게 고루 공급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주장이다. 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제약업체가 말라리아 치료보다 대머리 치료에 더 관심이 있듯(왜냐하면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며 백신을 살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GM 식품을 개발하는 업계 역시 자기네 제품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선진국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제초제 내성 곡물은 제초제를 살포할 능력이 되는 농민에게나 의미가 있다. …… GM 곡물은 개발도상

15) 김훈기, “GMO 논란,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모심과 살림』 제1호(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pp.193~198.

16) 대강의 흐름은 김훈기, 위의 글 참조.

국에서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이상할 것 없다. 그 GM 곡물들이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⁷⁾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GM 곡물의 긍정적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없다. '공정무역'도 전문기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플랜테이션(농산기업)이 되는 순간 풀뿌리 개혁적 운동이라는 본래적 의미는 퇴색된다.¹⁸⁾ 농업에 미치는 거대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운동인 '로컬푸드' 운동도 거대 유통업이 개입하면 그저 거리만 가까운 데서 생산된 음식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구조는 음식이 자본화하는 곳에서는 비슷한 양상으로 활성화된다. 곡물이나 채소에겐 적용되는 방식이 동물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초식동물인 소에게 항생제, 근육 강화제는 물론 동물 사체가 섞인 사료를 먹이는 일도 다반사이다.¹⁹⁾ 속성으로 체중을 키워 더 많이 팔기 위해서이다. 소는 자연 상태에서 5년여 성장한 뒤 25년 정도를 살지만, 실제로는 각종 성장촉진제로 인해 1년 안에 '성장되고' 3년 이내에, 짧게는 14개월 이내에 상품 가치가 되면 '도축 당한다'. 수유 기간이 긴 젖소는 거의 평생을 우리에게 간혀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당하면서 오로지 젖을 생산하다가 임신이 불가능한 시기가 오면 도축된다.

자연 수명이 14~15년 정도인 돼지는 5~6개월 정도면 삶을 마감하고, 자연 수명이 20년을 넘는 닭의 실제 수명은 3개월 미만이다. 오로지 인간이 만든 사료를 먹고 알을 생산하고 고기로 키워지기 위해 A4 종이 한 장만도 못한 공간 안에 간혀 산다.

어디선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virus)가 발병했다 싶으면, 주

17) 피터 싱어·짐 메이슨, 함규진 옮김, 『죽음의 밥상』(서울: 산책자, 2008), p.304.

18)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음식의 제국』, pp.366~368 참조.

19) 피터 싱어 외, 『죽음의 밥상』, pp.96~97 참조.

변에 있는 멸절한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하다못해 ‘아파볼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 채 생매장 형식으로 살처분된다. 한국에서는 2003년 528만 5000마리, 2008년 1020만 4000마리, 2010년 647만 7000마리가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살처분 당했다. 2014년 2월 6일 현재 실제로 AI에 감염된 가금류는 121마리뿐인데도, AI의 확산을 예방한다며 3월 24일까지 모두 1,157만 4천 마리의 멸절한 닭과 오리가 산 채로 땅속에 매장되었다. 그 뒤 통계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이유 없이 죽어간 가축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짐승을 도축하는 도축 과정의 반생명적 폭력은 더 말해 무엇하랴. 이 모든 일들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논리에만 따르다 보니 벌어지는 반생명적 조작의 사례들이다. 음식을 이윤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생명 현상을 돈으로 치환하려는 폭력적 욕망에서 반생명적 조작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으로 음식의 사회적 생명성을 회복해내야 하는 개인적 행동과 국가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돌아보게 해준다.

VIII. 현대인은 ‘식맹’이다

그 뿐이던가. 먹거리는 생명과 생존의 핵심이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새도 없이 지내거나, 만들어 먹을 줄도 모른다. 겨우 라면이나 끓여먹을 뿐, 밥을 직접 해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표준화된 거대 식품 기업의 상품을 그저 구입해서 먹는다. 간장, 고추장, 된장을 사다 먹은 지 오래되었다. 쑥, 개망초, 냉이, 돌나물, 미나

리, 고사리를 알지 못하고, 상추와 고추, 피망, 토마토를 심어 키워본 적도 없다. 가공된 햄을 사다 프라이팬에 튀기는 일이 요리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문명의 모순, 현대인의 불행이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음식의 유통과정, 즉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어디서 온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가까운 데서 온 먹거리는 유통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한다. 반대로 먼 데서 온 먹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촉진한다. 그렇다면 친환경적 농법에 기반을 둔 지역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것이 당연한데도 거의 전 세계에서 온 먹거리가 현대인의 식탁을 채우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돈' 때문이다. 적은 돈으로 많이 생산하려는 생산자와 적은 돈으로 많이 소비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도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다. 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Tim Lang)이 처음 제안했다는 푸드마일리지는 “식품이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해온 거리와 그 중량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고 한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식품을 장거리 수송하면 그 값이 높아지게 된다. 비슷한 중량일 경우 수송 거리가 멀면 푸드마일리지가 커진다. 예를 들어 비슷한 크기의 캘리포니아 오렌지와 제주도의 감귤을 비교해보면 오렌지의 푸드마일리지가 상당히 크다. 푸드마일리지를 알게 되면 수송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도 비교적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²⁰⁾ 나아가 운송거리가 긴 식품일수록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나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의 안정성도 급격히 떨어진다.

2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모심과살림연구소, 『밥상의 전환』(서울: 한티재, 2013), pp.141~142.

한국의 일인당 푸드마일리지는 2010년 기준으로 7,085톤킬로미터라고 한다.²¹⁾ 이것은 당시 조사대상국들인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문제는 다른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각종 FTA 체결 이후 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²²⁾ 한국인의 식탁을 수입 식품이 점령했고, 그만큼 한국인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늘리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0GT 정도라고 한다. 19세기 말 이래로 이산화탄소 1,900GT와 여타의 온실가스 1,000GT가 이미 배출되었고, 207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구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²³⁾ 가능한 한 푸드마일리지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요청에서 아직 거리가 한참 멀다. 먹거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 먹거리를 자본으로 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른바 '싸고 좋은' 먹거리를 찾으려는 모순된 욕망이 지배하는 사이, 인간은 점점 더 음식의 진정성에서부터 소외된다. 음식의 우주성, 은총성, 생명성, 독점불능성과 같은, 전술했던 음식의 원리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현대인은 '식맹(食盲)' 속으로 더욱 더 빠져들어 간다. 슬로우푸드 운동가인 김종덕이 음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음식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을 '음식 문맹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²⁴⁾

21)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른 수치이다.

22) 김정수, "한국인 밥상, 더 멀어진 '신토불이,'"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16일.

23) <<http://theguardian.com/environment/2014/nov/19/co2-emissions-zero-by-2070-prevent-climate-disaster-un>>

24)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서울: 이후, 2010), p.24, p.334.

이 글에서는 그것을 줄여 ‘식맹’(食盲)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상당수는 식맹(食盲)이다. ‘문맹’이나 ‘컴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 먹고 사는 음식물 하나 제대로 생산해보지도 못하고, 요리조차 제대로 못한다. 음식이 어떻게 해서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음식의 정체에 대해서도 눈감는다. 식탁 위 먹거리에 담긴 수많은 폭력들과 폭력적 구조에 대해 무지할 뿐더러 의식적으로 외면한다. 감사해하는 마음은 별로 없이, 남이 해놓은 것,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저 먹기만 한다. 그것이 식맹의 전형적인 자세이다.

IX.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요사이의 태엽시계가 거의 사라졌다. 모든 이가 태엽시계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태엽시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조금만 상상해보면 알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었다. 태양이 움직이는 정도를 톱니바퀴로 잘게 쪼개 표현한 것이 태엽시계였으니 말이다.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자전거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 수 있고 자전거를 직접 탈 수도 있다.

하지만 문명이 고도로 기계화하고 산업 기반이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면서 인간이 만든 문명은 인간의 상식을 떠났다. 현대인은 디지털 세계의 원리를 잘 모르면서 스마트폰을 그저 신기해하며 주어진 방법대로 사용하기만 한다. 돌아가는 원리는 잘 모른 채 첨단 비행기와 자동차를 소비하고 누리기만 한다.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에 사용하며 ‘속도의 사회’로 치달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반 일리히(Ivan Illich, 1926~2002)는 문명의 유지를 위한 척도로 ‘자전거’라는 상징성을 제시한다. 자전거는 보통의 인간이라

면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구조로 되어 있다. 정교한 자동차는 인간 이해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자전거는 인간이 육체를 이용한 만큼만 움직인다. 인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든 문명이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징적 발명품이다. 인간의 행복은 속도와 소비의 대명사인 자동차가 아니라, 원제(Energy and Equity, 1974)와 다르게 한국어 번역판에 붙은 제목이기는 하지만,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것이다.²⁵⁾ 문명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연에 어울리도록 절제할 수 있을 정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창작품이라면서도 인간은 정작 자신의 창작품을 제어할 능력이 거의 없다. 문명은 문명의 법칙에 인간이 종속될 때에만 효용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현대 문명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이 해당 부분만 겨우 손볼 수 있는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각 분야로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지식은 말 그대로 전문인의 것이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쓰는 세련된 물건이 어떻게 해서 자신 앞에 왔는지 잘 모른다. 인간이 문명의 창조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문명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종속시켜가는 거대한 힘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은 문명의 근간이다. “모든 도시는 잉여 식량의 생산과 교환이라는 토대 위에 존재해왔다.”²⁶⁾ 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이 음식을 교환하며 형성해온 문명에 대해 사실상 주인이 아니다. 도리어 인간은 “식량의 노예”로 전락했다.²⁷⁾ 인간은 자신이 먹는 무수한 완성품 먹거리들이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고기상품이 어떻게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거나 외면한

25) 이반 일리치, 박홍규 옮김,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서울: 미토, 2004).

26)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음식의 제국』, p.9.

27) 에번 D. G. 프레이저 외, 위의 책, p.11.

다. ‘값싸고 질좋은 음식’을 얻으려는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욕망이 벼, 채소, 고기, 우유 등 음식의 재료를 ‘조작’하게 만든다.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소가 공장식 축사에서 반생명적으로 키워지고 소비되는가. 공장식 축사에서 음식 공장에서 생산된 것 중에 ‘값싸고 좋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모순된 욕망의 조합이자, 폭력적 인식이다. 가령 대형 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려면 공급자에게 싸게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자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다시 더 싼 원료와 생산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물건은 반생명적 생산과 유통 체제를 강화시켜나간다. 피터 싱어는 미국 월마트의 사례를 들어가며 이렇게 비판한다. “그러한 싼 가격 뒤에 납세자들, 지역사회민들, 동물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담이 숨어있다. 그것은 월마트의 낮은 가격이 갖는 명백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에서 음식을 사먹는 일이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갖게 되는 이유다.”²⁸⁾ 이런 식으로 ‘싸고 좋은’ 물건에 대한 욕망 속에는 누군가를 직·간접적으로 희생시킨 폭력이 들어있다. 이제 “생명체를 싼 값에 얻겠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되었다.”²⁹⁾

X. ‘식맹(食盲)’을 넘어선다.

인류가 ‘문맹’의 정도는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지만, 자본 중심의 논리에 휩싸일수록 생명의 근간인 음식에 대해서는 ‘식맹’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인은 음식물의 생산과정은 모른 채 소비하기만 한다. 먹거리에 대해

²⁸⁾ 피터 싱어 외, 『죽음의 밥상』, p.122.

²⁹⁾ 고미송, 『채식주의를 넘어서』(서울: 푸른사상, 2011), p.20.

성찰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먹거리는 생명과 생존의 핵심이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새도 없이 지낸다. 자신에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양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진정성에서부터 인간은 소외되어 있다.

물론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식맹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 현대 문명 자체가 빈곤의 해결, 식생활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점에서 '식맹'의 상황은 사실상 인류 문명의 발전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식맹'의 상태를 개인들의 도덕적 성찰과 결단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음식마저 자본으로 치환시키는 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치화된 문명 자체에 내장된 문제이기도 하다. 먹거리 관련 정책의 혁명적 전환도 요청되지만, 정책적 요청 주체가 독재적·독자적으로 정책을 시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몇 가지 정책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찰적인 실천이 없이는 식맹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 이반 일리히의 표현을 빌려오면, 그가 한결같이 주장하듯이, 인간이 사회에 의해 '타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자율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나갈 때 '식맹'은 극복되어간다. 대다수 인간이 현대문명에 휘둘리고, 문명을 제작하고 좌우하는 소수에게 다수가 종속되어 살아가는 현실을 전복시켜, 근본적 독점 구조를 깨고 다수가 자율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식맹에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식하는 데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소비자' 의식만이 전능하다시피 한 기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듯이,³⁰⁾ 자본화한 음식의 권력도 그 음식 소비자들이 생산자 의식을 지니고서 음식의 원리에 어울리도록 조

절할 수 있을 때 약해져간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해 소화시키는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의 원리 차원에서는 쌀 한 톨도 내 몸도 모두 우주의 합작품이자 유기적인 생명 고리로 얽혀 있음을 반성하고서, 먹는 이와 먹히는 것의 건강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는 음식을 자본으로 치환시키고 무기로 삼는 자본주의의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전환시키려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식명은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식량 생산 체계를 알아야 하고 식량과 자신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살리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재일(1938~2010)이 ‘한살림운동’을 시작해 오늘날과 같은 도농(都農) 간 상생적이고 생태적인 ‘밥상운동’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생을 위한 고민 때문이었다. 박재일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식의 원리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현실성을 부여해준다.

시장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는 모두 팔고 사는 관계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적인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싸게 사려 하고 생산자는 보다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대립 관계가 한참 가면 어떻게 하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밥상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의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로 나뉘진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필요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30) 올리히 벡, 홍찬숙 옮김,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서울: 길, 2011), p.33.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 도농 간 삶의 연대, 공동체 운동 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생산자는 밥상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땅도 살리는 생명의 농업, 즉 유기농업 운동을 해나가고, 소비자는 그 운동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소비를 책임짐으로써 농업도 지키고 건강한 밥상도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³¹⁾

농부로 하여금 생태적 음식을 생산하게 하는 상대자는 음식 소비자이다. 음식 소비자는 그저 소비자이기만 하지 않고 사실상 간접적 생산자이기도 하다. 농업의 대가로 음식 소비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³²⁾는 박재일의 표어는 현실적 울림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종덕이 윈델 베리(Wendell Berry)의 말을 인용해 요약하듯이, 소비자의 “식사는 농업 행위다.”³³⁾

나아가 생태적 원리에 어울리게 생산된 음식은 마찬가지로 생태적 원리에 맞게 소비되어야 한다. 특히 음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 공장 음식을 돈으로 바꾸어 소비하는 형태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가 직접 조리해 먹을 줄 알 때 음식의 생명성은 확보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길이다. 그리고 배고픈 이에게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음식의 사회성이 확보되며, 그럴 때 ‘식맹’을 극복하는 것이다.

31) 박재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서울: 모심과살림 연구소, 2013), p.148.

32) 박재일, 위의 글, p.150.

33)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p.337.

XI. ‘식안(食眼)’을 열어간다

식량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심지어 무기화하는 흐름은 우려스럽다. 누군가 물이나 산소를 무기화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음식은 무기가 아니다. 생명의 원리이다. 설령 다른 물질문명은 놓치더라도, 생명의 원리를 느껴가며 음식을 직접 생산할 줄 알고 요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건강한 생산자와 교류해야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조리해먹을 줄 알 때 생명의 근원을 성찰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 최소한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식안(食眼)’을 열어가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사회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어간 주체 세력을 ‘시민(부르주아)’이라고 한다면, 식사의 원리에 관한 한 현대인은 ‘시민’이 아니다. 공장식 대량 생산의 원리에 종속된 ‘노예’들이다.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나 ‘음식시민’이 되어야 한다.³⁴⁾ 가족이 집에서 더 많이 식사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이가 조리법을 배우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음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음식’을 대량 생산한다는 모순된 욕망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이 그렇듯이, 생명의 고귀함과 유기적 연결성에 어울리는 음식의 원리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대의 종교 혹은 신앙은 교회당에서 종교 의례를 하는 데에만 핵심이 있지 않다. 친환경 농법에 애쓰는 이, 힘들게 일부러 ‘슬로우푸드’를 만들어 먹는 이, 일부러 ‘채식’하고 나아가 ‘소식’을 하는 이 모두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일종의 ‘종교적’ 실천이다. 식맹 시대의 성스러움은 일종의 ‘음식 의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푸드마일리지, 슬로우푸드, 채식과 소

³⁴⁾ 김종덕, 위의 책, pp.334~335.

식 등은 음식을 먹는 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콘텐츠이다. 식명의 시대에는 종교도 생명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먹거리의 정치·경제성을 의식하며, 먹음의 행위론적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느리게 가면서 먹거리를 나누며 사는 곳에서 종교는 생명력을 얻는다. ‘식안(食眼)’을 열어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롭게 음식을 먹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살되, 문명과 문제의 핵심인 음식의 원리에 대한 통찰 위에서 그 원리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다. 음식의 생물학적, 정치적, 경제적, 자연적 원리에 대한 통찰, 다시 말해 먹는 행위와 먹히는 음식의 관계와 의미에 대한 눈뜸이 ‘식안’이다.

음식이 무기가 되고,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며,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굶어죽는 상황에서 평화라는 말은 공허하다. 먹는 행위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서 어떻게 인간다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정책으로 평화를 이루려 시도한다면, 무엇보다 음식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먹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식안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식안’을 열어가는 일은 종교적 눈이 열리는 과정과 다른 것이 아니다. 깨달았느냐 아니냐는 식안이 열렸느냐 아니냐와 다르지 않다. 음식에 대한 인식, 먹는 행위를 보면 인간성도 보이고, 종교성도 보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보인다.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종교적 사제라도 먹음의 불평등에 둔감하다면 털 깨달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식안은 그저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 머물지 않는다. 개인의 식안이 열리면 사회적이고 정책적으로도 모든 식사가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일체 생명체가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음식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폭력도 줄어들거나 사라져갈 것이다.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

는 일이 발생할 리 만무할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나눌 줄 아는 자세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식사는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우주적인 행위이다.

■ 접수: 2014년 11월 17일 / 심사 : 2014년 11월 24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8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고미송. 『채식주의를 넘어서』. 서울: 푸른사상, 2011.
- 권삼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서울: 이가서, 2007.
-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 푸드』. 서울: 이후, 2010.
- 김지하. 『밥』. 왜관: 분도출판사, 1984.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 『밥상의 전환』. 서울: 한티재, 2013.
- 이현주 외. 『콩알 하나에 무엇이 들었을까』. 서울: 봄나무, 2006.
-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개정판. 서울: 녹색평론사, 2009.
- 천도교중앙총부. 『해월신사법설』.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서울: 도서출판3, 2014.
- 허남혁.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서울: 책세상, 2008.
- Berry, Wendell, 이한중 옮김. 『온 삶을 먹다』. 서울: 낮은산, 2011.
- Fraser, Evan D. G. 외. 유영훈 옮김. 『음식의 제국』. 서울: RHK, 2012.
- Gandhi, M. 김태연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서울: 녹색평론사, 2011.
- Heidegger, M.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 서울: 시간과공간사, 1992.
- Illich, Ivan. 박홍규 옮김.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서울: 미토, 2004.
- Merleau-Ponty, M. 류익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 Singer, Peter 외. 함규진 옮김. 『죽음의 밥상』. 서울: 산책자, 2008.

국문논문

- 김지하. “콩나물 얘기 좀 합시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 김훈기. “GMO 논란,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 『모심과 살림』 제1호.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 박재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 서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3년 여름.

인터넷 자료

- (<http://theguardian.com/environment/2014/nov/19/co2-emissions-zero-by-2070-prevent-climate-disaster-un>)

From A Dining Table to Peace: Overcoming Food-blindness To Awaken Food-sight

Yi, Chan-Su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ct of eating' and the 'food being eaten' constitute the basic principle of life. This paper will reflectively discuss where food comes from, the processes that food must undergo before it can be served, and finally what it means to eat at the dimension of natural philosophy. This paper considers the political and economic meanings of food to critically examine how huge capital has globally dominated the food industry, and how food has become used as a means of profitability.

People have a tendency, called as 'food-blindness', to ignore the processes of food production and in doing so, the true meaning of eating. Instead, they buy and consume food mechanically.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people glow their ability to see the natural and societal values of food, called as 'food-sight'. This paper also asserts true peace is unattainable if the principle of food is ignored or forgotten, and the act of eating must be followed by the practice of living for religious purposes.

Keywords: food, food-blindness, food-sight, food processes, food consumption, GMO, food mileage

이찬수(Yi, Chan-Su)

서강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교토학파의 불교철학과 칼 라너의 신학을 비교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대 교수, (일본)WCRP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종교로 세계 읽기』, 『일본정신』,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녹색평화란 무엇인가』(공저) 외 다수의 책을 썼다.

【서평】

일본 평화사학자의 북한에 관한 내재적 이해

* 와다 하루끼 저, 남기정 역,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파주: 창비, 2014.

김태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I. 머리말

현대 북한 연구에서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이하 ‘와다’)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북한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연구논문이 1981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그 번역본이 1983년 『분단전후의 현대사』에 수록되어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지도 어느새 만 30년이 넘었다. 그리고 현대 북한에 대한 대표적 해석인 그의 유격대국가론이 1993년 일본의 진보성향 월간지 『세카이(世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다.¹⁾ 와다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사 연구를 선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도대체 언제 적 와다인가, 아직도 와다인가 라는 연구자들의 원성이 나올 법도 하다.

1) 和田春樹, “ソ連の朝鮮政策,” 『社會科學研究』, 第33卷 4號 (1981); 와다 하루끼, “소련의 대북한정책 1945-1946,” 『분단전후의 현대사』(서울: 일월서각, 1983);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 1993年 10月號.

그런데 최소한 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노학자의 주장은 전혀 진부하지 않다. 오히려 그의 주장들은 여전히 새롭고 도전적이다. 그는 여전히 다양한 국가들의 새로운 자료들과 논저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젊은 정신으로 학술적 비판의 창끝을 날카롭게 베풀어, 새로운 역사적 전망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심지어 과거 자신의 주장들까지 거침없이 비판하곤 한다. 그는 불과 수개월 전 발표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대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시대 사람들의 실천적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는 여전히 젊다.

한국에서 와다는 ‘유격대국가’라는 현대 북한(정확히는 ‘김일성시대’의 북한)에 관한 대표적인 해석을 제시한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와다는 일본 내의 최고의 러시아 연구자로 유명했다. 그는 도쿄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러시아사를 전공했고,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따라서 매우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는 러시아어에 능통하다. 그런데 그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문헌도 읽을 수 있다. 이는 역사학자로서 대단한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실제 그의 책에는 그의 모국어인 일본어를 포함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등 최소 6개 국어의 1차 자료와 논저들이 방대하게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인 소장학자들의 최신 논저들이 직접적으로 인용되고, 수개월 전 『로동신문』 사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물론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새롭게 공개된 1차 자료나 저서의 내용이 세세하게 등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방대한 자료와 논저를 끊임없이 읽고 있는 연구자의 최신 논저가 어찌 진부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와 논저를 읽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까지 비판의 창끝을 돌린 사례는 한국에서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

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1998년 일본에서 『북조선: 유격대국가의 현재(北朝鮮: 遊撃隊國家の 現在)』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책이 출간된 직후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유격대국가론이 김일성 사후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와다는 서둘러 ‘정규군국가’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한국에서 출간된 번역서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에 직접적으로 반영했다. 와다의 정규군국가론은 발표 초기에 한국 학자들에 의해 아무런 호응도 얻지 못했지만, 1999년 6월 북한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개념을 전면화함으로써 와다의 해석은 놀라운 혜안이자 선견지명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되짚어 보며, 우리는 십여 년 만에 한국에서 출판된 와다의 새로운 북한 관련 서적에 또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와다는 자신의 북한 연구를 총괄하는 『북조선현대사(北朝鮮現代史)』라는 얇은 저서 한 권을 일본에서 출판했고, 2014년 이 책을 한국에서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이하 『북한현대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남기정 번역)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전 저서와는 달리, 그만의 새로운 역사자료의 발굴을 통해 북한에 관한 새로운 역사상을 제공하거나, 그 전에 제시된 적 없는 북한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다는 지난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새롭게 발표된 학계의 연구성과들과 급변하는 동북아의 역사상을 반영하여 현대 북한에 관한 그만의 독특한 관점과 인식을 이 얇은 책에 거침없이 풀어놓았다. 과연 이 ‘짧은’ 노학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북한사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역사상은 무엇인지, 이 얇은 책이 건네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

II. 저서에 반영된 역사관과 연구방법론

『북한현대사』는 총 9장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일본의 원저에 없는 〈보론: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추가되었다. 자신의 연구를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는 학구적 모습을 이 보론의 존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보론에는 최근의 장성택 숙청과 관련된 내용까지 검토된다.

1~9장의 목차 구성내용은 북한현대사에 대한 그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투영한다. 1장 〈김일성과 만주항일무장투쟁(1932~1945)〉은 현대 북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제시기 김일성의 활동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의 역사관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1945~48)〉은 해방 직후 북한 정치와 사회의 역동적 변화양상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뒤에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2장에서는 김일성 일인지배의 강화와 분단 과정에 대한 그의 고유한 관점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3장 〈한국전쟁(1948~53)〉과 4장 〈부흥과 사회주의(1953~61)〉는 한국전쟁의 전개과정뿐만 아니라, 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의 독특한 정치질서와 국제관계가 구축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그리고 5장 〈유격대국가의 성립(1961~72)〉과 6장 〈극장국가의 명과 암(1972~82)〉은 베트남전쟁이라는 동아시아의 위기상황을 전후하여 유격대국가가 수립되고, 김정일 후계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7장 〈위기와 고립 속에서(1983~94)〉, 8장 〈김정일의 ‘선군 정치’(1994~99)〉, 9장 〈격변 속의 북한(2000~12)〉은 국제적 탈냉전을 전후하여 북한이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체 9장 체제는 ‘1961년’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크게 양분될 수 있다. 와다는 현대 북한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서 1961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1961년 이전과 이후 시기 북

한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 방법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와다에 의하면, 1961년까지의 북한 역사는 국가사회주의체제, ‘당=국가체제’의 형성의 역사이고, 1961년 이후 북한 역사는 국가사회주의체제 위에 구축된 2차적 구조물로서의 유격대국가의 형성과정사였다. 요컨대 와다는, 현대 북한이 1961년까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에 집중한 반면, 그 이후 시기부터는 지금의 북한 사회를 특징짓는 독창적 형태의 이데올로기와 체제 형성에 골몰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1961년은 북한 연구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양분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와다의 표현에 의하면, “1961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명확한 역사상”을 갖게 되었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냉전의 종언에 따른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자료 방출 때문이었다(9쪽).²⁾ 와다는 줄곧 북한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는데, 최소한 1961년까지는 사회주의국가 내부자료와 공식자료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이 상당 정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³⁾ 반면에 와다는, 1960년대에 이르면 소련 대사관도 북한의 내부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내부자료를 아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역사학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3쪽).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이후 북한사회 연구를 위해서는 유격대국가론, 코포라티즘국가론(브루스 커밍스), 수령제론(스즈키 마사유키) 등과 같은 ‘모델

2) 앞으로 서술과정에서 본문 괄호 안의 쪽수 표시는 모두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의 페이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3) 와다의 지도하에 완성된 서동만의 박사논문은 자료활용과 내용의 측면에서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동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대표 저서는 다음과 같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분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이 책에서 1961년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책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양분한다.

또한 와다는 반세기 이상의 북한사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내재적 관점'을 견지한다. 그는 이 같은 자신의 관점을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넘치지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걸어진 곤란한 여정과 사람들의 긴장된 생활방식은 간단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고 확신한다. 이 책은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되었다."(4-5쪽)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말은 "이 책이 북한과의 이성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다행"(6쪽)이라는 그의 기대와도 상통한다. 그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이나 편견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싶어 한다. 그래야만 현대 북한의 정책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의 책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들은 강고한 반공주의(혹은 반북주의)적 입장의 한국인들에게 적잖은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그는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북일 국교정상화를 희망해온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절실히 원했을 이웃나라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 비통한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5쪽)고 말했다. 일제시기 김일성의 만주지역 항일유격활동에 대해서도 당대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인과 조선인이 하나가 되어 협력할 것을 주장한 데서 김일성의 정치적 성숙성을 엿볼 수 있다"(30쪽), "김일성은 유능했으며 적극적이었다"(41쪽), "일본의 엄혹한 토벌작전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60명의 부하와 함께 조국의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역시 김일성이라는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44쪽)이라고 평가한다.

이상과 같은 표현은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살아온 적잖은 한국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와다의 표현은 최대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려는 그의 관점의 발현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당할 것이다. 실제 이 글의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되겠지만, 와다는 해방 직후 소련이나 김일성세력의 분단정부 수립 과정이나 김일성 일인독재의 형성과정을 기존의 연구논저들에 비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분단과 독재 문제에 있어서, 와다는 기존 논저보다 더 강하게 소련과 김일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적대적 분단구조에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 역사학자 와다 하루끼는 친북도 반북도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역사주의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와다의 관점은 완벽한 역사주의적 관점이나 제3자의 객관적 관점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공고한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사학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평화사(peace history)란, 1930년대 전반기 유럽에서 발흥한 평화학(peace studies)의 영향을 받으며 싹튼 역사학의 분야로서, 1960년대 후반 베트남 반전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한 학문분과를 일컫는다.⁴⁾ 그런데 실제 와다 하루끼 또한 1960년대 베트남 반전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성장한 대표적인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⁵⁾ 게다가 와다는 ‘동북아 공동의 집’이라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하며, 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4)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영향에 의한 미국 및 유럽 평화사의 급성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시오. 이동기, “평화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106호 (2014).

5) 와다의 제자이자 이 책의 번역자인 남기정은 와다를 미국에 의한 일본의 후방기지화 문제를 제기하며 1960년 안보투쟁과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의 전면에 섰던 인물로 설명한다. 와다의 실천적 문제의식은 일본의 재군비 반대와 평화헌법을 옹호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 근원에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26쪽).

조하고 있다.⁶⁾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은 『북한현대사』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요컨대 와다는 자신의 논저를 ‘평화사’적 연구성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문제의식과 연구내용 전반에 걸쳐 완전히 ‘평화사학자(peace historian)’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와다는 일본지성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에 그 사상적 기원을 갖는 ‘진보적 아시아 주의자’의 계보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사학자이자 북한사학자임과 동시에 완전한 평화사학자로 분류 가능한 인물이다. 북한현대사에 관한 그의 애정 어린 시선이나 날선 비판의 기저에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관한 그의 갈구가 존재한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Ⅲ. 역사학적 연구를 통한 북한 이해(1945~1961)

1961년은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와다는 국가사회주의의 완성과 유격대국가 형성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1961년을 중시한다. 와다에게 국가사회주의란 소련형 사회주의를 모델로 한 전세계 사회주의국가들의 일반적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북한 또한 이 같은 보편적 조건(국가사회주의) 하에 특수성(유격대국가)이 추가된 체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61년 이전 시기에 대한 북한 연구에서는 역사학적 연구가 중심인 반면, 1961년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모델

⁶⁾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조선반도,” 『창작과비평』, 87호 (1995).

분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또 다시 1961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아카이브에서 쏟아져 나온 적잖은 1차 자료들은 1945~1961년 북한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와다의 책에서 새롭게 제시된 역사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와다는 기존 자신의 저서인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과 『한국전쟁』의 내용에 근거하여 일제시기부터 한국전쟁기에 걸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기 형성사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⁷⁾ 와다는 김일성을 “북한이라는 국가의 알파요 오메가”(23쪽)라고 표현하면서, 국가의 신화가 되어버린 만주항일유격전쟁에 대한 이해야말로 현대 북한 이해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주장한다. 와다는 김일성의 만주 활동을 되도록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되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예컨대 일제시기 김일성을 “조선의 영웅”으로 만든 보천보전투에 대해서도, 전투 희생자가 어린아이와 요릿집 주인뿐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김정일의 백두산 밀영 탄생을 주장하는 북한의 공식적 주장에 대해서도, 1942년 자료에 근거하여 러시아 보로실로프 근처 남야영 출생설을 확고하게 강조한다. 또한 소련 제88특별저격여단의 조선인 지도자들 중에서 최용건과 김책이 김일성보다 거의 열 살 연상이었으며 투쟁 경력이나 당력도 김일성보다 고참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반면에 당시 김일성이 만주의 가혹한 기후를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신념과 육체를 지닌 사람이었고, “가장 훌륭한 군사간부이며, 중국공산당 고려인 동지 가운데 최우수 분자”(41쪽)라는 평가를 중국군으로부터 받고 있었으며, 일본의 엄혹한 토벌작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비범한 능력”(44쪽)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도 가감 없이 드러낸다.

7) 와다 하루끼 저,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와다 하루끼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흥미롭게도 와다는 해방 직후 북한지역 분단 정권의 형성과 김일성 우상화의 형성 시점과 관련하여, 기존 학계의 주장보다 좀 더 이른 시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와다는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북한 점령 방침을 “소련이 점령한 북조선에 정권을 만들라는 지시”(50쪽), 즉 소련의 북한 지역 분단 정권 수립 지시로 이해한다. 그런데 이 같은 해석은 해당 지령에 대한 가장 보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령의 내용은 당대 시점의 북한에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말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북조선에서 모든 반일적 민주 정당 및 단체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력을 수립할 것을 원조”하라는 것이었다. 문서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분단정부’ 수립 지시라기보다는 ‘통일전선’ 결성과 ‘인민전선정부수립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다는 이 지령을 근거로 사실상 소련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북한지역만의 정부 수립에 골몰한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와다는 북한지역의 분단 정권 수립과 관련하여 1947년 북조선 인민위원회의의 수립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독창적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가 ‘독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의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와다의 해석 때문이다. 와다는 1946년 11월 3일 북한지역의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와 그 결과로 형성된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와다에 의하면, 1947년의 북조선인민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선거로 형성된 입법기관(북조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최초의 중앙 행정기구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와다는 1947년 북한 지역에서 “의회와 내각을 갖춘 조선인 정권이 탄생”(69쪽)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듯 선거와 의회의 구성, 그 의회에서 승인 받은 정권기구의 형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기존 논저에서 보기 힘든 와다의 독창적 관점이다.⁸⁾

와다는 김일성의 일인 지배 강화나 우상숭배 현상 또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와다는 1946년 2월 김일성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당의 수장이자 정권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통해 김일성의 권위가 강화된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까지는 기존 논저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후 와다는 김일성 주변 인물들의 김일성 우상화를 낱낱이 드러낸다. 1946년 5월 1일 메이데이 축전 준비위원회는 “일찌감치 개인숭배 작업에 착수하여 『김일성장군』이라는 소책자를 간행”(63쪽) 했고, 같은 해 6월 김창만은 “우리 민족의 위대하신 령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63쪽)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같은 해 8월 북조선예술총동맹은 『우리의 태양』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수록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달 김두봉은 북조선로동당 합당 대회에서 “우리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66쪽)라는 구호를 열창했다. 이렇듯 와다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에 대한 우상화와 유사한 김일성 우상화가 1946년 시점부터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 가장 구분되는 부분은 한반도 내전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전쟁이라는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그의 한국전쟁관일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시기구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와다는 3장 〈한국전쟁〉의 시기를 1948~195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와다는 1948년 “서로 받아들일 수도, 화해할 수도 없는 존재”인 대한민국

8) 기존 학계의 주된 입장은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강조하는 관점과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대별된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사실상 분단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관점은 최근 뉴라이트 진영으로 구분되는 지식인 그룹에서 특히 강조하는 입장이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소위 ‘교학사 교과서’ 또한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북한지역 분단정권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권희영 외, 『한국사』(서울: 교학사, 2014), p.306.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자체를 중시한다. 양국은 수립 직후부터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거하여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구상으로 불타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와다는 그 같은 구상이 “이웃 국가 중국의 경험”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79~80쪽). 그는 남한의 북진통일과 북한의 국토완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중국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지도자는 중국 국공내전의 진전에 크게 자극”(81쪽)을 받아 이 전쟁으로 나아갔고, 전쟁의 실제 진행과정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이후 미중전쟁으로 변화함으로써 이 전쟁은 동북아 지역전쟁이라는 성격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물론 와다는 한국전쟁사 서술에서 스탈린의 역할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다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주도된 정전협정의 체결에 대해, “미중전쟁으로 전화한 한반도의 내전은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104)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후 1961년까지 북한 역사는 경제 부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정치 부분의 주류파에 의한 일원적 지배의 달성 과정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1953년 이후 전후 복구와 함께 진행된 농업협동화, 1950년대 치열한 권력투쟁의 귀결로서의 ‘만주파’에 의한 당·정·군의 장악 과정으로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설명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설명 중 하나는 ‘주체’의 등장 시점에 관한 와다의 설명이다. 와다는 과거 자신의 저서 『북조선』을 통해, 주체의 등장시점을 1955년으로 전제한다.⁹⁾ 이 같은 관점은 주체사상에 대해 논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저들의 일반적 설명이다. 그런데 와다는 이번 저서를 통해 “민족주의의 견지에서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이 1955년 12월 시점에 나왔을 리가 없다”(122쪽)고 단정한다. 그는

9) “1955년 ‘주체’의 제기는 소련에 대해 자주성을 세운다는 형태로 나온 것이었으나 이는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서울: 돌베개, 2002), p.159.

북한에서 1960년 시점에 이르러서야 “조용히 주체선언에 나섰다”(141쪽)고 주장한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1955년 12월에 이루어졌다는 ‘주체 연설’을 1960년 5월에 간행한 『김일성 선집』 제4권을 통해 요란스럽지 않게 발표한 사실을 일컫는다. 와다가 볼 때, 1960년 발표된 주체 연설은 “소련계와 연안계를 완전히 일소한 뒤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태도를 강조한 1960년 김일성 정신의 구현”(142쪽)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인 서동만의 입장과의 상이한 이 같은 관점은 이 책의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추측’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¹⁰⁾

IV. ‘모델 분석’을 통한 북한 이해: 유격대국가론에서 정규군국가론으로(1961~현재)

와다는 1961년 국가사회주의 완성 이후의 북한을 유격대국가와 정규군국가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유격대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위에 구축된 2차적 구조물”이며, “베트남전쟁에 호응하여 남조선혁명을 일으키고, 이를 지원하여 혁명적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구축”된 체제이다(176쪽). 요컨대 유격대국가는 베트남전쟁으로 형성된 전통적 피포위의식의 확산 속에 형성된 강력한 국가체제로서, 1970년경에 그 상부구조가 구축되고, 1972년 헌법으로 그 제도적 완성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와다는 그 뒤 이 유격대국가 위에 새로운 ‘국가디자인’이

10) 서동만은 1955년의 ‘주체 연설’이 당시 북한에서 실제 진행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1955-56년 소련계 비판과 당내 역관계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는 1955-56년의 북한 국내 정세변화와 1955년의 주체 연설이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pp.520-528.

덧칠되는 것으로 본다. 국가디자인의 대표적 예로는 1970년대 영도예술로 대표되는 극장국가론, 가족국가론, 전통적 국가관 등이다.

이 같은 와다의 유격대국가론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김일성의 만주항일투쟁 경력이 북한에서 현실적 규정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해방 직후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한 김일성은 1950~60년대 북한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과거 자신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던 오랜 동지들을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시켰고, 이들 만주파들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북한만의 독특한 정치권력구조와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1967년 대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항일유격대원처럼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자”는 구호나, 1974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북한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모델 분석은 아무래도 그 강력하고 분명한 이론의 전제조건으로 인해 한계나 모순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 예는 북한의 내적 변화나 추후 변화 가능성의 설명에 대한 설득력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와다는 북한 체제의 변화 과정을 하나의 커다란 집을 짓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와다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은 1961년까지 보편적 사회주의국가로서 기초 구조물의 건축을 마쳤고, 그 위에 유격대국가라는 2차 구조물을 완성했다. 그리고 가족국가론과 같은 국가디자인들이 “유격대국가라는 건물 위에 간판처럼 내걸렸다.”(198쪽)

물론 이 같은 설명은 유격대국가론의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비유적 설명은, 현재의 독특한 북한 체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을 축조하듯 기나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체제라는 것을 알기 쉽게 드러내준다. 그러나 6장의

제목을 <극장국가의 명과 암(1972~82)>과 같이 설정했을 때에는, 극장국가론과 같은 소위 국가디자인과 유격대국가론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호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유격대국가는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말하는 ‘극장국가’다”(181쪽)라는 단정적 명제의 제시만으로 그쳤을 때, 독자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 유격대국가론은 그 형성의 원인을 외적인 조건에서 살피고 있는 ‘외인론’에 가까운 체제형성이론으로서, 애초 그 체제 변화 가능성 또한 외인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와다는 국제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 같은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사회주의 위에 유격대국가 대신 보다 개방적인 구조가 구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와다는 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대계기로서 북한과 일본의 화해를 지목한다.

그런데 와다 자신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유격대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가상’으로서의 정규군국가의 등장은 외적 변화가 아닌 내적 변화로부터 초래된 것이었다. 와다가 설명하듯이, 유격대국가의 해체는 사령관의 부재(김일성의 죽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김일성은 사망 후 영생불멸의 영원한 수령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정일은 수령이라는 직책을 계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령만이 유격대국가의 사령관인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북한은 갑자기 사령관 없는 유격대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와다는 이 같은 북한 ‘내적 변화’를 유격대국가 해체의 근본원인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와다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는 기존의 유격대국가 변화나 해체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설명에 대해 어떤 추가적 설명도 제시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와다의 정규군국가론이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현대

북한사회 분석에 매우 유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와다 자신의 유격대국가론을 해체시키면서까지 정규군국가론을 제시할 필요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 사실상 유격대 또한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군인 조직으로서, 일면 선군정치와 같은 현대 북한의 지배구조는 유격대국가의 완성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수사에 불과하긴 하지만, 김일성이 영생불멸의 사령관으로서 북한에 존재하고, 그 지배집단과 지배이념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유격대국가는 여전히 굳건하게 북한에 자리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V. 맺음말

통상적으로 집짓기는 적잖은 고통을 수반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건축 설계도를 작성하고, 양질의 자재를 확보하며, 풍부한 노동력을 투입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집짓기는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와다는 현대 북한의 독특한 체제의 형성 과정을 집짓기의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 우선 와다는 북한사회가 기반을 둔 역사적 ‘보편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이란, 1945년부터 1961년에 걸쳐 완성된 북한의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지칭한다. 북한은 이 같은 국가사회주의라는 기초 구조물 위에 ‘유격대국가’라는 2차적 구조물을 축조했는데, 이는 1960년대 후반의 “혁명적 대사변”에 대비한 체제로서 구축된 것이었다. 이후 1970-80년대 국가사회주의의 근간 위에 수립된 유격대국가라는 건축물 위에는 극장국가, 가족국가, 전통적 국가 등과 같은 국가디자인들

이 ‘간판’처럼 내걸렸다.

와다는 북한의 지난 과거 역사를 집짓기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 또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집짓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5년, 와다는 자신의 글을 통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축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글에서 ‘동북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 타이완, 러시아, 남북한, 일본, 미국을 지칭하며, 동남아시아와 APEC과의 연결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열린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와다는 “동북아시아가 평화적으로 협력하면 세계가 평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함과 동시에, 한반도가 그것의 가교이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¹⁾ 최근 와다는 자신의 학술활동 전반을 회고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위와 같은 20년 전의 동북아 지역주의 유토피아 구상을 여전히 굳건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¹²⁾

평자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에서 와다 하루끼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가장 많이 투영된 부분은 마지막 9장 <격변 속의 북한(2000~12)>의 앞부분에 제시된 몇 개의 절들이었다. 이 절들은 21세기 초반 김정일 정권 하의 북한이 러시아, 남한, 미국, 일본 등과 매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와다는 2000년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큰 전환”이었다고 보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높게 평가한다(268쪽). 또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가 좌절된 순간을 묘사하며, “불행하게도” 고어가 부시에게 패배했다고 안타까워한다(270쪽).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북일교섭이 좌절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일

11) 와다 하루끼,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조선반도,” p.50.

12) 와다 하루끼·남기정, “유토피아로서 지역주의와 역사가의 임무,” 『역사비평』 109호, 2014.

본의 약속 파기를 “배신적 행위”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같은 감정의 표출은 아마도 자기 학문의 궁극적 실천 목표인 한반도 문제해결을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평화의 집 건축의 기회가 좌절된 데에서 온 안타까움의 표현일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노학자의 안타까움과 분노의 표출을 지켜보며, 여전히 식지 않은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신념과 희망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이의 좌절에 분노한다. 과연 그의 생애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자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저술 활동의 다음 편 또한 기대해 본다.

김태우(Kim, Tae-Woo)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현대사, 북한사, 평화사이다.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 논저로는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창비: 2013),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아카넷, 2013)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Limited War, Unlimited Targets: U.S. Air Force Bombing of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등이 있다.

원고 집필요령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필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필자명, 영문요약문, key words, 필자 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4.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논문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6.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7.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8.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년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298~299.
9.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1>, <그림 1>)를 부여하고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10.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1993), pp.20~28.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p.20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3~36.
- 최중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3~36.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서울: 일신사, 1994), p.15.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pp.6~51.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6), pp.3~36.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247.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10~15.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 청소년들," 『조선일보』(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 url을 명시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 웹페이지 내에서의 인용위치를 명시하는 것 등은 불필요

11.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 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p.22.
 - Suh, *Kim Il Sung*, p.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p.270.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577.

12. 참고문헌 작성

- (1) 일반적으로 국문, 영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에서의 심표 대신 마침표가 사용되고 괄호가 제거된다.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2행부터는 들여짜기를 해야 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pp.107~128.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575~583.

『통일과평화』 윤리규약

I. 저자(투고자) 연구윤리와 책임

1. (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

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한다.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7. (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III.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1.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안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IV. 윤리위원회와 제재

1.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4. (연구윤리규정 위반내용 공개)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